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본 자료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2024학년도 EBS 연계 교재들에 나온 지문과 관련된 평가원, 교육청, LEET, PEET, MDEET의 지문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문제편에는 주제와 관련된 평가원, 교육청, LEET, MDEET 지문과 문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1. 정부의 개입

- ① 조세의 목표와 조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 ② 빈곤의 기준과 조세 제도를 활용한 부의 재분배 정책
- ③ 시장 집중도 지표
- ④ (가) 시장 실패의 원인인 외부 효과
(나) 공공재의 특징과 시장 실패

2. 환율과 국제 수지

- ① 국제 수지의 이해와 활용
- ② 환율 모형과 작동 원리

3. 경제 위기의 원인과 대처 방안

- ① 대공황의 원인과 경제 정책
- ② 전통적인 신용 증개와 그림자 금융

4. 투자와 금융 상품

- ① 이익률과 레버리지 효과
- ② 채권의 발행 및 가격 결정 방식

5. 기타

- ①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 거리

① 조세의 목표와 조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록 270p

(가)

향후 노령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연금이나 건강 보험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GDP 대비 정부 지출의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은 비용 상승 문제에 대처하는 데는 조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조세의 목적은 정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④ 조달하는 데 있다. 조세 제도를 고안할 때는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고려된다.

일정한 수입을 징수하면서도 이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세제가 효율적이다. 세금은 경제적 순순실과 조세 행정 비용을 초래한다. 경제적 순순실과 조세 행정 비용이 적을수록 세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경제적 순순실은 조세로 인해 바뀐 경제적 유인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이다. 즉 조세가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경제적 순순실이다. 가령 A, B 두 사람이 각각 피자 한 판을 소비해 얻는 효용이 가격보다 커서 소비자 잉여^{*}가 A에게는 3,000원, B에게는 1,000원이 발생한다고 할 때, 정부가 피자 한 판에 2,000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피자 가격이 2,000원 오른다고 하자. 그러면 A와 달리 B는 피자 구매 의사를 ⑤ 철회해 소비자 잉여의 합이 4,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소한다. 이 경우 세금 징수액보다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금액이 1,000원 많으므로 1,000원의 경제적 순순실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조세의 부과는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켜 경제적 순순실을 초래할 수 있는데, 생산자 잉여^{*}도 감소시켜 경제적 순순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 행정 비용에는 납세자가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치르는 비용과 정부가 세법을 집행하는 데 투입하는 자원 등이 포함된다. 소득 금액에 따라 여러 단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세율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의해 조세 행정 비용이 클 것이다. 세율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 행정 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조세의 공평성은 조세 부담을 누가 어떻게 나누어 짊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조세의 공평성에서는 조세 원칙으로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중요하다. 편익 원칙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와 서비스를 통해 얻는 편익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차별적으로 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편익 원칙에 근거하여,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공공 서비스에서 더 큰 편익을 누리므로 세금을 더 내야 공평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편익 원칙을 적용하면 공공재가 사적 재화와 비슷해진다. 한편 능력 원칙은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 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서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의 두 개념이 도출된다. 수직적 공평성은 세금 부담 능력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수평적 공평성은 세금 부담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은 세금도 비슷하게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널리 수용되고 있지만, 이 개념들을 이용하여 조세 제도를 평가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떤 두 사람의 능력이 비슷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기 때문이다.

세제의 중요한 목표가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점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목표는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세법 개정안 중에는 효율성을 증진하는 대신 공평성을 희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공평성을 증진하지만 효율성은 ⑥ 저해하는 제안도 있다. 사람들이 조세 정책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것도 사람에 따라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해 서로 다른 비중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잉여: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을 뺀 차액.

*생산자 잉여: 생산자가 상품을 시장에 판매할 때 얻는 수입이 해당 상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생산 비용보다 커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잉여.

(나)

모든 정부는 도로, 교육, 국방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하여 여러 세원으로부터 조세를 거둔다. 세원은 조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제 요소 혹은 경제 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 혹은 부가 가치가 세원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을 사고파는 행위나 소유권을 등록하는 행위 같은 것도 세원이 될 수 있다.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세원을 통해 징수되는 조세는 시장에서 자원이 ⑦ 배분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자원 배분에 대한 결정은 대부분 조세 부담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조세의 부과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령 어떤 지방 정부가 아이스크림 축제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⑧ 아이스크림 구입자에게 개당 5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므로 공급자들의 경제적 유인에는 변화가 없어 공급량이 변화하지 않는다. 반면에 세금 부과로 아이스크림의 실질적인 구입 가격이 상승하므로 각 가격 수준에서 구입자들의 희망 구입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균형 거래량이 감소해 아이스크림 공급자들이 받는 가격도 하락한다. 세금 부과 전의 아이스크림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세금 부과로 공급자들이 아이스크림 하나당 980원의 수입을 거두게 된다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1,030원이 된다. 그렇다면 ⑨ 아이스크림 공급자에게 5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세금이 공급자에게 부과되므로 수요량은 변화가 없는 반면 공급자는 세금 때문에 아이스크림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한다. 이는 공급량의 감소로 이어져 균형 거래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구입자가 내는 가격이 1,030원이 되면, 공급자가 세금을 내고 거두는 수입은 980원이 된다. 이 사례들은 모두 세금에 의해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그 재화의 구입자와 공급자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 세금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공급자들은 가격 변화에 ⑩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구입자들은 그렇지 않은 시장은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시장이다. 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지만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절댓값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보다 커서 그 기울기가 가파르다. 이 시장에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므로 세금 부담이 작아 소비자 잉여보다 생산자 잉여가 감소되는 폭이 작다. 반면 구입자들이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구입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수요는 매우 탄력적인 시장에 세금이 부과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지만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해 소비자 잉여보다 생산자 잉여가 감소되는 폭이 크다. 따라서 공급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을 파악할 수 있다. 수요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크다.

1. (가), (나)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묻고 답하는 형식을 활용하여 조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병렬적 구성을 통해 조세 부과 시 고려되는 주요 원칙들을 소개하고 있다.
- ③ (가), (나) 모두 구체적 상황을 가정하여 조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가), (나) 모두 대비의 방식을 사용하여 조세 관련 주요 개념들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 특정 기준에 따른 분류를 통해 조세에 관한 여러 현상을 유형화하고 있다.

2. (가), (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령 인구의 증가는 GDP 대비 정부 지출의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② 조세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법을 개정할 때 조세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 ③ 재산 외에도 재산을 사고팔거나 재산의 소유권을 등록하는 행위도 세원이 될 수 있다.
- ④ 조세 부담은 민간 부문에서 자원의 배분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 ⑤ 편익 원칙은 공공재의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율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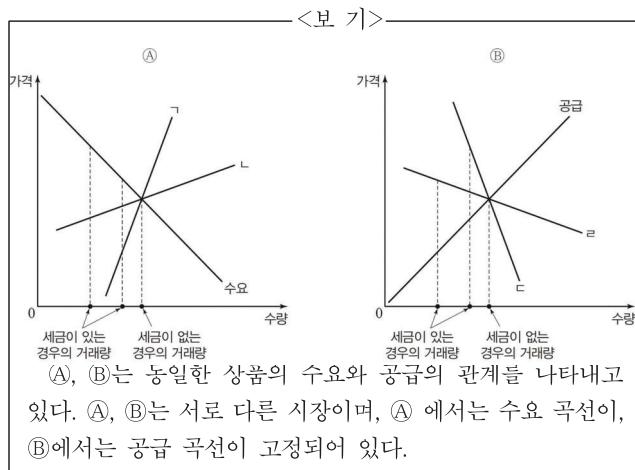
3. (가)와 <보기>를 함께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경제학자들은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소득세에 대해 설명한다. 평균 세율은 세금 총액을 소득 총액으로 나눈 것이고, 한계 세율은 소득 증가액에 대한 세금 증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 원까지는 세율이 20%이고 5,00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50%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자. 이 경우 소득이 6,000만 원인 사람은 1,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사람의 평균 세율은 25%이지만, 한계 세율은 50%이다. 세금 납부로 인한 납세자의 회생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데는 평균 세율이 더 적합하다. 그러나 세제가 경제적 유인을 어느 정도 왜곡시키는지 알아보는 데는 한계 세율이 더 의미 있는 개념이다. 한계 세율을 단일 세율로 고정하는 것은 세율의 단순화에 기여한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한계 세율을 적용하는 평률세를 시행하고 있다.

- ① 한계 세율을 높이면 소득세 부과로 초래되는 경제적 순손실이 적어져 조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군.
- ② 연 소득이 동일한 사람들에게 평균 세율이 같도록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평적 공평성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③ 소득이 많이 증가할수록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평률세의 특징은 조세 원칙의 능력 원칙과 관련이 있겠군.
- ④ 소득 구간을 여러 개로 나누고 소득이 높은 구간일수록 한계 세율을 높게 정하는 것은 수직적 공평성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⑤ 평률세를 시행하면 세법 준수를 위한 납세자의 비용과 세법 집행을 위한 정부의 비용을 줄여 조세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군.

4. (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에서 세금의 부과는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제적 순순실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 ② Ⓢ에서 공급 곡선이 ㄱ일 때보다 ㄴ일 때 구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커서 세금 부과로 감소하는 소비자 잉여의 폭이 크다.
- ③ Ⓢ에서 공급 곡선이 ㄱ일 때보다 ㄴ일 때 공급자가 상품의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공급자가 구입자들로부터 받는 가격이 더 작은 폭으로 하락한다.
- ④ Ⓣ에서 수요 곡선이 ㄷ일 때 수요 곡선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이 작다면 공급자가 구입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 ⑤ Ⓣ에서 수요 곡선이 ㄹ일 때 공급 곡선보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이 작다면 세금 부과로 인해 감소하는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보다 많다.

5.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의 경우는 ㉡의 경우와 달리 조세가 부과되자마자 아이스크림 공급량이 줄어든다.
- ② ㉡의 경우는 ㉠의 경우와 달리 조세가 부과되자마자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 ③ ㉠의 경우보다 ㉡의 경우에 구입자가 내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
- ④ ㉡의 경우보다 ㉠의 경우에 공급자가 동일한 수량의 아이스크림을 팔아 거두는 수입이 더 많다.
- ⑤ ㉠, ㉡의 경우 모두 구입자와 공급자가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6.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힘을 써 도와줌.
- ② Ⓜ: 이미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함.
- ③ Ⓝ: 막아서 못 하도록 해침.
- ④ Ⓞ: 뜻깊이 별려 나눔.
- ⑤ Ⓠ: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영향을 받음.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8.03.(고1)

조세는 국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주체인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이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를 강제로 부과하다 보니 경제 주체의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적 순순실을 초래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공평하지 못해 불만을 야기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⑦ 조세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적게 구매하기 때문에 상품을 통해 얻는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자가 상품을 팔아서 얻는 이윤도 줄어들게 된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는 편익이 줄어드는 것을 경제적 순순실이라고 하는데 조세로 인하여 경제적 순순실이 생기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이처럼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적 순순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조세를 부과해야 조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⑧ 조세의 공평성은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조세의 공평성이 확보되면 조세 부과의 형평성이 높아져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있다. 편익 원칙은 조세를 통해 제공되는 도로나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저항이 크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재의 사용량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조세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능력 원칙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한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조세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능력 원칙은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나뉜다.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정 세금을 내야 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나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시행하기도 한다.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나 재산이 같을 경우 세금도 같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수치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 내야 하는 세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가 다르면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에 차이가 생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제 제도를 통해 조세 부담 능력이 적은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한다.

* 편익 : 편리하고 유익함.

* 공공재 :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두 입장을 비교, 분석한 후 이를 결충하고 있다.
- ② 대상을 기준에 따라 구분한 뒤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의 개념을 그와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소개하고 있다.
- ④ 통념을 반박하며 대상이 가진 속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발달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8. ⑦과 ⑧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은 조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 ② ⑧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⑦은 ⑧과 달리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 ④ ⑧은 ⑦과 달리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 ⑤ ⑦과 ⑧은 모두 조세를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건이다.

9. <보기>는 경제 수업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선생님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한 학생을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 여러분, 아래 표는 소득을 기준으로, A, B, C의 세금 공제 내역을 가정한 것입니다. 표를 보고 조세의 공평성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각자 분석해 볼까요?

구분	소득 (만 원)	세율 (%)	공제액 (만 원)	납부액 (만 원)	공제 항목
A	3,000	5	0	150	공제 없음
B	3,000	5	100	50	부양가족 2인
C	4,000	10	100	300	부양가족 2인

성근 : A와 달리 B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성이 약화되고 있어요. ━━

수지 : B가 A와 달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것은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 것이네요. ━━

현우 : B와 C의 납부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편익 원칙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이에요. ━━

유미 : B의 세율이 5%이고, C의 세율이 10%인 것은 수직적 공평을 위한 누진세가 적용된 결과겠네요. ━━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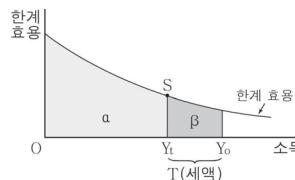
[10~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3.(고3)

세원이란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인데, 소득은 대표적인 세원 중 하나이다. 조세를 부과할 때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세원 전체가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에는 ①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총소득 중 일부를 공제^{*}한 뒤에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총소득에서 공제를 한 뒤,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과세 표준이라 한다. 그리고 납세 부담액, 즉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②산출된다.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세율은 한계 세율이다. 한계 세율이란 세액의 증가분이 과세 표준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세액의 증가분을 과세 표준의 증가분으로 나눈 값이다. 이 밖에도 세율에는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눈 값인 평균 세율, 세액을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인 실효 세율 등이 있다.

[A] 다음 예를 통해 세율에 대해 이해해 보자. 소득세의 세율이 과세 표준 금액 1천만 원 이하는 10%, 1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는 20%라 하자. 이처럼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까닭은 소득에 대응하는 세율을 일일이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과세 표준 금액이 3천만 원인 사람의 세액은 ‘1천만 원 × 0.1(10%) + 2천만 원 × 0.2(20%) = 5백만 원’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평균 세율은 약 16.7%(5백만 원 / 3천만 원)가 된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세율 구조가 결정된다.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누진 세율 구조라고 한다. 그런데 누진 세율 구조가 아니더라도 고소득일수록 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율 구조는 평균 세율의 증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면 비례 세율 구조, 평균 세율이 오히려 감소하면 역진 세율 구조, 함께 증가하면 누진 세율 구조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공리주의자 밀은 조세 부담이 개인의 소득 감소를 유발하므로 세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희생, 즉 효용의 손실이 균등해야 공평하다고 보았다. 이를 균등 희생 원리라고 하는데, 밀의 이러한 주장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 누진 세율 구조를 ③옹호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여기서 희생이란 세액 자체가 아니라 납세로 인한 총효용의 감소분이다. 그런데 밀은 균등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논하지 않았다. 이에 후대 학자들은 균등의 의미를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고 효용은 측정 가능하며 소득 증가에 따라 한계 효용이 제감한다는 가정에 ④입각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균등한 희생과 관련 있는 세 원칙은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소득의 한계 효용이란 소득이 1단위 증가했을 때 개인이 얻게 되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림>에서 원래 소득이 Y_o 였던 사람이 세액 T 를 내면 세후 소득이 Y_s 로 줄어든다. 이때 희생된 효용의 절대량은 면적 β 로 나타낼 수 있다.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각 개인들이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떠안게 되는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균등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원칙 아래에서는 고소득자의 세액이 저소득자의 세액보다 커야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누진 세율 구조라고 ④단정하기 어렵다. 절대 희생 균등 원칙 아래에서는 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계 효용은 1% 이상 감소할 정도로 한계 효용 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져야만 누진 세율 구조가 ④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에서는 모든 개인이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누진 세율 구조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부터 얻는 총효용에서 납세로 인한 효용의 상실, 즉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 이는 <그림>에서 면적 β 를 면적 $a+\beta$ 로 나눈 값인 효용의 희생 비율이 모두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원칙 아래에서 누진 세율 구조는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는 모양이기만 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반드시 가파른 기울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에서 만약 한계 효용 곡선의 기울기가 0이라면 비례 세율 구조가 될 것이다.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후에 얻는 한계 효용의 크기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만 한다. <그림>에서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계 효용은 선분 YS 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이 길이가 모든 사람에게 같아지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 과세 이전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동일한 효용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을 적용하면 고소득층일수록 매우 무거운 조세 부담이 요구된다.

* 공제 : 받을 뜻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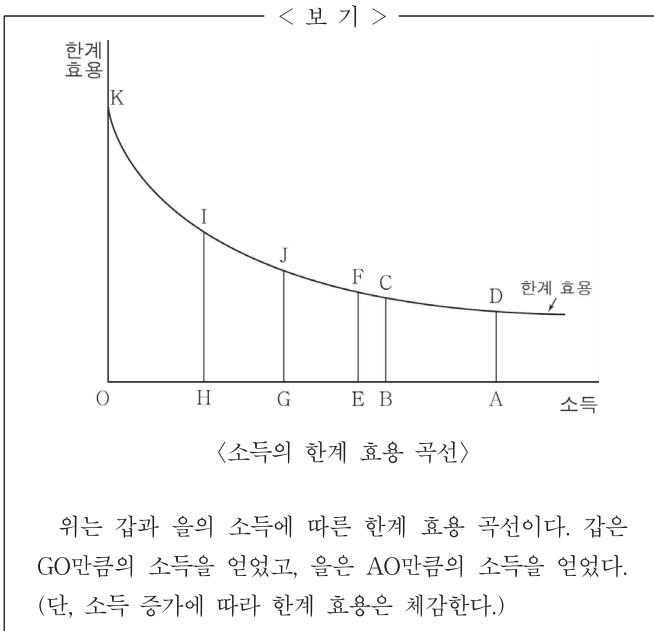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세의 본질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조세 부과의 효율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누진적 조세 부담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조세 부담의 공평성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며 조세 행정의 목적을 효율적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④ 조세를 강제 징수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어 세율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조세 관련 용어들의 개념을 제시하고 조세 부담에서의 균등한 희생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다.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평균 세율보다 실효 세율이 더 낮다.
- ② 납세 부담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다.
- ③ 대다수 국가가 소득세에 비례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 ④ 세액 산출 시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⑤ 누진 세율 구조인지의 여부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증가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만약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갑과 을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 ②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과 을이 내야 할 세액이 각각 GH와 AB라면 GH와 GH의 면적과 ABCD의 면적이 같아지도록 GH와 AB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 ③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을의 효용의 희생 비율이 AEFD / AOKD일 때에 갑의 효용의 희생 비율과 동일해진다면 을에게 AE만큼의 세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 ④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이 내야 할 세액이 GH이고 을이 내야 할 세액이 AB일 경우 GH를 GO로 나눈 값과 AB를 AO로 나눈 값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
- ⑤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의 세액이 GH라면 을의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계 효용이 HI가 되도록 을에게 AH만큼의 세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1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일한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낮은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② 부양가족의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③ 가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만 경제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탈세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④ 동일한 소득이라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14.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소득세 제도			
과세 표준	(가)	(나)	(다)
100만 원	10만 원	30만 원	10만 원
200만 원	20만 원	60만 원	30만 원
300만 원	30만 원	90만 원	60만 원

위에 제시된 표는 어떤 국가에서 검토되고 있는 소득세 제도 (가)~(다)와 그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다. (단, 과세 표준은 위의 3가지 경우만 있다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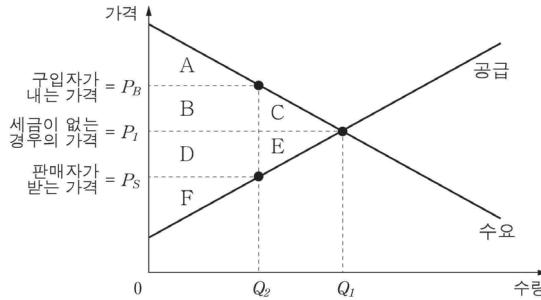
- ① (나)는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율 구조이다.
- ② (다)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는 역진 세율 구조이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모든 과세 표준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세율 구조이다.
- ④ (나), (다)와 달리 (가)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는 세율 구조이다.
- ⑤ (가), (나)와 달리 (다)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세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세율 구조이다.

15. ① ~ ⑤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계산하여 냄.
- ② ②: 두둔하고 편들어 지킴.
- ③ ③: 어떤 사실이나 주장 따위에 근거를 두어 그 입장에 섰.
- ④ ④: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함.
- ⑤ ⑤: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5.10B.(고3)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득이 감소하는 양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리프>

<그리프>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 점에서의 균형 가격은 P_1 이고 균형 거래량은 Q_1 이다. 균형 가격 P_1 , 균형 거래량 Q_1 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해 얻게 되는 이득이 극대화된다. <그리프>의 수요 곡선은 수요자의 지불 용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 아래, 균형 가격 P_1 의 가격 수준 위에 있는 $A+B+C$ 이다.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은 생산자의 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균형 가격 P_1 의 가격 수준 아래, 공급 곡선 위에 있는 $D+E+F$ 이다. 이때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A+B+C+D+E+F$ 이다.

<그리프>에서 ⑦ 세금이 $\overline{P_S P_B}$ 만큼 부과되면, 시장은 원래의 균형 상태를 벗어난다.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P_1 에서 P_B 로 상승하여 소비자 잉여는 A 가 된다.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P_1 에서 P_S 로 낮아져 F 가 생산자 잉여가 되고, 거래량은 Q_1 에서 Q_2 로 감소한다. $\overline{P_S P_B}$ 에 Q_2 를 곱한 값인 $B+D$ 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된다. 이때 B 는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 D 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세이다. 세금 부과 후의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조세 수입의 합인 $A+B+D+F$ 이다. 세금 부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세금 부과로 인해 총 잉여가 $C+E$ 만큼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C+E$ 는 총 잉여의 감소분으로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한다.

세금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달라진다.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한 지표이다.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과 공급량이 큰 폭으로 변할 때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 말하는데, 대체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고 기울기가 급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작다. 수요 곡선과 세금의 크기는 동일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반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 공급 곡선과 세금의 크기가 동일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세금 부과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경제적 논쟁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금 부과가 커다란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지지한다. 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을 늘리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라도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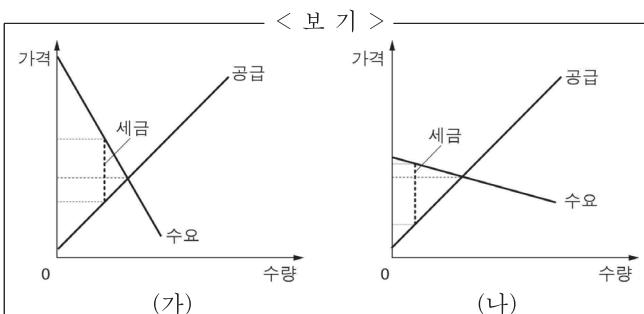
* 소비자 잉여 : 구입자의 지불 용의 금액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 생산자 잉여 :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의 판매 용의 금액을 뺀 나머지.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세의 개념과 의미가 변천해 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조세의 유형과 특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 ③ 조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조세 부과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 ⑤ 조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산자 임여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 ② 정부의 조세 수입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 ③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 ④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 ⑤ (나)의 수요는 (가)의 수요보다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부가 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비에 비례하여 세금 부담의 정도가 높아진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가 가치세로 인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은 크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에 따른 수요량 변화가 크지 않은 식료품, 의약품 등의 생활필수품에서는 부가 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최근 부가 가치세 면제 범위 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①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면제해 준 것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자 임여가 감소하지 않게 한 것이겠군.
- ②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들까지 부가 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면제 범위를 넓히면 그 상품들의 생산자 임여가 감소하겠군.
- ③ 부가 가치세의 부과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겠군.
- ④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단일 세율을 적용해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에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면 그 상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 정부의 조세 수입은 감소하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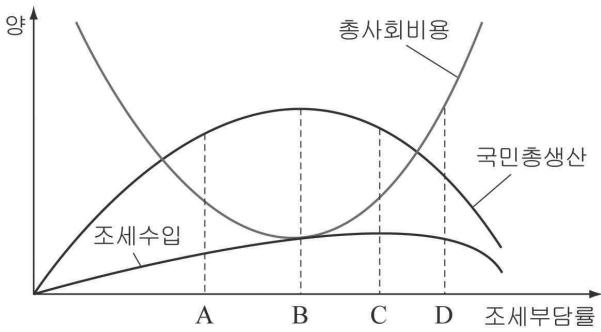
19. ⑦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짹지는 것은?

- <보기>
- ㄱ.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하여 얻게 되는 이득이 줄어들게 된다.
 - ㄴ. 시장 거래량이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들게 된다.
 - ㄷ. 구입자가 내는 가격이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가격보다 낮아진다.
 - ㄹ. 정부의 조세 수입이 소비자 임여와 생산자 임여의 감소분의 합보다 커진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09.04B.(고3)

사회 복지 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들에게 조세를 부과하는데, 국민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부담률이 높을수록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그러나 일정한 조세부담률 이상부터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B점까지는 조세부담률을 높일수록 국민총생산은 증가한다. 국가가 조세수입으로 각종의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이 정도의 조세부담률에서는 국민총생산을 줄일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B점을 넘어서면 국민총생산은 줄어들 수 있다. 높은 조세부담률에서 사람들의 근로 동기나 저축 동기가 약해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 투자가 줄어들고, 기업들도 노동 비용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한편 조세수입은 국민총생산이 증가할수록 과세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률이 B점을 지나 국민총생산은 줄어들어도 C점까지는 조세 수입이 증가한다. B점을 지나면 국민총생산이 줄어 과세 대상은 줄어들지만 조세부담률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C점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조세수입도 줄어들게 된다. 국민총생산이 크게 떨어지고 각종 절세나 탈세의 방법으로 조세를 기피하려는 노력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총생산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의 재원도 줄어들어 경제와 복지 둘 다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총사회비용도 조세수입과 국민총생산에 따라 변화한다. 총사회비용은 국민총생산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비용 부분과, 조세의 비효율로 인해 생기는 국민총생산의 감소 부분을 합쳐서 구성된다.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조세수입이 적어 총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를 못해 총생산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총사회비용은 커져서 비효율적이게 된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점점 높아지면 조세의 비효율성이 줄어들어 총사회비용이 줄어들다가 B점에서 최저가 된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된다. 왜냐하면, 조세의 비효율성이 다시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가? 이것은 국가들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들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국가와 옹호하는

국가가 서로 정책이 다른 것처럼 조세부담률도 다르기 때문이다. 적정 조세부담률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를 결정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각 국가들에서의 적정한 조세부담률은 상당 부분 이념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 윗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 ① 조세수입은 사회 복지 정책의 재원이 될 수 있다.
- ②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적정한 조세부담률은 없다.
- ③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④ 조세수입은 국민총생산과 조세부담률에 의해 결정된다.
- ⑤ 국민총생산은 사람들의 근로, 저축 등기에 영향을 받는다.

21. 윗글로 보아 <보기>의 A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A국은 지난 20여 년간 고도로 발전된 사회 복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하고 있다. 높은 조세부담률이 총생산 감소의 원인임을 알면서도, 사회 복지 정책을 축소할 수 없어 조세부담률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

- ① 조세부담률이 비효율적일 것이다.
- ② 복지국가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 ③ 경제와 복지 둘 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④ 국민들이 조세를 기피하려는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
- ⑤ 조세부담률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경제적 여건이다.

22. <보기>는 두 집단의 주장이다. 각 집단에서 인식하고 있는 조세부담률의 현재 수준을 그래프에서 찾아 바르게 짹지는 것은?(단, 지문의 그래프를 이용할 것.)

<보기>
조세부담률을 낮추면,

- (a) 집단: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조세수입도 줄어들 것이므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 (b) 집단: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조세수입은 늘어날 것이므로 조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

	(a)	(b)
①	A	D
②	B	D
③	C	A
④	C	D
⑤	D	B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9.06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A] 정부가 볼펜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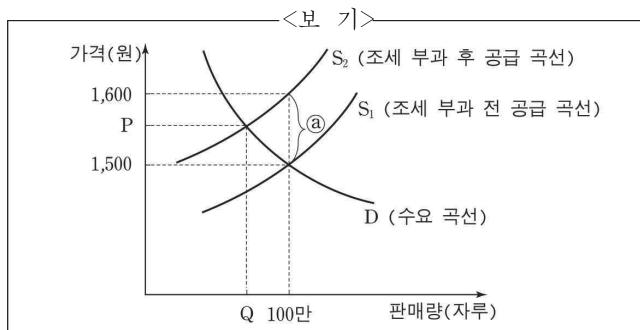
한편, 조세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①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②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23. ‘조세전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조세 부담 비중이 달라진다.
- ②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조세전가의 혜택을 누린다.
- ③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물품세의 단위당 조세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 ④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될 경우 결국 소비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 ⑤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상실된다.

24. [A]를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세 부과 후 소비자는 P를 자루당 가격으로 지불한다.
- ② 조세 부과 후 생산자는 ②를 자루당 조세액으로 납부한다.
- ③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면 공급 곡선 S_1 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 ④ 소비자의 자루당 세금 부담액은 P에서 1,500원을 뺀 것이다.
- ⑤ 조세 부과로 판매량이 100만 자루에서 Q로 줄어들게 된다.

25. ①, ②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 바나나 가격이 오르면 곤 오렌지를 구매하는 소비자
- ② ②: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구입을 쉽게 줄이는 소비자
- ③ ②: 상표와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샴푸를 구매하는 소비자
- ④ ②: 사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한 농장주
- ⑤ ②: 유행이 바뀌어 채고를 처분해야 하는 액세서리 생산자

② 빈곤의 기준과 조세 제도를 활용한 부의 재분배 정책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특 36p

빈곤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의 빈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그 사람의 소득과 비교한다. 특정인의 소득이 이보다 더 낮으면 그는 빈곤한 사람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을 빈곤선이라고 한다.

빈곤의 기준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절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라운트리 방식과 라이텐 방식이 있다. 라운트리 방식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식, 의복, 주택 등의 최저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책관화하여 조사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지출 금액을 최저 생계비로 설정한다. 이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와 그 절대적 수준을 알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생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개인의 신체적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존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지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라이텐 방식은 설문 조사를 통해 빈곤선을 결정한다. 사람들에게 각자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이 얼마인지를 묻고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빈곤선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라운트리 방식의 객관적 평가 방법과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절대적 관점에 의존하여 빈곤선을 산출하는 두 방식과 달리 상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찾아낼 수도 있다.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수준을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사람들의 소득이 빈곤선 아래에 있을 경우 빈곤한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빈곤에 상대적 성격이 있음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빈곤을 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평균적 소득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람들의 빈곤을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세 제도를 활용한다. 조세 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누진세 제도이다. 누진세 제도는 부유한 사람일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지게 하는 제도로, 조세 납부 전후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부유한 사람의 소득을 줄일 뿐 기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크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 또한 현실의 조세 제도 중 누진성이 있는 것은 소득세 등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부가 가치세의 경우 재화의 가격에 비례해서 커지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이라면 조세 제도의

실질적인 누진성은 매우 작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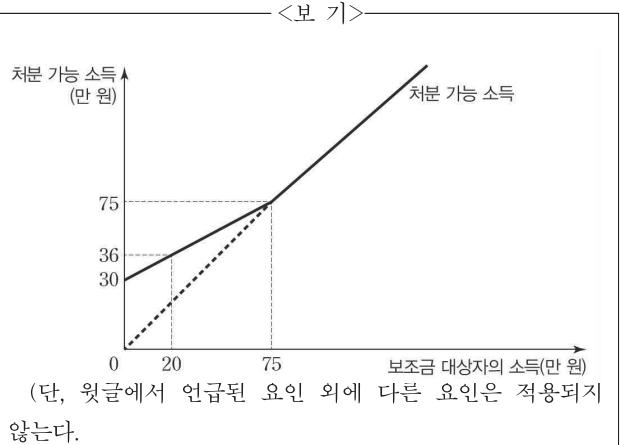
조세 제도를 활용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는 다른 방법으로 부(負)의 소득세 제도가 있다. 부의 소득세 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누진세 제도의 논리적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누진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데,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소득이 낮아질 때는 세율도 함께 낮아지므로 나중에는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정부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한 달 소득이 30만 원이면 한 달 소득이 0원인 사람에게는 한 달에 3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 갈수록 보조금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마다 보조금을 5천 원씩 줄여 간다고 하면 소득이 10만 원인 사람은 정부로부터 25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총금액인 처분 가능 소득은 한 달에 35만 원이 된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이 사람의 한 달 소득이 60만 원에 이르면 정부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스스로 번 소득이 한 달에 6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의 소득세 제도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떳떳하게 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누진세 제도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부의 소득세 제도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의 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빈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빈곤의 증상을 완화해 주는 데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조세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없다. 또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는 있지만,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를 줄여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가 줄어들면 오히려 빈곤한 사람들이 가지는 절대적인 부의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는 공평한 분배가 기난한 사람의 실제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은 문제 상황의 단기적 해결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1.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라운트리 방식에서는 최소한의 소비를 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조사하여 빈곤선을 산출한다.
- ② 라이덴 방식은 설문 조사에 따른 사람들의 객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더 정확한 빈곤선을 산출할 수 있다.
- ③ 라운트리 방식에서 빈곤선을 산출하는 경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의 의미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④ 부의 소득세 제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회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설정해야 한다.
- ⑤ 조세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은 빈곤한 상황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은 월 30만 원이다.
- ② 정부는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마다 보조금을 8천 원씩 줄인다.
- ③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75만 원이라면 더 이상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④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과 처분 가능 소득은 1:1의 비례 관계를 보인다.
- ⑤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30만 원일 때 받는 보조금은 9만 원이다.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11.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①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② 야기할 수 있다.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③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④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⑤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입장은 요사이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 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 기금으로 보고,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⑥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금을 일종의 신탁 기금으로 규정해 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⑦ 확충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 공공 부조: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

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다양하다.
- ② 공적 연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 사적 연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적 연금 제도를 시행한 뒤에는 공공 부조를 폐지해야 한다.
- ④ 공공 부조가 낳는 도덕적 해이는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 ⑤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 재분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공적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그중 상당수가 고용이 불안정한 30~4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 공적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자도 상당히 많아 누적 체납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 ① (가)를 보니, 공적 연금 기금을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겠군.
- ② (나)를 보니, 공적 연금 제도에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철저히 집행해야 하겠군.
- ③ (나)를 보니, 고의 체납으로 인해 공적 연금 제도에도 역선택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군.
- ④ (가)와 (나)를 보니, 적립될 공적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군.
- ⑤ (가)와 (나)를 보니,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공적 연금에 강제 가입시키는 제도를 완화해야 하겠군.

4.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본다.
- ② ㉠에서는 연금 기금을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수익률이 높은 대기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 ③ ㉠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연금 기금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
- ④ ㉡에서는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더욱 강하게 요구한다.
- ⑤ ㉡에서는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데 연금 기금을 직접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6.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 옴.
- ② Ⓜ: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 ③ Ⓝ: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 ④ Ⓞ: 무엇을 만들어서 이름.
- ⑤ Ⓠ: 늘리고 넓혀 충실하게 함.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09.(고1)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이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 사회에서 소득의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0분위 분배율’,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등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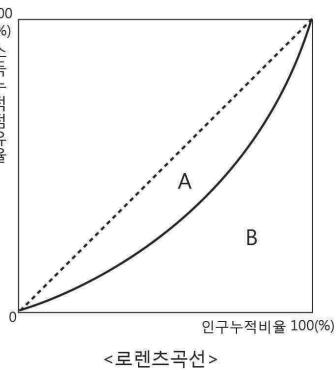
⑦ 10분위 분배율이란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들까지 일렬로 배열하여 10개의 계층으로 나눈 후, 하위 소득 계층 40%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소득 계층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때 나온 값이 작을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한다. 10분위 분배율은 측정이 간단하면서도 소득 분배 정책의 주 대상이 되는 하위 40% 소득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를 직접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상위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와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10분위 분배율은 소득 분배 측정 방법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된다.

계층별 소득 분배를 100%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는 지니계수이다. 로렌츠곡선은 정사각형의
상자의 가로축에는 인구누적
비율을, 세로축에는 소득누적
점유율을 표시한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로렌츠곡선은
그림의 점선과 같이 대각선
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
로렌츠곡선은 대각선보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로렌츠곡선이 평평하여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 분배를, 많이 구부러져 직각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나타낸다.

로렌츠곡선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그림으로 나타내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로렌츠곡선이 미국의 그것보다 더 대각선에 가깝게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미국보다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를 비교할 때는 나라의 수만큼 곡선을 그려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다. 또한 한 좌표 안에 여러 나라의 로렌츠곡선을 그리다 보면 서로 엇갈리면서 교차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는 나라별 소득 분배 상태를 비교하기가 어렵게 된다.

로렌츠곡선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⑧ 지니계수이다. 위의 그림처럼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은 로렌츠곡선을 기준으로 A와 B로 나누어진다. 지니계수는 A의 넓이를 A와 B를 합한 넓이로 나눈 값이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영(0)에 가까운 값을,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갖지만, 10분위

분배율과는 반대로 그 값이 클수록 더욱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듯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 상태를 숫자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 소득 계층의 소득 분배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로렌츠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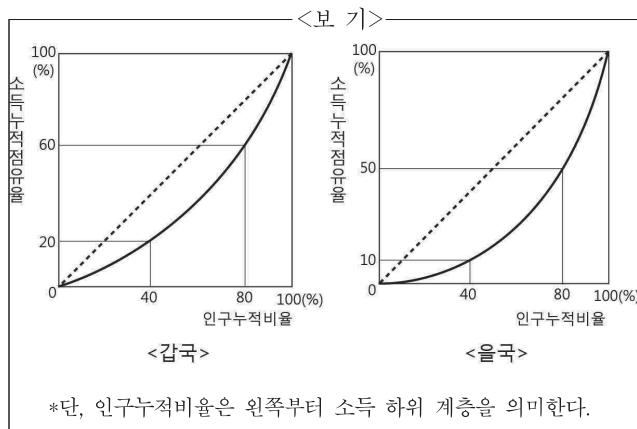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이론의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전개하고 있다.
- ④ 대립되는 이론을 접종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그림으로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특정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알 수 있다.
- ③ ㉡이 ㉠보다 여러 나라의 소득 분배 상태를 수치로 비교하기에 유리하다.
- ④ ㉡이 ㉠보다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 ⑤ ㉠의 값이 커질수록 ㉡과 ㉢의 값도 커진다.

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갑국의 소득 분배가 을국의 소득 분배보다 더 평등하다.
- ② 갑국의 지니계수가 을국의 지니계수보다 1에 더 가깝다.
- ③ 갑국보다 을국의 하위 4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더 낮다.
- ④ 갑국의 10분위 분배율이 을국의 10분위 분배율보다 더 크다.
- ⑤ 갑국의 경우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 LEET

'좋은 세금'의 기준과 관련하여 조세 이론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거론하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능력 혹은 자신이 받는 편익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공정한 세금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세는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을 왜곡하여 조세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각종 손실 또는 비용, 즉 초과 부담이라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세금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19세기 말 ① 헨리 조지가 제안했던 토지가치세는 이러한 기준에 잘 부합하는 세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토지 소유자의 임대소득 중에 자신의 노력이나 기여와는 무관한 불로소득이 많다면, 토지가치세를 통해 이를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용권과 처분권 그리고 수익권으로 구성되는데, 사용권과 처분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수익권 중 토지 개량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가 환수하여 사회 전체를 위해 사용자는 것이 토지가치세의 기본 취지이다. 조지는 토지가치세가 시행되면 다른 세금들을 없애도 될 정도로 충분한 세수를 올려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지가치세가 토지단일세라고도 지칭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토지단일세가 다른 세금들을 대체하여 초과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토지단일세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 영역에서는 자유 시장을 옹호했던 조지의 신념에 잘 부합하는 발상이었다.

토지가치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공정성에 부합하는 세금이다. 조세 이론은 수요자와 공급자 중 탄력도가 낮은 쪽에서 많은 납세 부담을 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토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곳으로 옮길 수 없다는 점에서 비탄력적이며 따라서 납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토지가치세는 공정한 세금이 된다. 한편 토지가치세는 초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기도 하다. 통상 어떤 재화나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는 거래량 감소, 가격 상승과 함께 초과 부담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과세하면 자동차 거래가 감소하고 부동산에 과세하면 지역 개발과 건축업을 위축시켜, 초과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토지가치세는 토지 공급을 줄이지 않아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토지가치세 도입에 따른 여타 세금의 축소가 초과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G7 대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세제 개편으로 인한 초과 부담의 감소 정도가 GDP의 14~50%에 이른다.

하지만 토지가치세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실화되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토지가치세는 이론적인 면에서 호소력이 있으나 현실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토지에 대한 세금이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토지에 대한 세금이어야 하나 이러한 토지는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토지 가치 상승분과 건물 가치 상승분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한다. 토지를 전물까지 포함하는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그에 과세하는 국가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전물을 제외한 토지의 가격이 별도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물을 제외한 토지의 가치 평가가 어렵다. 조세 저항도 문제가 된다.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 토지가치세를 도입하더라도 세율을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토지가치세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조지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도 적절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백 년 전에는 부의 불평등이 토지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커지만, 오늘날 전체 부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9세기 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토지 소유의 집중도 또한 조지의 시대에 비해 낮다. 따라서 토지가치세의 소득 불평등 해소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오늘날 토지가치세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외부 효과'와 관련이 깊다. 첨단산업 분야의 대기업들이 자리를 잡은 지역 주변에는 인구가 유입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지만 임대료가 급등하고 혼잡도 또한 커진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사유화하는 반면, 임대료 상승이나 혼잡비용 같은 손실은 지역민 전체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세율의 토지가치세가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외부 효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10. ⑦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량되지 않은 토지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은 불로소득으로 여겼다.
- ② 토지가치세로는 재정에 필요한 조세 수입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③ 토지의 처분권은 보장하되 사용권과 수익권에는 제약을 두자고 주장하였다.
- ④ 토지가치세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보았다.
- ⑤ 모든 경제 영역에서 시장 원리를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가 높은 세율의 토지가치세를 도입한다면, 외부 효과로 발생한 이익의 사유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자동차세의 인상이 자동차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자동차세는 세수 증대에 효과적일 것이다.
- ③ 토지가치세가 단일세가 되어 누진세인 근로소득세가 폐지된다면, 고임금 근로자가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 ④ 조지의 이론을 계승하는 학자라면,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 ⑤ 부동산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다면, 토지가치세의 도입으로 토지의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문제가 해소되어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X국은 요트 구매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사치세를 도입하여 부유층의 납세 부담을 늘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부자들은 요트 구매를 줄이고 지출의 대상을 바꾸었다. 반면 요트 생산 시설은 다른 시설로 바꾸기 어려웠고 요트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대량 해고되었다. 아울러 X국은 근로소득세를 인상해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였다.
- Y국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소비를 줄이려는 목표로 담배세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담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담배 소비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정부의 조세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 ①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토지가치세와 달리, X국의 '사치세' 및 Y국의 '담배세'는 소비자에게 부과되고 있군.
- ②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는 X국의 '사치세'와는 달리, Y국의 '담배세' 및 토지가치세는 초과 부담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군.
- ③ 과세 대상자 이외의 타인에게 납세 부담이 추가되는 X국의 '사치세'와 달리, Y국의 '담배세'와 토지가치세에서는 납세 부담이 과세 대상자에게 집중되는군.
- ④ 탄력도가 낮은 쪽에서 납세 부담을 지게 만들 수 있는 토지가치세와 달리, X국의 '사치세' 및 Y국의 '담배세'는 탄력도가 높은 쪽에서 납세 부담을 지게 하는군.
- ⑤ 조세 개편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X국의 '사치세' 및 Y국의 '담배세'와 달리, 토지가치세는 도입할 때 거둘 수 있는 경제 활성화 효과가 최근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군.

③ 시장 집중도 지표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특 2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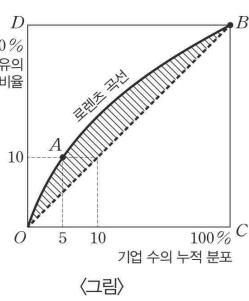
독과점은 1개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독점과 2개 이상의 소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과점을 합친 용어로서, 특정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시장 지배력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나 수량 등의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뜻하는데, 소수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진 시장은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시장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시장 집중도 지표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시장 집중도 지표로 HHI 지수, 지니 계수, CR가 있다.

HHI 지수는 시장 내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 수치를 각각 제곱하여 합한 값이다. 예를 들어 3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시장에서 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50%, 30%, 20%라면 HHI 지수는 각 기업의 시장 점유율 수치를 제곱한 값인 2500, 900, 400을 모두 합한 3800이 된다. HHI 지수를 바탕으로 시장 집중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2500을 초과하면 고집중 시장, 1500보다 크고 2500 이하이면 중집중 시장, 100보다 크고 1500 이하이면 저집중 시장, 100 이하이면 경쟁적인 시장으로 판단한다. HHI 지수는 정부의 기업 합병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합병한 후의 HHI 지수에 따라 합병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지수가 1200 미만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1200 이상 2500 미만이면서 결합 전보다 250 이상 증가하거나, 2500 이상이면서 결합 전보다 15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기업 합병이 금지된다.

한편 지니 계수를 통해 시장 집중도를 판단하기도 한다. 지니 계수는 일반적으로 소득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데, 기업 분포의 불균등도를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그림>에서 X축인 직선 OC는 기업 수의 누적 분포, Y축인 직선 OD는 시장 점유의 누적 비율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곡선 위의 한 점인 A의 값은 5%의 기업이 1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기업 수에 따른 시장 점유의 누적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곡선을 로렌츠 곡선이라 한다. 지니 계수는 삼각형 $\triangle OBC$ 의 넓이를 분모로, $X=Y$ 를 나타내는 직선 OB와 로렌츠 곡선 사이의 벚금 친 넓이를 분자로 하여 구한 값이므로 벚금 친 넓이가 넓을수록 지니 계수도 커진다. 모든 기업이 균등하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직선 OB와 같을 것이므로 지니 계수는 0이 되고, 한 개의 기업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아주 작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벚금 친 부분의 모양이 삼각형 $\triangle DBO$ 와 비슷해질

것이므로 지니 계수는 1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지니 계수는 시장에 참여한 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기업의 점유율이 같으면 값이 0이 되므로 지니 계수를 바탕으로 시장의 집중도를 파악할 때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수의 기업이 동일한 점유율로 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는 산업과 수많은 기업이 동일한 점유율을 차지한 채 경쟁하는 산업 모두 지니 계수가 0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CR라는 지표를 주로 활용하는데, 이는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상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합한 값이다. 예를 들어 CR_1 은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CR_3 은 상위 3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 합계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공정 거래 위원회는 CR_1 이 50% 이상이거나, CR_2 또는 CR_3 이 75%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단, 시장 지배적 기업의 판단은 시장 점유율 기준 이외에도 시장 진입 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기업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기업은 시장 지배적 기업에서 제외된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시장 지배력을 지닌 기업이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올바른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누적 비율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곡선 위의 한 점인 A의 값은 5%의 기업이 1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기업 수에 따른 시장 점유의 누적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곡선을 로렌츠 곡선이라 한다. 지니 계수는 삼각형 $\triangle OBC$ 의 넓이를 분모로, $X=Y$ 를 나타내는 직선 OB와 로렌츠 곡선 사이의 벚금 친 넓이를 분자로 하여 구한 값이므로 벚금 친 넓이가 넓을수록 지니 계수도 커진다. 모든 기업이 균등하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직선 OB와 같을 것이므로 지니 계수는 0이 되고, 한 개의 기업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아주 작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벚금 친 부분의 모양이 삼각형 $\triangle DBO$ 와 비슷해질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과점에는 1개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② 소수의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불완전 경쟁 시장이 형성된다.
- ③ 지니 계수가 클수록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로렌츠 곡선과 $X=Y$ 를 나타내는 직선 사이의 면적이 좁을수록 지니 계수는 작아진다.
- ⑤ 우리나라의 공정 거래 위원회는 점유율뿐 아니라 시장 진입 장벽 유무도 고려하여 시장 지배적 기업을 판단한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 국가에서 특정 품목을 판매하는 시장은 갑과 을이라는 두 기업만이 동일한 점유율을 차지한 상황에서 경쟁하고 있었다. 이후 새로운 기업 병이 시장에 참여하여 현재는 세 기업이 동일한 점유율을 차지한 상황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 세 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각각 30억 원이다.

- ① 기업 병이 시장에 참여한 이후 이 시장의 HHI 지수는 작아졌겠군.
- ② 이 시장의 지니 계수는 기업 병이 시장에 참여하기 전과 후가 동일하겠군.
- ③ 우리나라의 공정 거래 위원회는 세개의 기업을 모두 시장 지배적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겠군.
- ④ 하나의 기업이 시장에 더 참여하여 일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면 CR₃이 이전보다 작아지겠군.
- ⑤ 기업 병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기업 을이 기업 병의 점유율을 모두 차지하면, 로렌츠 곡선은 기업 병이 참여하기 전과 동일한 형태로 바뀌겠군.

3. <보기>는 우리나라의 특정 산업에서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거나 고르시오.

<보기>

기업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을 제곱한 값
A	30%	900
B	30%	900
C	20%	400
D	20%	400

- ⓐ 이 시장의 HHI 지수는 ()이므로, 이 시장은 (고집중 / 중집중 / 저집중 /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 ⓑ 정부는 기업 A와 기업 C의 합병을 (승인할 /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03A.(고2)

경제학에서는 한 재화나 서비스 등의 공급이 기업에 집중되는 양상에 따라 시장 구조를 크게 독점시장, 과점시장, 경쟁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할수록 독점시장에 가까워지고, 다수의 기업이 공급을 나누어 가질수록 경쟁시장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시장 구조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표 중의 하나가 바로 ‘시장집중률’이다. 시장집중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점유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⑦ 시장점유율이란 시장 안에서 특정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⑧ 비중을 의미하는데, 생산량,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Y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생산량 기준으로 측정한다면 ‘(Y 기업의 생산량/시장 내 모든 기업의 생산량의 총합) × 100’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시장점유율이 시장 내 한 기업의 비중을 나타내 주는 수치라면, ⑨ 시장집중률은 시장 내 일정 수의 상위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 주는 수치, 즉 일정 수의 상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값이다. 몇 개의 상위 기업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나라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3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값을, 미국에서는 상위 4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값을 시장집중률로 ⑩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산출된 시장집중률을 통해 시장 구조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시장집중률이 높으면 그 시장은 공급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독점시장으로 구분하고, 시장집중률이 낮으면 공급이 다수의 기업에 의해 분산되어 있는 경쟁시장으로 구분한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떤 산업에서의 시장집중률이 80% 이상이면 독점시장, 60% 이상 80% 미만이면 과점시장, 60% 미만이면 경쟁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장 집중률을 측정하는 ⑪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측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며 이에 대한 경제학적인 해석도 달라진다. 어느 시장의 시장집중률을 ‘생산량’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A, B, C 기업이 상위3대 기업이고 시장집중률이 80%로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는 D, E, F 기업이 상위 3대 기업이 되고 시장집중률이 60%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시장집중률은 시장 구조를 구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이며, 이를 통해 시장 내의 공급이 기업에 집중되는 양상을 ⑫ 파악해 볼 수 있다.

4.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구조의 변천사
- ② 시장집중률의 개념과 의의
- ③ 독점시장과 경쟁시장의 비교
- ④ 우리나라 시장점유율의 특성
- ⑤ 시장집중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우리나라 신발 시장의 가상 시장점유율(%)						
구분	(가)	(나)	(다)	(라)	(마)	합계
생산량	40	10	20	25	5	100
매출액	30	10	20	25	15	100

* 시장 구조의 구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준을 따름.
 *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 내의 기업은 5개만 존재한다고 가정함.

- ① 측정 기준을 바꾸더라도 이 시장의 시장집중률은 변하지 않는군.
- ②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시장은 과점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군.
- ③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나) 기업과 (마) 기업이 합병하여 현재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한다면 이 시장의 시장집중률은 높아지겠군.
- ④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집중률이 10 % 상승하면 이 시장은 과점시장에서 독점시장으로 변하겠군.
- ⑤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다) 기업과 (라)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지금의 두 배가 된다면 이 시장의 시장집중률은 낮아지겠군.

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통해 ㉡의 불확실성이 보완된다.
- ② ㉠은 ㉡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 ③ ㉠은 ㉡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 ④ ㉠은 ㉡의 상위 개념이 된다.
- ⑤ ㉠은 ㉡을 합산한 결과이다.

7.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 :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 ⓑⓑ :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차지하는 중요도
- ⓒⓒ : 작품, 의견, 제도 따위를 골라서 다루거나 뽑아 씀.
- ⓓⓓ : 어떤 상황의 가변적 요인
- ⓔⓔ :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읽.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11.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⑦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⑧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⑨ 폐해를 가려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⑩ 관건이다.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⑪ 획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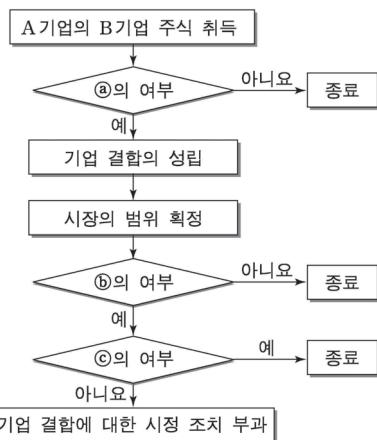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 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8. 윗글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② 기업 결합으로 얻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기업 결합을 통한 기업의 확장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기업 활동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는 소비자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⑤ 기업 결합의 순기능을 살리되 그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신중히 가려내야 한다.

9. 윗글에 나타난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3점]



- | | <u>ⓐ</u> | <u>ⓑ</u> | <u>ⓒ</u> |
|------------|----------|----------|----------|
| ① A 기업에 대한 | - | - | - |
| 지배 관계 형성 | - | - | - |
| ② A 기업에 대한 | - | - | - |
| 지배 관계 형성 | - | - | - |
| ③ B 기업에 대한 | - | - | - |
| 지배 관계 형성 | - | - | - |
| ④ B 기업에 대한 | - | - | - |
| 지배 관계 형성 | - | - | - |
| ⑤ B 기업에 대한 | - | - | - |
| 지배 관계 형성 | - | - | - |

10. <보기>는 어느 지역의 4가지 음료수 A~D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반응은?

<보기>				
우리나라 신발 시장의 가상 시장점유율(%)				
판매량 가격 인상	A의 판매량	B의 판매량	C의 판매량	D의 판매량
A 가격 10% 인상	20% ↓	15% ↑	5% ↑	변화 없음
B 가격 10% 인상	15% ↑	20% ↓	3% ↑	2% ↑
C 가격 10% 인상	3% ↑	2% ↑	20% ↓	15% ↑

* 이 지역에는 4개의 회사만이 각각 한 종류의 음료수를 생산하며, 이들 회사는 다른 음료수를 생산할 수 없다. (↑: 증가, ↓: 감소)

- ① A의 소비자들은 B보다 C를 대체재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는군.
 ② B와 동일 시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품은 A이군.
 ③ C의 가격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상품은 B이군.
 ④ A생산 회사와 D 생산 회사가 결합한다면 수평 결합으로 불가능성이 크군.
 ⑤ C생산 회사와 D 생산 회사가 결합한다면 혼합 결합으로 불가능성이 크군.

11. Ⓛ~ⓓ의 사전적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 ① ⓘ : 사라져 없어지게 함.
 ② ⓘ :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합부로 행사함.
 ③ ⓘ : 폐단으로 생기는 해.
 ④ ⓘ :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
 ⑤ ⓘ :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함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4.11.(고2)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독점 기업은 많은 부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독점 기업이 선택하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 못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양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이윤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량을 적당히 줄여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똑같은 조건하에 있는 시장이라도 독점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상품 생산량이 더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⑦ 완전 경쟁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경쟁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생산 수준은 완전 경쟁이 실현된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독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독점 기업이 이윤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상품 생산량을 스스로 줄이기 때문이다. 상품 생산량이 최적에 이를 때 사회 후생이 가장 커질 수 있다면, 독점 체제하의 사회 후생은 이보다 더 작을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상품 생산량이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사회 후생이 줄어드는 것을 독점이 가져다 주는 사회적 손실의 첫 번째 것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독점의 존재는 부(富)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독점 체제 하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독점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히 부가 편중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부호 가문의 재산 축적 과정을 보면 독점 이윤의 획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과점 체제에서 나온 막대한 이윤이 재벌의 급속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부의 편중은 사회적·정치적 권력의 집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정경유착이라고 부르는 사회적 병폐는 독점 시장을 그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은 독점 기업이 경쟁자의 등장을 막기 위해 진입 장벽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낭비적 지출이 상당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독점 기업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높은 진입 장벽을 쌓아 잠재적인 경쟁자가 감히 진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든다. 엄청난 돈을 써 이곳저곳에 광고를 한다거나, 관료들을 구워 삶기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로비 활동에 쏟아붓는 것은 모두 진입 장벽을 견고하게 만들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그런 돈과 노력을 비용 절감이나 품질 개선 같은 유용한 목적에 쏟아 부었다면 훨씬 더 생산적이었을 것이다. 단순히 진입 장벽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낭비된 자원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인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나아가 독점 기업은 경쟁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할 동기를 갖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기업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면, 기업은 마지막 남은 효율성까지 추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독점적 지위 덕분에 충분한 이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영자나 근로자 모두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독점 체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자도 없이 마음대로 시장을 요리할 수 있는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1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독점 기업은 생산량의 조절로 이윤을 추구한다.
- ② 상품 생산량이 많을수록 사회 후생이 높아진다.
- ③ 독점 체제가 가져온 부의 편중은 정경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④ 완전 경쟁 체제가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효율적이다.
- ⑤ 기업이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낭비적 측면이 강하다.

13. ㉠의 관점에서 <보기>의 ‘허생의 행위’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기>

서울에서 가장 큰 부자로부터 돈 만금을 손에 쥔 허생은 집에도 가지 않고 ‘안성은 경기와 호남의 갈림길이고 삼남의 요충지였다.’하면서 그 길로 안성에 거처를 정했다. 그런 후 시장의 과일이란 과일은 모두 거두어 샀다. 사는 대로 한정 없이 곳간에 저장해 두었다. 오래지 않아 나라 안의 과일은 동이 났다. 형편이 이렇게 되니 이번에는 과일 장수들이 허생에게 달려와 사들인 값의 몇 배로 사가게 되었다.

“허어, 겨우 만 냥으로 나라 살림을 기울게 할 수 있다니. 나라 경제의 규모를 알만하구나!”

허생은 이렇게 탄식했다.

과일을 다 처분한 다음 그는 칼, 호미, 무명, 명주, 솜 등을 모조리 사 가지고 제주도로 건너가서 그걸 팔아 이번에는 말총이란 말총은 모조리 사들였다.

“몇 해가 못 가서 나라 안 사람들은 머리를 싸매지 못하게 될게다.”

허생의 장담대로 얼마 안 가서 나라 안의 망건 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말총을 내다 파니 백만금이 되었다.

- ① 허생은 지나친 이윤 추구를 위해 상품을 독과점하고 있군.
- ② 허생은 조선의 교통 체제 혐의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군.
- ③ 허생은 제사를 중시하던 양반 사대부를 각성시키려 하는군.
- ④ 허생은 국제 무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군.
- ⑤ 허생은 거대 자본을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군.

14.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장을 절충하여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고 있다.
- ②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면서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사례의 비교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대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 ⑤ 대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15. 윗글의 글쓴이 A와 <보기>의 글쓴이 B가 나눈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최근 전력·천연 가스의 배급, 지방의 전기 통신 서비스, 수도 그리고 운송과 같이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이 대두되고 있다. 이 계획에 우리는 전면 반대한다.

얼마 전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물가가 폭등하고 국민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준 사례가 있었다. 오히려 민영화는 여러 유사한 회사의 가격 담합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예전의 독점 체제보다 국민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켰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공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법적인 독점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 ① A: 완전 경쟁 체제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② B: 물론 그렇지만, 국민의 실생활에 중요한 공기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보아야 합니다.
- ③ A: 공기업도 완전 경쟁이 없다면 비효율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④ B: 공기업을 효율성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공공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여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⑤ A: 공공성을 우선시하다 보면 기업의 이윤은 당연히 확보되는 것이지요.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2.04.

경제 분야의 게임이론이란 상호의존적 상황에서의 전략적 의사결정 결과를 밝히는 모형을 말한다. 특정 제품에 대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복점기업의 경우, 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호 의존적 상황이 된다. 복점기업의 게임은 의사결정이 동시적이냐, 순차적이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점기업의 게임 상황을 보자.

<표>		A사와	B사의	보수행렬	게임에서 얻는 이득을 보수라
(단위 : 원)					하는데, <표>는
구 분		B사			두 기업이 각각
A사	고가전략	(8억, 8억)	(1억, 10억)		얻게 될 보수를
	저가전략	(10억, 1억)	(4억, 4억)		나타낸 것이다.

(괄호 왼쪽은 A사, 오른쪽은 B사의 보수를 나타냄) A사와 B사는

제품 가격을 결정할 때, 고가전략과 저가전략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A사가 고가전략을 선택할 경우 B사는 고가전략에서 8억, 저가전략에서 10억의 보수를 얻게 되므로 저가전략이 유리하다. A사가 저가전략을 선택할 경우에도 B사는 저가전략이 유리하다. A사 역시 B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저가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처럼 상대방의 전략 선택 여하에 관계없이 각 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수를 가져다주는 전략을 우월전략이라 한다. 열핏 보면 8억씩의 보수를 얻을 수 있는 고가전략이 우월전략처럼 보이지만 상대의 전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두 기업은 저가전략에서 우월전략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기업은 최대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A사와 B사는 우월전략 균형 상태에서 4억씩의 보수를 얻기보다는 고가전략으로 담합함으로써 8억씩의 보수를 얻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두 기업이 현재 모두 8억씩의 보수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담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A사가 담합을 깨고 저가전략을 선택하면 일시적으로는 10억의 보수를 얻을 수 있지만, B사도 곧바로 저가전략으로선회할 것이므로, 이후로는 두 기업 모두 4억의 보수를 얻게 된다. 따라서 담합에서 이탈하는 것보다 담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한편 복점기업 중 한 기업이 먼저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반응하여 다른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순차게임이라 한다. 순차게임에서 기업은 의사결정 순서와 예상 결과를 나타낸 ⑦‘의사결정나무’의 분석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할 수도 있다. 가령, A사가 특정 지역에 매장을 개장하기로 먼저 결정하고 이어서 B사도 같은 지역에 진입하려 한다고 하자. 이때 A사는 대형 매장을 선택하는 경우와 소형 매장을 선택하는 경우에 따라 얻게 되는 수익률을 분석하여 매장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A사의 선택 여하에 따라 B사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사결정나무’의 분석을 통해 A사는 B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최대의 이윤을 얻는 매장 규모를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경쟁 관계의 복점기업들은 상호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 생산량, 시장 진입 등을 결정할 때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게임 상황에서 얻게 되는 이득을 보수라 한다.
- ② 순차게임에서는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③ 복점기업이란 특정 제품에 대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기업을 의미한다.
- ④ 복점기업들은 상호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때 게임이론을 활용한다.
- ⑤ 우월전략은 안정적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으로, 상대 기업의 전략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17.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음료를 생산하는 복점기업인 ‘갑’과 ‘을’은 저가전략을 유지하다가, 동시에 음료의 가격을 10%씩 인상하기로 담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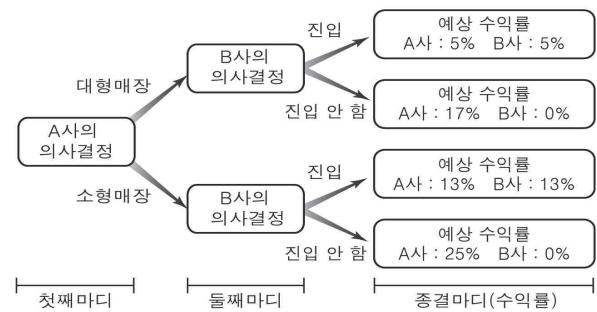
- ① ‘갑’과 ‘을’은 담합 이전에는 최대의 보수를 얻을 수 없었겠군.
- ② ‘갑’과 ‘을’은 담합을 통해 우월전략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겠군.
- ③ ‘갑’이 담합을 깨고 가격을 인하한다면 ‘을’도 곧 가격을 인하하겠군.
- ④ ‘갑’과 ‘을’은 고가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보수를 얻고자 했겠군.
- ⑤ 담합 이후 ‘갑’이 독단적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면 일시적으로는 ‘갑’의 보수가 증가하겠군.

18. <보기>는 ㉠의 사례이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A사는 ○○ 지역에 직판매장 개점을 결정하고 아래의 의사결정나무를 분석하여 매장의 규모를 선택할 예정이다.

(단, B사는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최소 10% 이상의 수익률을 낼 경우에만 매장을 개점한다고 가정함.)



- ① ‘A사’가 대형매장을 선택하고 ‘B사’가 시장에 진입하면 ‘B사’의 수익률은 ‘A사’보다 더 높을 것이다.
- ② ‘A사’가 소형매장을 선택하고 ‘B사’가 시장에 진입하면 ‘A사’의 수익률은 ‘B사’보다 더 높을 것이다.
- ③ ‘A사’가 소형매장을 선택한다면 ‘B사’의 진입 여부와 상관없이 ‘A사’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것이다.
- ④ ‘A사’가 대형매장을 선택한다면 ‘B사’는 최소 1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어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다.
- ⑤ ‘A사’가 선택한 매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B사’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A사’는 최소 1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④ (가) 외부 효과 (나) 공공재의 특징과 시장 실패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완 186p

(가)

외부의 간섭 없이 민간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때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외부 효과 때문이다.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①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 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편익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자와 판매자 이외의 제삼자에게까지 파급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고 있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가격 설정을 통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외부 효과 중에서도 어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제삼자에게 끼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② 외부 불경제라고 하고, 어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제삼자에게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③ 외부 경제라고 한다.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 중 정부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세금 부과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는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 활동은 그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적정량보다 많이 일어난다. 외부 불경제로 인해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경제 활동을 사회 적정량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해당 활동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공급자는 생산을 줄이게 되고, 제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여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해당 물건의 생산이 사회 적정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 감면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는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 활동은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적정량보다 적게 일어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생산 주체에게 사회가 받은 혜택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어, 해당 생산을 사회 적정 수준으로 늘리게 하는 것이다.

[A] 한편 경제학 이론인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외부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이해 당사자가 많지 않고 거래 비용이 충분히 적다면 국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에도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거래 비용이란 상품의 가격 외에 개인 간 거래와 협상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비용은 금전적인 비용뿐 아니라 노력 등 무형의 비용도 포함한다. 이해 당사자들이 거래나 협상을 하여 그 결과로 얻는 만족감이 거래 비용보다 크다면 국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에도 충분히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코즈의 정리의 한계점은 실현 가능성성이 낮다는 것이다. 외부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상황 가운데 상당수는 거래 비용이

높고, 이해 당사자들이 많거나 이해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나)

공공재란 공원이나 경찰 등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공재는 주로 국가에서 공급하는데,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니거나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학적으로 공공재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려면 배제성과 경합성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배제성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용할 수 없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배제성의 존재 여부가 다르다. 한편 경합성이란 어떤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빵을 사고 싶은 사람은 두 명인데 빵이 한 개라면 한 사람은 빵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빵은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며, 공중파 방송은 누군가 시청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시청할 수 있으므로 경합성이 없는 서비스이다. 이처럼 재화나 서비스에 따라 경합성의 존재 여부가 다르다.

재화나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 자원, 공공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사적 재화는 돈을 내지 않으면 가질 수 없고,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는 것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음식, 자동차 등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로 클럽재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것으로 상수도 서비스가 예가 될 수 있다. 셋째로 공유 자원은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것으로서 강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자연 자원이 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공공재가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다고 해서 공공재 생산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도 비용을 들여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를 생산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산된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배제성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현상을 무임승차 문제라고 한다.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을 경우,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고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지 않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공공재는 대부분 국가에서 생산 및 공급하게 된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특정한 경제 현상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그 근거를 서술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특정한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사례와 그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특정한 경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언급하고 있고, (나)는 특정한 경제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가)는 특정한 경제 현상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피고 있고, (나)는 특정한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공시적으로 살피고 있다.
- ⑤ (가)는 특정한 경제 현상의 해결법을 연구한 경제 이론을 언급하고 있고, (나)는 특정한 경제 현상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여러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3.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갑은 밝고 따뜻한 집을 만들기 위해 유리창을 크게 만들어 집 안에 햇볕이 많이 들어오게 하였다. 얼마 뒤 갑의 옆집에 살던 을은 자신의 집을 허물고 새로 3층짜리 집을 지었는데, 을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을의 집이 높아 갑의 집에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게 된 것이다.
- 병의 공장과 정의 가축 농장은 서로 인근에 있었다. 그런 데 병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병의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이 지하로 유입되어, 지하수를 이용하는 정의 농장에 있는 가축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① 갑과 을이 서로 협상을 원하며 협상에 소요되는 비용이 충분히 적다면, 코즈의 정리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 ② 을이 갑에게 피해 보상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피해 보상 금액으로 인한 갑의 만족감이 햇볕으로 얻는 만족감보다 크다면, 코즈의 정리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 ③ 병의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이 정의 농장뿐 아니라 불특정한 다수의 농장에도 피해를 끼쳤다면, 코즈의 정리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④ 병과 정이 문제 해결을 위해 거래나 협상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크다면, 국가의 개입 없이 개인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⑤ 병의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 때문에 정의 가축이 질병에 걸린 것이 밝혀진다면, 코즈의 정리에 따라 개인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

2. ㉠, ㉡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세금 정책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②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의 원인이 된다.
- ③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 ④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고 있어도 해당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 ⑤ 해당 문제를 발생시키는 생산물을 사회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시장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4. (나)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음 표는 재화 및 서비스를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에 따라 A~D로 분류한 것이다.

재화 및 서비스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
A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음.
B	배제성이 있으나, 경합성이 없음.
C	배제성이 없으나, 경합성이 있음.
D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음.

- ① 어떤 주택에 세입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다면 그 주택은 A에 해당한다.
- ② 스마트폰을 통해 유료로 음악이나 동영상을 감상하는 서비스는 B에 해당한다.
- ③ C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만 하려 한다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특정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그 국가의 영주권이 없다면 그 국가의 D를 이용할 수 없다.
- ⑤ D의 생산을 민간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긴다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5.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속 도로와 일반 도로는 상황에 따라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 고속 도로는 통행 요금을 받지만 길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런데 가끔 특정한 이유로 고속 도로가 꽉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사람의 고속 도로 이용에 의해 다른 사람이 제대로 고속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도로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길이 좁고 출퇴근 시간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 도로를 원활하게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심야에는 일반 도로도 이용자가 극히 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① 한산한 고속 도로는 배제성이 있지만 경합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꽉 막힌 고속 도로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사적 재화와 동일하군.
- ③ 출퇴근 시간의 일반 도로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공유 자원과 동일하군.
- ④ 심야의 일반 도로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일반 도로는 시간에 따라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클럽재와 동일할 수 있겠군.

6. ①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팬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 ② 그녀는 날아오는 공을 받았다.
- ③ 그는 어떤 옷이든지 잘 받는다.
- ④ 육조에 물을 받아 목욕을 하였다.
- ⑤ 그 둘은 달빛을 받고 나란히 섰다.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2.11.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 한다.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한 이익을 준다든지, ⑦공장의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과수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_a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리면 과수원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과수원의 이윤 감소보다 양봉업자의 이윤 증가가 더 크다면,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수원이 자발적으로 양봉업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릴 이유는 없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조금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협상을 쉽게 해 주는 법과 규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개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7.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별 경제 주체는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 ②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성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 ③ 전통적인 경제학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④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이익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면 그 사회는 사회적 효율성이 충족된 것이다.
- ⑤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받는 당사자들 사이에 그 손익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외부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8. ⑦의 사례를 [A]처럼 설명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보기>

공장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_b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_b 보다 (Ⓐ) 공장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더 (Ⓑ), 생산량을 Q_b 보다 (Ⓒ)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	Ⓑ	Ⓒ
①	줄이면	크다면	줄이는
②	줄이면	크다면	늘리는
③	줄이면	작다면	줄이는
④	늘리면	작다면	줄이는
⑤	늘리면	작다면	늘리는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07

일상생활에서 한 사람의 경제활동은 다른 사람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고 이러한 영향은 대부분의 경우 시장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주는데도 이것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배기ガ스를 배출한다. 또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제삼자에게 영향을 끼치고도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치르지도 않는 것을 ‘외부효과’라 한다. 제삼자에게 끼친 혜택이나 손해가 그 성격상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없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시장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이는 시장의 밖에 존재하기에 가격이 형성되지도 않고 시장가격에 반영되지도 않는다.

외부효과에는 앞서 들었던 사례처럼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다. 매일 집 앞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는다면, 이로 인해 이웃 주민들은 깨끗한 길거리를 기분 좋게 ⑦걸을 수 있다. 새로 생긴 꽃집에서 매일 향기 그윽한 꽃들을 진열해 놓는다면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미치는 외부효과는 부정적 외부효과라 한다.

그런데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 원리의 작동을 방해한다. 그 이유는 한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시장 또는 가격을 통해 적절하게 보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가용 운전자가 매연을 배출하지만 도로 주변의 행인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 소음이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공장 관계자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꽃향기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꽃집 주인에게 이웃 주민들이 보상을 해주지도 않는다. 그렇다 보니 부정적 외부효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고, 긍정적 외부효과는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이와 같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금지, 격리, 기준 설정, 세금 부과 등의 규제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량을 제한하거나, 환경 오염세 같은 세금을 도입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기업은 생산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공해의 양을 줄이려 노력할 것이다. 반대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지원금)이나 세금 혜택을 주어 장려한다. 사회에 많은 이익을 주는 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 혜택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9.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핵심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②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돋고 있다.
- ③ 대상의 차이점을 들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⑤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현상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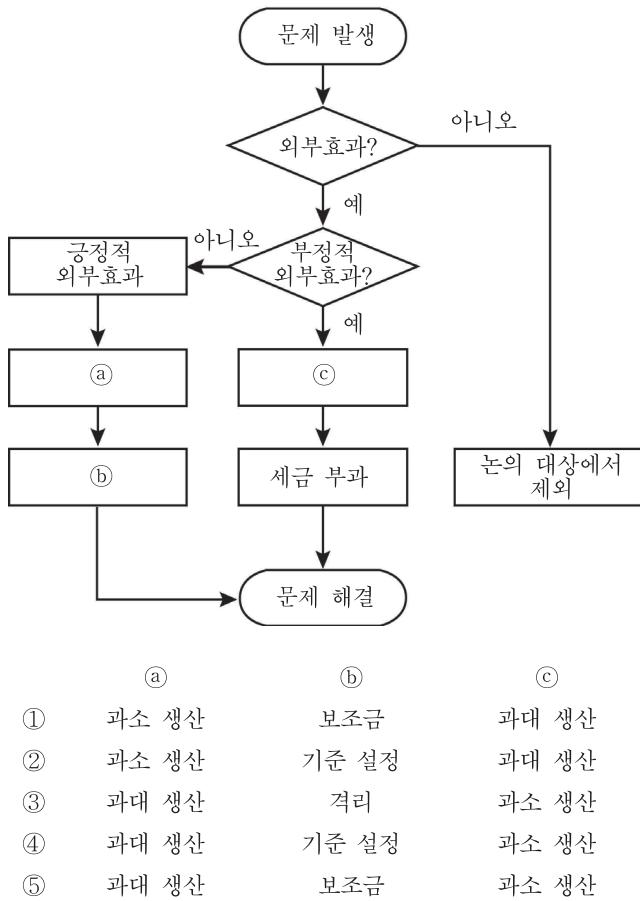
10. <보기>는 ㉠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것에 해당하는 예로 옳은 것은?

<보기>

㉠은 ㄷ 불규칙 활용의 예이다. 어간의 끝소리가 'ㄷ'인 용언 가운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ㄷ'이 'ㄹ'로 바뀌는 것을 ㄷ 불규칙 활용이라 하며, 이 용언을 'ㄷ 불규칙 용언'이라 한다.

- ① 철수는 금괴를 땅에 묻었다.
- ② 민수는 문을 닫고, 외출을 했다.
- ③ 거실에 놓을 의자 하나를 얻었다.
- ④ 영수는 음악을 듣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 ⑤ 사람들은 우주에 생물체가 살 것이라고 믿고 있다.

11. 윗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2. <보기>를 읽은 독자가 윗글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주택가 근처에 시내버스 차고지가 들어섰다. 그러다 보니 버스의 운행이 잦아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 주민 대표는 버스 회사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해결을 요구하였다. 버스 회사 사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실을 정기적으로 열 것과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 교육을 수시로 시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 ① 외부효과는 시장 원리의 작동을 지원하는가?
- ② 외부효과는 자발적 보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 ③ 외부효과는 경제주체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 ④ 외부효과는 정부의 개입 없이 해결이 불가능한가?
- ⑤ 외부효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가?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수완

경제에서 외부성이란 A의 행동이 B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쳤는데, A가 B에게 대가를 받지 않거나 배상을 하지 않는 상황을 뜻한다. 예를 들어 꽃을 재매하는 화훼업자가 의도와 무관하게 꿀을 채취하는 양봉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상황이나 공장으로부터 배출된 오염 물질이 의도와 무관하게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민에게 피해를 ① 주는 상황을 말한다.

경제학자들에게 외부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피해나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피해나 이익이 사회적 최적 수준, 즉 양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준보다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염 물질로 인한 어민의 피해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게 일어난다는 것은 오염 물질의 배출로 인한 공장의 이익이 어민의 피해보다 크다는 것이며, 오염 물질의 배출로 인한 어민의 피해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일어난다는 것은 오염 물질의 배출 감소를 위해 생산을 줄인 공장의 피해가 어민의 이익보다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부성과 사회적 최적 수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코즈는 외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A의 행위가 외부성을 유발하여 B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자. 만일 A와 B 중 누구에게 재산권이 있는지가 명확히 확정된다면, 각 경제 주체가 교섭을 하는데 드는 비용인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행위는 재산권이 누구에게 부여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만큼 이루어진다.”

이러한 코즈의 정리는 두 가지 중요한 합의를 가진다. 우선 외부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과 관련한 중요한 기준인 상호성을 일깨워 준다. ② 강물에 오염 물질을 배출한 행위로 인해 공장과 어민 간에 다툼이 일어난 사례를 생각해 보자. 많은 사람들은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공장이 문제의 원천이며, 공장에 제재를 가하여 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코즈는 오염 물질 배출이라는 행위가 문제의 원천이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한다. 원인만을 놓고 보자면 오염 물질 배출이 문제가 아니라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바로 옆에 있는 강에서 고기를 잡는 행위가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공장 바로 옆에서 어민이 고기를 잡지 않는다면 외부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코즈는 외부성이 존재하는 문제를 ③ A와 B 사이에 상호적 성격을 지닌 문제라고 보았으며 “A가 B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함은 곧 A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문구로 이를 피력하였다. 이것을 개념화한 것이 상호성이다. 상호성이란 두 경제 주체는 대칭적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익이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감소시키므로 결국 손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성 문제에서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가해자나 피해자로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두 번째 합의는 재산권을 명확히 한다면 외부성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이다. 불분명한 권리관계가 분쟁 발생의 원인이기 때문에 재산권 부여를 통해 외부성이 내부화된다면 경제 주체들은 통상적인 협상과 계약을 수행할 것이고, 그 수행에 따르는 거래 비용이 없다면 외부성으로 발생한 문제는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해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장과 어민의 사례는 강물의 재산권이 확정되지 않아 생긴 문제이므로 강물에 대한 재산권을 확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를 들어, 강물에 대한 재산권이 어민에게 있다면 공장은 오염 물질 배출을 할 때 어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장이 어민에게 보상을 하는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양자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오염 물질 배출 수준을 정할 것이다. 반대로 강물에 대한 권리가 공장에게 있다면, 어민은 공장에 보상을 통해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요청함으로써 물고기의 수를 늘리고자 할 것이고, 오염 물질 배출은 양자가 만족하는 수준만큼으로 조정될 것이다.

그러나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황 설정으로 인해 코즈의 정리는 비판을 받는다. 현실에서는 거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에 매우 제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전제는 기본적으로 갈릴레이가 운동에 대한 사고 실험을 할 때 마찰이 없는 상황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갈릴레이의 마찰이 없는 세계에서 어떤 공에 힘이 가해지면, 그 공은 무한히 굴러갈 것이라는 가정을 통해 현실에서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공이 무한히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코즈의 가정도 ④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코즈의 정리는 법경제학과 관련이 된다. 바로 ‘외부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은 누구에게 재산권을 부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가능하다. 첫째는 아무에게나 주면 된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재산권 확정이 최종 생산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 분배에는 영향을 미친다. 정당한 근거에 따라 재산권을 할당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배의 정의를 추구하는 법질서를 뒤흔드는 일이 된다. 이로 인해 재산권 부여의 문제는 법적 정당성이 있는 측에 재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는 외부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전제와 법 원리에 따른 재산권 확정이라는 접근 방식이 서로 배치된다는 이율배반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기존 법 원리가 명확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므로 기존의 법리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효율성이라는 기준이다. 즉 재산권 배분 이후 귀결될 결과를 사회적 차원에서 비교해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재산권 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재산권 확정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을 고려한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법적 판결을 할 때는 경제적 효율성 외에 다른 원리를 역시 재산권 확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코즈의 정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거래 비용이 충분히 낮은 상황에서는 협평성이나 도덕성에 기초한 입법이나 판결이 경제적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비용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추구할 만한 가치라면 그것을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3.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④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대상을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③ A 공장이 100만 원의 피해액을 보상하는 방식과 주민이 70 만 원의 설치비용을 들여 매연 방지 시설을 갖추는 방식은 모두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④ 만약 법원이 환경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후 A 공장이 주민과 협상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만 원이라면 공장은 매연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20만 원의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겠군.

⑤ 거래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과 주민이 협상을 한다면 비용 부담의 주체만 달라질 뿐 매연 방지 시설은 갖추어진다는 점에서 매연으로 인한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준에서 해결되겠군.

14.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가 B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B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다.
- ② A가 B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A의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 ③ A가 B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A의 손해가 증가할 것이다.
- ④ A가 B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B의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 ⑤ A가 B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A와 B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다.

15. 코즈의 정리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 공장은 70만 원의 비용이 드는 매연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매연을 방출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100만 원의 피해를 입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누릴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공장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인 공해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판결해야 한다. 환경권을 인정하고 공해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장은 매연 배출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100만 원의 피해액을 보상하든가 70만 원을 들여 매연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당연히 방지 시설을 갖추는 것이 30만 원을 버는 것이 된다. 반대로 환경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해권을 인정한다면 주민들은 100만 원의 피해를 감수하든가 70만 원을 들여 공장에 매연 방지 시설을 설치해 주어야 하며 당연히 매연 방지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30만 원을 버는 것이 된다. A 공장과 주민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협상에 임하기로 하고 법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① A 공장이 매연을 유발한 주체이므로 매연으로 인한 피해나 이익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결정되게 하기 위해 법원은 환경권을 인정해야 하겠군.
- ② 만약 법원이 공해권을 인정했는데 주민이 A 공장과 협상하는데 드는 비용이 40만 원이라면 주민은 매연 방지 시설 설치를 포기하고 100만 원의 피해를 감수하려 하겠군.

16.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 세계를 통해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가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 ②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힘들다.
- ③ 거래 비용이 없는 가상의 세계를 상정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도 거래 비용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 ④ 거래 비용이 없는 세계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가상의 세계이므로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힘들다.
- ⑤ 실제 세계에서도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래 비용이 없는 가상의 세계를 상정해서 현실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17. [A]를 바탕으로 ⓐ에 대한 토의 활동을 하였다.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래 비용이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재산권을 주든 외부성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해결되지 못할 수 있겠군.
- ② 강물에 대한 재산권이 확정되지 않아 생긴 문제이므로 이를 재산권 부여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이율배반적인 시도일 수 있겠군.
- ③ 환경 보호라는 가치가 추구할 만한 가치라면 외부성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어민에게 재산권을 줄 수 있겠군.
- ④ 재산권을 어민에게 주면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일어나겠군.
- ⑤ 공장이 재산권을 가져서 얻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이익이 어민이 재산권을 갖지 못해 생긴 피해보다 크다면 효율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장에 재산권을 줄 수 있겠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LEET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의 선택에서 출발하여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방법론은 오랫동안 경제학에서 주류의 위치를 지켜왔다. 신고전파 기업 이론은 이 방법론에 기초하여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주어진 생산 비용과 기술, 수요 조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고 가정하여 기업의 행동과 그 결과를 분석한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한 사람의 동부의 행동과, 생산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업의 행동을 동일한 것으로 다룬다. 이에 대해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이론이 제시되었다.

⑦ 코즈는 가격에 기초하여 분업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 시스템과 권위에 기초하여 계획과 명령이 이루어지는 기업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그는 모든 활동이 시장에 의해 조정되지 않고 기업이라는 위계 조직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어떤 부품을 직접 만들어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구매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자. 생산 비용 개념만 고려하는 신고전파 기업 이론에 따르면, 분업에 따른 전문화나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때 자체 생산보다 외부 구매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에 이런 논리가 적용된다면 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생산 비용이 아닌 ⑧ 거래 비용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코즈의 논리이다.

코즈는 거래 비용을 시장 거래에 수반되는 어려움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탐색하거나, 서로 가격을 협정하거나, 고환 조건을 협상하고 합의하여 계약을 맺거나,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모든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그 내용으로 들었다. 거래 비용이 너무 커서 분업에 따른 이득을 능가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구매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 자체 조달한다. 다시 말해 시장의 가격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위계 조직의 권위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코즈가 제시한 거래 비용 개념은 시장 시스템으로만 경제 현상을 이해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론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그러나 코즈의 설명은 거래 비용의 발생 원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주류적인 경제학 방법론도 ‘권위’와 같은 개념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윌리엄슨은 거래 비용 개념에 입각한 기업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했다. 먼저 ‘합리성’이라는 가정을 ‘기회주의’와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가정으로 대체했다. 경제 주체들은 교활하게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지만, 정보의 양이나 정보 처리 능력 등의 이유로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코즈가 시장 거래라고 뭉뚱그려 생각한 것을 윌리엄슨은 현물거래와 계약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계약의 불완전성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계약은 현물거래와 달리 거래의 합의와 이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한 상황에 대해 모든 대비책을 계산할 수도 없으며, 언어는 원래 모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 정도를 제삼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전에 계약을 맺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약에는 빙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행했던 준비, 즉 관계특수적 투자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이 때문에 윌리엄슨은 계약 이후에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질수록, 즉 관계특수성이 클수록 계약 후에 상대방이 변화된 상황을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관계특수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윌리엄슨은 이를 ‘관계특수적 투자에 따른 속박 문제’라고 부르고, 계약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통상적인 수준의 단순한 계약을 통해서는 사전에 이 문제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과는 다른 복잡한 계약을 통해 안전장치를 강구할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면 아예 자체 조달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본다면 안전장치가 필요 없는 거래만 존재하는 상황이 신고전파 경제학이 상정하는 세계이고,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자체 생산만 대안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코즈가 상정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슨의 기업 이론이 거둔 성과 덕분에 거래 비용 경제학이 서서히 경제학 방법론의 주류적 위치를 넘볼 수 있게 되었다.

18. ㉠이 신고전파 기업 이론의 비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누가 기업의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② 분석해야 할 기업의 행동에는 생산량의 선택밖에 없는가?
- ③ 기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가?
- ④ 왜 어떤 활동은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고 어떤 활동은 외부에서 일어나는가?
- ⑤ 다수가 참여하는 기업과 한 사람의 생산자 사이에 생산량의 차이는 없는가?

19. ㉡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거래량과 반비례 관계이다.
- ② 현물거래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③ 계약 제도의 발달을 통해 줄일 수 있다.
- ④ 기업 내부에서 권위의 행사에 수반되는 비용이다.
- ⑤ 거래되는 재화의 시장 가치가 확실할수록 더 커진다.

20. 윌리엄슨의 기업 이론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권위의 원천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 ② 경제 주체의 합리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가정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나아갔다.
- ③ 현물거래와 자체 생산 이외에도 다양한 계약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이해하게 해주었다.
- ④ 관계특수성이거나 계약의 불완전성이 큰 거래일수록 거래 비용이 적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 ⑤ 시장 거래를 현물거래와 계약으로 구분하여 새로운 측면에서 거래 비용의 속성을 이해하게 해주었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화력 발전소의 설비는 특정 종류의 석탄에 맞춰 설계되며, 여러 종류의 석탄을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건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한편 탄전(炭田) 근처에 발전소를 건설한 전력 회사는 송전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하고, 소비지 근처에 발전소를 세운 전력 회사는 석탄 운반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 다음은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화력 발전 전력 회사들의 석탄 조달 방법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 ⓐ 미국 화력 발전에 쓰인 석탄 가운데 15% 정도는 전력 회사가 자체 조달한 것이었다.
- ⓑ 전체 계약 건수 가운데 1년 미만의 초단기 계약은 10%에 못 미쳤고, 1년 이상의 계약 건수 가운데 6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83%였고, 21년 이상의 계약도 34%였다.
- ⓒ 특정 탄광에 접한 곳에 발전소를 건설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자체 조달 또는 복잡한 장기 계약을 통한 조달이었는데, 이 경우 평균 계약 기간은 35년, 최대 계약 기간은 50년이었다.
- ⓓ ⓒ에서 복잡한 장기 계약의 경우, 품질과 가격에 관한 조건은 매우 복잡하게 설정하면서도 최소 공급 물량은 단순하게 명시했다.

① Ⓛ는 탄광의 직접 경영에 따르는 문제보다 복잡한 장기 계약으로도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서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이겠군.

② Ⓜ에서 1년 미만의 초단기 계약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서 관계특수적 투자에 따른 속박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에 맷은 것이겠군.

③ Ⓝ는 특정 탄광으로부터 석탄을 공급받을 것을 전제하고 행한 투자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특정 탄광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보장받고자 한 것이겠군.

④ Ⓞ에서 품질과 가격의 계약 조건이 복잡한 것은, 공급되는 석탄의 품질과 가격에 관련된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삼자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우려했기 때문이겠군.

⑤ Ⓟ에서 최소 공급 물량의 계약 조건이 단순한 것은, 공급 물량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이나 언어의 모호성에 따른 문제가 크지 않아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과 같은 제삼자에게 쉽게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수특.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배제성과 경합성이란 소비나 사용과 관련된 재화의 속성들인데, 배제성은 어떤 재화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속성이다. 일부의 재화는 그것이 일단 생산되면 사람들을 그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 그 재화는 비배제성을 갖는다고 한다. 경합성은 소비나 사용에 있어서 경합적이라는 말로서, 어떤 재화를 누군가가 소비하거나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재화는 누군가가 소비하거나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이 경우에 그 재화는 비경합성을 갖는다고 한다.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 자원, 공공재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사적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들이다. 예를 들어 생선 가게에서 파는 고등어의 경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 소비할 수 없고, 한 사람이 사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 고등어를 소비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구입하고 판매하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는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클럽재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은 없는 재화들이다. 예를 들어 케이블 TV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시청한다고 해도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청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비경합적인 재화이다. 그러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은 케이블 TV 시청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으므로 배제성이 있다. 이처럼 배제 가능하고 비경합적인 클럽재를 경제학자들은 흔히 ‘인위적으로 희소하게 된’ 재화라고도 부른다. 클럽재는 사적 재화로 판매될 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클럽재는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단위의 재화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한계 비용^{*}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배선 공사를 해야 하는 케이블 TV처럼 클럽재는 아주 큰 고정 비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에 클럽재가 한계 비용이 매우 작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면 기업은 자신이 부담하는 큰 고정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화는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그러한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재화의 추가 공급에 수반하는 한계 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공유 자원이라고 불리는 재화들이 있는데, 이 재화들은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급의 공동 사물함에 학급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연필이 100자루가 있다고 하자. 이 연필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으므로 학급 내에서는 비배제성을 갖는다. 그러나 한 학생이 가진 연필은 다른 학생이 가질 수 없으므로 연필들은 경합성이

있다. 공유 자원이 지닌 비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공유 자원의 소비자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즉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치르는 비용, 즉 사적 비용만 고려하여 소비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 자원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관적 만족감이 더 큰 사람이 더 작은 사람으로 인해 해당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사회 전체로 볼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앞에서 예로 든 학급 사물함에 있는 연필들의 경우에는 금세 사물함에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연필을 꼭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불일치로 인해 고갈이 발생하는 것이다.

끝으로 공공재는 소비가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재화이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 개선 정책의 경우에는, 환경 개선에 사용될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선된 환경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누군가가 개선된 환경의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궤적한 지구의 기후를 즐기는 것은 배제 가능하지도 않고 경합적이지도 않다. 공공재가 지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무임 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공재는 통상적인 시장 거래를 통해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재는 조세의 징수에 의해 마련된 일반 재원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한계 비용: 재화나 서비스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필요한 총 비용의 증가분.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클럽재는 재화의 공급을 위해 큰 고정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 ② 시장 경제 참여자가 구매하는 대부분의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 ③ 공공재는 조세의 부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 ④ 공유 자원의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사적 비용만을 고려하여 소비할 때 자원의 고갈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클럽재의 소비자는 재화의 가격이 재화의 공급에 따른 한계 비용을 넘을 경우 재화의 구입을 포기한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교통 문제가 심각한 A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차량 이동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터널 공사를 하였고, 이를 무료로 이용하게 했다. 그랬더니 혼잡 시간대에는 차량이 몰려 정작 터널 이용이 필요한 차량이 터널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A 시에서는 차량 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 통행료를 거두기로 했다. 그런데 혼잡 통행료가 낮게 책정되자 출퇴근 시간 차량 통행량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이에 당국에서는 혼잡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 ① 시간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통과할 수 있게 한 터널은 배제적인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군.
- ② 혼잡 통행료가 낮게 책정되자 출퇴근 시간 차량 통행량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임 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겠군.
- ③ A 시가 처음에 설정한 혼잡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한 것은 재화 소비의 배제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보아야겠군.
- ④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혼잡 통행료를 거두는 것은 배제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터널 이용의 경합성은 혼잡 통행료가 없을 때보다 약화되겠군.
- 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는 터널 이용 차량이 한 대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한계 비용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볼 수 있겠군.

24. <보기>를 참고하여 ⑤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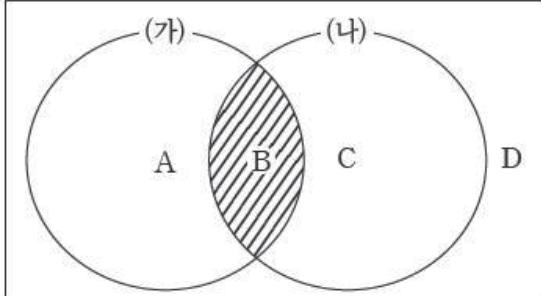
효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수관적 만족의 정도이고, 사회적 총효용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효용의 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개개인의 효용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른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일정 기간 동안 소비를 할 때 소비한 재화의 양이 증가할수록 그 추가분에서 느끼는 만족 또는 즐거움의 크기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재화 1단위당 추가적으로 얻는 효용의 증가분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 ① 공유 자원으로 불리는 재화들은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기 때문에
- ② 재화의 이용에 따르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높은 사람이 해당 재화를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 ③ 재화에 대한 소비가 진행됨에 따라 재화의 소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적 비용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 ④ 재화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얻는 한계 효용이 재화의 소비로 인해 치러야 하는 사적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 ⑤ 재화를 추가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얻는 한계 효용이 낮은 사람으로 인해 한계 효용이 높은 사람이 해당 재화를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2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는 경합성이 있는 상태이고, (나)는 배제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가), (나)의 바깥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상태이다. A~D는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에 따라 분류한 재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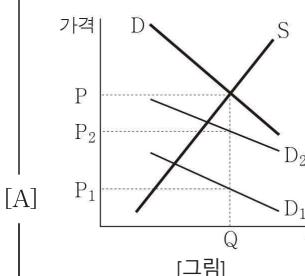
- ① 돈을 지불한 사람들만이 A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한다면 A는 B와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된다.
- ② B에 해당하는 재화 100개를 선착순 100명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했다면 해당하는 100개의 재화는 C에 속하게 된다.
- ③ D는 무임 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D는 통상적인 시장 거래를 통해 제공하기는 어렵다.
- ④ (가)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의 경우 그 재화를 어떤 사람이 소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⑤ (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생산자는 재화의 공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04.

가로등처럼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는 주로 국민의 세금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초적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재의 적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공공재를 포함한 재화는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량은 줄어드는 반면, 공급량은 늘어난다. 따라서 우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 된다. 그런데 한 재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각 개인의 수요를 합쳐 산출되기 때문에 개인의 수요곡선을 합쳐서 시장 수요곡선을 만든다. [그림]은 두 명의 소비자로 구성된 사회를 가정했을 때 하나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공급곡선이다.

공공재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아, 공급되는 즉시 모든 개인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림]

다만, 그 재화에 대해 각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지불 용의액*은 다를 수 있고, 이것이 개인의 수요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림]처럼 특정 공급량 Q 를 기준으로

할 때 두 소비자의 지불 용의액 P_1 과 P_2 를 합친 P 가 해당 공공재에 대한 시장 전체의 수요가 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수요곡선인 D_1 과 D_2 를 수직으로 합친 것이 공공재의 수요곡선 D 이고, D 와 공급곡선 S 가 만나는 지점에서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이 결정된다.

그런데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지불 용의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재에 대한 적정 공급량이 [그림]과 같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공공재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① 일어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크 조세 방식이 제안되었다. 클라크 조세 방식은 공공재 공급 비용을 공평하게 나눈 세금인 ‘비용 분담금’에다 ‘추가 세금’을 합쳐 개인이 총 지불해야 할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공재를 공급하기 이전에 지불 용의액, 순이익 등으로 표출되는 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단,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끔 유도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선호도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사람들은 선호도를 속일 수 있으므로, 클라크 조세 방식은 개인이 표출한 지불 용의액이 그대로 개인이 지불해야 할 세금의 총 액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이 선호도를 속일 필요가 없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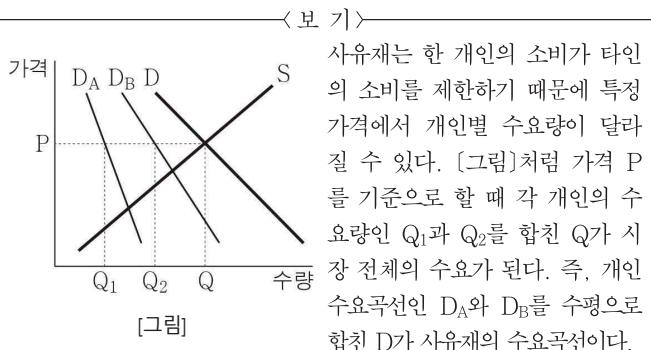
하나의 공공재에 대한 공급 여부를 결정할 때 클라크 조세가 적용되는 방식을 ② 교량 공급 결정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세 사람이 사는 마을에 600만 원이 드는 교량을 만든다고 할 때, 교량에 대한 지불 용의액은 A는 500만 원, B는 200만 원, C는 100만 원이라고 하자. 전체 구성원들의 지불 용의액의 합이

공공재의 공급 비용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그 공공재가 공급되므로 이 마을에는 교량 건설이 가능하다. 공공재의 공급 비용은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분담하여 지불하게 하므로 세 사람의 비용 분담금은 각각 200만 원이다. 그런데 한 개인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들의 순이익의 합보다 크면 자신의 선호도로 인해 선호도가 낮은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손실을 안겨준 셈이므로 그 개인은 추가 세금을 지불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때 개인의 순이익은 지불 용의액에서 비용 분담금을 뺀 금액으로 그 값이 음수(-)인 경우 순손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의 순이익은 300만 원, B의 순이익은 0원이 되고, C는 순이익이 -100만 원이므로 100만 원의 순손실을 얻게 된다. 결국 A의 순이익인 300만 원이 B와 C의 순이익 합인 -100만 원보다 크므로 A는 추가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B와 C는 각각 자신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들의 순이익의 합보다 작으므로 추가 세금 없이 200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 만약 A가 없었다면 지불 용의액의 합이 300만 원이므로 공급 비용인 600만 원보다 적어 교량은 건설되지 못한다. 즉 A가 없었다면 공공재의 공급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③ 클라크 조세 방식에서는 이와 같이 공공재의 공급 결정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중추적 사람’이라고 한다. 이 경우 중추적 사람이 지불해야 할 추가 세금은 다른 구성원들의 순손실의 합에 해당하므로 C의 순손실 100만 원이 A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이다. 결국 A는 비용 분담금 200만 원에 추가 세금을 더한 3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그런데 교량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때 어떤 개인이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인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A가 지불 용의액을 낮게 표출하면 교량이 건설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A는 교량이 건설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또한 교량 건설 가능성은 높이기 위해 지불 용의액을 높게 표출하더라도 자신이 내야 할 추가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A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지불 용의액: 소비자가 재화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금액.

26. [A]와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두 명의 소비자로 구성된 사회를 가정했으며, 가격 이외의 다른 조건은 일정함.

- ① <보기>의 수요자들과 달리, [A]의 D_1 의 수요자와 D_2 의 수요자는 Q 라고 하는 공급량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② [A]의 수요자들과 달리, <보기>의 D_A 의 수요자와 D_B 의 수요자는 각각 P 라는 가격에서 Q 라고 하는 공급량을 소비할 수 있다.
- ③ [A]와 <보기> 모두 수요곡선인 D 와 공급곡선인 S 가 만나는 지점의 수량이 각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다.
- ④ [A]와 <보기>에서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하나씩 추가된다면 [A]의 D 는 위쪽으로, <보기>의 D 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 ⑤ [A]의 D_1 과 D_2 는 특정 공급량에서 그 재화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가 다름을, <보기>의 D_A 와 D_B 는 특정 가격에서 그 재화에 대한 개인별 수요량이 다름을 나타낸다.

27. ⑦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B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A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400만 원이라고 표출할 경우, A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은 줄어든다.
- ② A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B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100만 원이라고 표출할 경우, B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은 늘어난다.
- ③ A와 B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C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0원이라고 표출할 경우, C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은 줄어든다.
- ④ B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A가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100만 원이라고 표출한다면, A는 본래 얻을 수 있었던 3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된다.
- ⑤ A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B가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100만 원이라고 표출한다면, B는 본래 얻을 수 있었던 2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된다.

28. <보기>는 윗글과 관련된 추가 자료이다. ⑦을 <보기>에 적용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두 개의 공공재 중 하나만 공급해야 할 때 클라크 조세 활용 방안]

구성원들이 두 개의 공공재 X, Y 중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공공재를 선택한 후, 그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표출하여 각 개인의 순이익을 산출한다. 그 결과 순이익의 합이 큰 공공재가 공급된다. 이때 어떤 공공재를 선호했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분담금을 지불하게 되며, 중추적 사람만 추가로 세금을 낸다.

[사례]

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공공 도서관과 공공 병원 중 하나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 때 각 개인의 선택과 선호도를 바탕으로 순이익을 산출한 결과, '갑'은 공공 도서관에 30만 원, '을'은 공공 병원에 40만 원, '병'은 공공 도서관에 20만 원의 순이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갑'이 없더라도 공공 도서관이 공급되었을 것이므로, '갑'은 공공 도서관 설립에 따른 추가 세금을 지불할 것이다.
- ② '을'이 없었다면 공공 병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을'은 중추적 사람이다.
- ③ '병'이 없었다면 공공 병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병'은 공공 도서관 설립에 따른 추가 세금을 지불할 것이다.
- ④ '갑'과 '병'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공공 도서관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둘 다 중추적 사람이다.
- ⑤ '을'과 '병'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금은 달라지므로, 둘 다 중추적 사람이다.

29. '클라크 조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 ②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 하려고 만든 것이다.
- ③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 재화를 대상으로 한다.
- ④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금은 개인들이 표출한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 ⑤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금에 추가 세금을 합쳐 개인이 내야 할 세금의 액수가 책정된다.

30. 밑줄 친 단어 중, ⑧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말다툼 끝에 싸움이 일어났다.
- ② 꺼져 가던 불꽃이 다시 일어났다.
- ③ 자명종 소리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
- ④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며 거품이 일어났다.
- ⑤ 맛있는 음식을 보자 갑자기 식욕이 일어났다.

2. 환율과 국제 수지 ① 국제 수지의 이해와 활용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특 132p

가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쓰듯이 국가도 외국과의 교역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서비스 및 자본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하여 기록한 통계가 국제 수지표이다. 여기서 일정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설정된다. 국제 통화 기금(IMF)에서 국제 수지 통계의 포괄 범위 및 평가 기준을 정하고 각국은 여기에 따라 국제 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국제 통화 기금은 대외 거래의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이 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다. 현행 국제 수지표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차감한 경상 수지와 자본 이전 등을 기록하는 자본 수지,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융 거래를 기록하는 금융 계정으로 분류된다. 금융 계정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자산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부채로 기록한다. 금융 계정의 자산 항목에는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자산 증감액을, 부채 항목에는 부채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부채 증감액을 각각 기록하며, 금융 계정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금융 계정 순자산으로 인식한다. 국제 수지표에는 기초 통계의 오류나 통계 작성상의 실수 등에 따른 약간의 오차와 누락이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한다면,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의 합에서 금융 계정 순자산을 차감하면 '0'이 되도록 국제 수지표가 작성된다.

국제 수지표에 기록되는 대외 거래는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므로 거주성과 소유권의 변동 여부가 중요하다. 여기서의 거주성은 국적보다는 거래 당사자의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 정해진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 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고 본다. 즉 개인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본국을 떠나 해외에서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거주자로 보는 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국가에서 설립되고 법적으로 등기되어 법인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B국에 설립 등기한 협회 법인은 비록 실질적인 경영권은 A국의 본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A국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또한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이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타국에 판매하는 경우라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상품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상품 수출입에 해당하게 된다.

한 국가가 1년 동안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고 나면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규모에 변동이 있기 마련이고, 이 변동은 나라 전체로 보면 대외 지급 능력의 변동을 가져온다. 1년 동안에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국제 수지표와는 달리 연말 시점에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대외 금융 자산(또는 대외 투자)과 비거주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외 금융 부채(또는 외국인 투자) 및 대외 금융 자산에서 대외 금융 부채를 차감한 순대외 금융 자산의 잔액을 보여 주는 것이 국제 투자 대조표이다.

일반적으로 순대외 금융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는 대외 금융 자산 및 대외 금융 부채의 연초 잔액에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에 따른 기간 중 증감을 조정하여 연말 잔액이 작성된다. 거래 요인은 매매, 차입 등 실제 경제적 거래를 통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국가 간 자금의 이동이 수반된다. 비거래 요인은 경제적 거래는 없으나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자금의 이동은 수반되지 않는다. 이 요인은 환율이나 가격 변동 그리고 이외의 기타 변동으로 세분된다. 국제 투자 대조표는 국제 수지표와 마찬가지로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기준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에서는 기준 통화의 대외 가치인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가 변동한다. 한편 비거래 요인 중 가격 변동은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 가치의 평가 변동을 의미한다.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은 거래 시점에서의 실제 시장 가격으로 대외 거래를 작성하는 유량 통계인 반면, 국제 투자 대조표는 대외 금융 자산과 대외 금융 부채 잔액을 연말 시점에서 평가하여 기록한 저량 통계라는 점에서 이들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유량 통계와 저량 통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육조에 물을 받을 때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과 육조 안에 고인 물을 상상해 보자. 수도꼭지에서 1분당 5리터의 물이 배출된다고 할 때 10분이 지난 시점에서는 육조에 50리터의 물이 고이게 된다. 이 경우 육조에 담겨 있는 '50리터'의 물이 저량이 되고 유입되는 '5리터/분'이 바로 유량이 되는 것이다. 만약 국제 투자 대조표가 작성되는 연초와 연말 시점 사이에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이 두 시점 간 국제 투자 대조표에 기록된 잔액의 차이는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과 개념상 동일하게 된다.

이처럼 한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은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에 기초한 경상 수지 흑자를 통한 외화 자산의 축적과 더불어 대외 금융 활동을 통한 투자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경상 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 금융 활동의 투자 실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할 경우 순대외 금융 자산이 감소하여 대외 지급 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자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함에 따라 비거주자들이 국내 투자 자금을 회수할 경우 환율이 상승하여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제경쟁에서 산업 경쟁력과 더불어 금융 역량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경상 수지 흑자가 매년 지속하여 누적된 국가의 경우라도 국제 투자 대조표상 순대외 금융 부채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 ②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본국에 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우리나라 경상 수지의 수출 항목으로 기재된다.
- ③ 국제 수지표상 금융 계정에 기록된 주식, 채권 등 대외 금융 자산의 가치는 연말 시점에서의 평가된 시장 가격으로 작성된다.
- ④ 기업의 경우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를 법적 등기 여부로 판정하여 국제 수지 표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한다.

- ⑤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 대외 금융 자산 및 대외 금융 부채의 증감과 국제 수지표상의 금융 계정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이는 비거래 요인의 변동에 의한 것이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화를 기준으로 국제 투자 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다. 대외 금융 자산과 대외 금융 부채가 모두 0을 유지해 오던 A국은 2023년에는 100억 달러의 경상 수지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B국 거주자는 향후 A국의 주식 시장이 호황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자국 통화를 A국 통화로 환전한 50억 달러를 A국의 주식 시장에 투자하였다. A국은 경상 수지와 금융 계정을 통해 150억 달러가 유입되었는데, A국 거주자는 이를 C국 통화로 환전하여 C국의 주식 시장에 전액 투자하였다. 2023년에는 비거래 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단, 각국의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은 모두 자국 통화로 표시된다.

2024년에 A국의 경상 수지 및 금융 계정 순자산이 모두 0이라고 하자. A국의 주가는 예상대로 2배 상승한 반면 C국의 주가는 1/2배로 폭락하였다. 또한 A국 통화의 대외 가치는, B국 통화에 대해서는 1/2배로 하락한 반면 C국 통화에 대해서는 2배 상승하였다. 한편 이 해에는 국가 간 자금 이동은 없었으며 주가와 환율 이외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 ① 2023년도 A국의 국제 투자 대조표에는 대외 금융 자산이 150억 달러, 대외 금융 부채가 50억 달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 ② 2023년에는 A국의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2024년도에는 A국의 순자산 증감액과 순부채 증감액이 같을 것이다.
- ④ 2024년도 A국 국제 투자 대조표상의 대외 금융 부채는 100억 달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 ⑤ 2024년도 A국 국제 투자 대조표상의 대외 금융 자산은 75억 달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3.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를 위해서는 경상 수지 흑자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 ②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거래는 국내 거래이므로 국제 수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 ③ 가격 변동 이외의 비거래 요인 변동이 없다면, 국내 주가 하락은 대외 지급 능력을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 ④ 국제 투자 대조표의 거래 요인에 의한 순대외 금융 자산은 환율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 수지표상의 금융 계정과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 ⑤ 국내 본사가 해외의 A국에 설립 등기를 마친 현지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의 B국에 설립 등기를 한 또 다른 현지 법인에게 되파는 경우는 국제 수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C)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짹지은 것은?

<보기>

국제 수지표		(비거래 요인)			국제 수지표	
국제 투자 대조표		(A)	(B)	(C)		
		-대외 금융 자산 (연초)	가격 변동	변동	-대외 금융 자산 (연말)	
		-대외 금융 부채 (연초)	(B)	(C)	-대외 금융 부채 (연말)	
		-순대외 금융 자산 (연초)			-순대외 금융 자산 (연말)	

(A)	(B)	(C)
① 금융 계정	자본 수지	환율
② 금융 계정	자본 수지	주가
③ 자본 수지	금융 계정	금리
④ 자본 수지	금융 계정	환율
⑤ 자본 수지	금융 계정	주가

5. 윗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가) 어느 해의 순대외 금융 자산이 음(-)의 값을 기록하였다면 이듬해에 순대외 금융 자산이 양(+)의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상 수지 흑자는 필요조건이다.
- (나) 국제 수지표에서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가 모두 흑자를 기록하여 양(+)의 값을 가질 경우 오차와 누락이 없다면 금융 계정 순자산 역시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 (다)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는 기준 통화와 자국 통화와의 환율만 고정되어 있으면 제3의 통화의 환율 변동에 의한 대외 금융 자산 및 대외 금융 부채의 가치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 (라) 일국이 다른 국가에 가공용 원재료를 제공한 후 가공 후 가공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 이 상품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품 거래는 상품 수출입에서 제외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② 환율 모형과 작동 원리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특 306p

환율은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 간의 교환 비율로, 통상 자국 통화로 평가한 외국 통화의 가격으로 표시한다. 이 표시 방법에 따르면 환율 상승은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환율은 일상생활 중에서 흔히 접하지만 자주 혼동을 주는 대표적인 경제 개념이다. 일부 경제학자는 과열 성장이 수입 증가로 인해 국제 수지의 악화를 초래하여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 즉 환율을 상승시킨다고 하고, 다른 경제학자는 과열 성장이 오히려 화폐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여 자국 화폐 가치가 상승, 즉 환율을 하락시킨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동일한 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움직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예측은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도 있겠지만 경제학자가 상정하고 있는 환율 결정 모형이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환율이 고정된 수준에서 유지되는 고정 환율제와 달리 변동 환율제하에서의 환율 결정 모형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되는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만을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정 시점에서 거래되는 외국 화폐 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그 결정 요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각각 유량 접근법과 자산 시장 접근법으로 대별된다.

유량 접근법에서 자주 이용되는 멘델-플레밍 모형에서는 국제 수지를 수출과 수입의 차인 경상 수지와 자본 유입과 유출의 차인 자본 수지의 합으로 보고 국제 수지가 영(0)이 되는 균형 수준에서 환율, 즉 적정 환율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경상 수지 및 자본 수지는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를 각각 경상 수지 흑자 및 자본 수지 흑자라고 하고 반대의 경우는 각각 경상 수지 적자 및 자본 수지 적자라고 한다. 경상 수지 및 자본 수지가 모두 0인 상황에 있던 어떤 국가에서 재정 지출의 확대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소득의 증가는 수입재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를 유발하여 수입이 증가하면서 경상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또한 소득의 증가는 화폐 수요의 증가를 통해 국내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이자율 수익에 민감한 외국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므로 자본 수지에서는 흑자가 발생한다.

이때 국제 수지의 흑자 또는 적자 여부는 자본 수지 흑자와 경상 수지 적자의 상대적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이 국가가 높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본 수지 흑자 규모가 경상 수지 적자 규모를 상회하는 반면, 낮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본 수지 흑자 규모가 경상 수지 적자 규모를 하회하게 된다. 만약 낮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가정한다면, 경상 수지 적자에 따른 외국 통화의 유출량이 자본 수지 흑자에 따른 유입량을 상회함에 따라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이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환율 상승으로 외국 통화로 표시한 국내 생산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의 개선으로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상 수지 적자가 점차 축소되면서 결국에는 국제 수지의 균형을 회복하게 된다. 한편 경상 수지 및 자본 수지가 모두 0인 상황에서 이 국가가 자국 통화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는 국내 이자율 하락으로 해외 투자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자본 유출이 발생하여 자본 수지는 적자를 보이나 이 과정에서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이 증가하여 경상 수지는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결국 국제 수지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 재정 지출의 경우와는 달리, 통화량 변화가 환율 변화의 방향성에 미치는 효과는 자본 이동성 수준과는 무관 하나 변화의 크기는 이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자산 시장 접근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富)를 여러 형태의 자산으로 보유하고자 하는데 주식이나 채권과 마찬가지로 자국 및 외국 화폐도 자산의 일종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화폐는 주식이나 채권과는 달리 비록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교환 매개체로서 거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미래로 구매력을 이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외환 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투자자들이 외국 통화 표시 금융 자산을 얼마나 가치 있는 자산으로 보고 이를 보유하고자 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자산 시장 접근법의 하나인 통화주의 모형에서는 가격이 항상 신축적으로 조정된다는 가정하에 자산으로서의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통화주의 모형에 따를 경우 재정 지출 및 통화량 변동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멘델-플레밍 모형에서의 예측과는 상이할 수 있다. 어떤 국가가 재정 지출 확대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 자국 통화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가 외국 통화 표시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면 자국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한편 이 국가가 자국 통화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라도 외국 역시 통화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외국 통화의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면 환율은 오히려 하락한다고 설명한다.

환율 결정에 대한 이들 모형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환율 변동 요인인 생산성과 자산 구성의 신축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한 상이한 시각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내 소득 증가가 환율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멘델-플레밍 모형에서는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가정하에 한 경제의 총생산은 전적으로 수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이 경우 소득의 증가는 생산성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요 증가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필요하므로 결국 경상 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통화주의 모형에서는 소득의 증가는 기술 혁신 등 공급 요인의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소득의 증가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국가 경제력의 강화와 외국 통화 표시 자산에 비해 자국 통화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의 상대적 증가를 의미하므로 환율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멘델-플레밍 모형에서는 거래 비용의 존재로 자산 구성의 즉각적인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어 환율은 기본적으로 국제 수지의 변화를 반영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화주의 모형에서는 거래 비용이 거의 없어 자산 구성의 신속한 조정이 가능하고 수출입 등에 발생하는 외국 화폐의 중간보다는 자산 구성을 위한 거래 규모가 훨씬 크므로 환율은 외국 화폐를 포함한 자산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환율 모형을 선택할 것인가는 개별 이론 모형이 담고

있는 논리적 완결성, 즉 내적 정합성과 더불어 어떤 모형이 경험적으로 현실 경제에 부합하느냐는 외적 적합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내적 정합성은 환율 모형의 필수 조건으로 이것이 결핍된 모형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국제적 자본 이동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나 국가의 경우에는 환율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유량 접근법이 실증적 지지를 받고 있었으나, 이후 국제적 자본 이동이 활발해지고 국제 금융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유량 접근법만으로 복잡다각한 환율 변동을 설명하기 어려워지자 자산 시장 접근법과 같은 대안 모형들의 개발로 기존 모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환율 이론은 진화해 가고 있다.

1. 웃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환율 결정 모형 각각의 도입 배경과 운영 방식을 예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환율 결정 모형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예시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 ③ 환율 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모형이 존재하는 이유와 각 모형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④ 환율 결정 모형의 변화를 통해 대안적 모형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환율 결정 모형의 종류를 소개하고 각 모형의 작동 원리를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2. 웃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갑’과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유량 접근법이나 자산 시장 접근법에 따라 환율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 갑과 을은 국내 이자율 상승이 자국 환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갑은 국내 이자율의 상승은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될 것이므로 자본 수지를 개선시켜 환율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을은 화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융 자산이므로 국내 이자율의 상승은 채권과 같은 다른 금융 자산을 보유하는 테러를 기회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화폐보다는 되도록 채권을 보유하고자 함으로써 자국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외국 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됨에 따라 환율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① 갑은 일정 기간보다는 일정 시점에서의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환율을 결정한다고 본다.
- ② 갑은 경제의 총생산은 공급보다는 수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 ③ 갑은 재정 지출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자본 이동성 정도에 따라 상이하다고 본다.
- ④ 을은 금융 자산 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⑤ 을은 국내 소득의 증가는 생산성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3. 웃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델-플레밍 모형에 따르면,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한 경상 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본 이동성 정도에 따라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 ② 먼델-플레밍 모형에 따르면, 적정 환율 역시 환율과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한다.
- ③ 통화주의 모형에 따르면, 자국 통화의 공급량 증가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④ 통화주의 모형에 따르면, 자국의 국가 경제력의 강화는 외국 통화 표시 자산의 상대적 비중을 감소시킨다.
- ⑤ 논리적 완결성과 경험적 사실을 모두 만족시키는 환율 결정 모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경험적 사실을 보다 잘 설명하는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환율이 국제 수지 균형을 달성하도록 조정된다는 멘델-플레밍 모형은 경상 수지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국제 자본 흐름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산에 대한 수요를 강조한 통화주의 모형 역시 국내 금융 자산과 외국 금융 자산과 같은 자산 변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비중과 이를 자산 간 신축적인 조정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수출이나 수입 등의 유량 변수가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포트폴리오 균형 모형에서는 자산 변수와 유량 변수의 시간에 따라 서로 간 영향을 주고받으며 움직이는 관계에 주목하여 유량 접근법과 자산 시장 접근법을 접목하고자 하였다. 동 모형에 따르면 경제 충격에 대해 단기에는 유량 접근법에 근거한 환율 변동에 따라 경상 수지와 외국 금융 자산 규모가 변하게 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자산 시장 접근법에 따라 국내외 금융 자산의 크기와 구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동 모형에 따라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국 통화 공급이 증가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자국 통화 공급의 증가에 따른 국내 이자율의 하락으로 단기적으로 환율은 (Ⓛ)한다. 이로 인해 경상 수지 (Ⓜ)가 발생하고 외국 금융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국의 부(富)가 증가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부의 증가에 따라 국내 금융 자산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함에 따라 환율은 (Ⓝ)하고 경상 수지는 (Ⓞ)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균형 상태로 이동하게 된다.

- | Ⓐ | Ⓑ | Ⓒ | Ⓓ |
|------|----|----|----|
| ① 상승 | 흑자 | 하락 | 적자 |
| ② 상승 | 적자 | 하락 | 흑자 |
| ③ 상승 | 흑자 | 상승 | 적자 |
| ④ 하락 | 흑자 | 상승 | 적자 |
| ⑤ 하락 | 적자 | 상승 | 흑자 |

5.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경제 충격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해석과 예측은 상이할 수 있다.
- ② 멘델-플레밍 모형과 통화주의 모형에서 재정 지출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할 수 있다.
- ③ 멘델-플레밍 모형에 따르면, 경상 수지가 적자인 경우라도 환율은 하락할 수 있다.
- ④ 멘델-플레밍 모형에 따르면, 자본 이동성의 정도는 환율 변화의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 통화주의 모형에 따르면, 낮은 거래 비용으로 인해 국내외 금융 자산의 즉각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8.09.(고1)

무역이나 해외 여행 등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나라의 화폐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이때 두 나라의 화폐는 일정한 비율로 교환되는데, 이 비율을 환율(換率)이라고 한다. 환율은 특정 국가 통화에 대해 자국 통화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물건의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환율도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가 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환율을 표시하고 있으며, 1달러=1,000원과 같은 형태로 나타낸다.

환율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1달러당 1,000원 하던 환율이 900원으로 내려가면 1달러를 교환할 때 필요한 우리나라 원화가 줄어든다. 이때 ‘환율이 내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원화 가치가 올랐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평가절상 되었다고 하며, 원화가 오른 상태가 지속되면 ‘원고(高)’가 진행된다고 한다. 반대로 1달러당 1,000원 하던 환율이 1,100원으로 올라가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때에는 원화가 평가절하 되었다고 하며 이 상태가 유지되면 ‘원저(低)’가 진행된다고 한다.

이러한 환율 변화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호재가 될 수도,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내려가면 국내 수출업체들은 불리해진다. 원화의 달러당 환율이 1,000원일 때 국내기업이 수출 대금으로 1달러를 받으면 1,000원을 받는 셈이다. 하지만 환율이 900원으로 내려가면 1달러를 받아 900원밖에 받지 못하므로 기업의 수익이 줄어든다. 반면에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업체들은 유리해진다. 수입상품 대금을 치를 때 원화 대금이 줄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화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輸入)이 증가한다.

환율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환율이 1,100원으로 오르면 수출대금으로 달러당 1,000원을 받던 수출업체들은 더 많은 원화를 받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의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와 반대로 수입업체들은 수입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 원가가 비싸진다. 따라서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수입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공산품의 가격도 상승한다. 뿐만 아니라 기계류 등 수입 완제품 가격도 상승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국내 물가 전반은 상승 압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환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환율이 완만하게 변동하면 수출업체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국내 수출입업체들이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업체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율 관리가 필요하다.

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우리나라 경제는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②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 ③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환율을 표시한다.
- ④ 환율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자재의 수입 가격이 하락한다.

7. 윗글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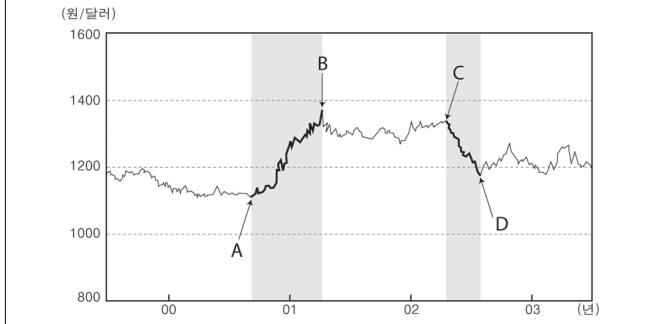
<보기>

- ㄱ. 핵심이 되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ㄴ. 개념이 형성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 ㄷ. 개념을 구체적 현상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ㄹ.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개념을 풀이하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8. 위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① A ~ B 기간에는 수출이 줄어드는 대신 수입은 늘었겠군.
- ② A ~ B 기간에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낮아졌겠군.
- ③ C ~ D 기간에는 달러화에 대해 원화가 평가절상 되고 있군.
- ④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는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높았겠군.
- ⑤ C 지점에 비해 D 지점에서는 국내 수출업체들의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군.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09.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⑦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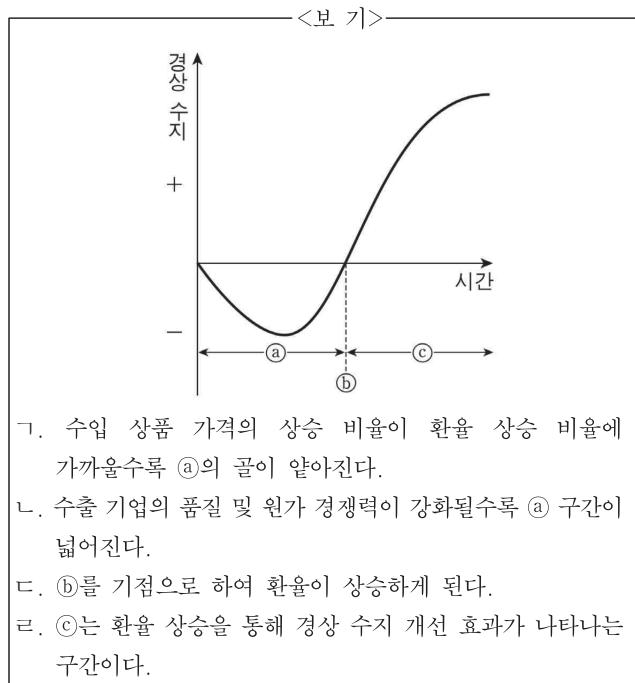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환율: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경상 수지: 상품(재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9. 윗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 ① 환율 상승에 따르는 수입 상품의 가격 변화
- ②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한 고환율 정책의 필연성
- ③ 가격 변화에 대한 외국 소비자의 지체된 반응
- ④ 국내외 수요 구조가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
- ⑤ 환율 상승이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J커브 그래프를 해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그, ㄷ ② 그, ㄹ ③ ㄴ, ㄷ
- ④ 그, ㄴ, ㄹ ⑤ ㄴ, ㄷ, ㄹ,

11. ⑦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외 상품의 수요 구조에 따라 수출 상품의 가격 조정이 선행될 수 있다.
- ②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국내외 기업은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관찰한 후 가격을 조정한다.
- ③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가격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국내외 상품 수요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⑤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는 경상 수지의 개선 여부와는 무관하다.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11.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②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④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⑤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⑥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⑦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⑧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⑨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가]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⑩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과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⑪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⑫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1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 ②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④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⑤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13. ⑦를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 ③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④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적절성이 높다.
- ⑤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 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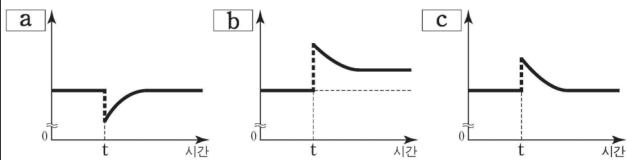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 ①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②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5.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 b, c는 [가]의 ⑦~⑩과 하나씩 대응된다. 이를 바르게 짹지은 것은? [3점]

<보기>

다음 그래프들은 [가]에서 국내 통화량이 t 시점에서 증가하여 유지된 경우 예상되는 ⑦~⑩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단, t시점 근처에서 그래프의 형태는 개략적으로 표현하였으며, t 시점 이전에는 모든 경제 변수들의 값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고 가정한다. 장기 균형으로 수렴되는 기간은 변수마다 상이하다.)

	⑦	⑧	⑨
①	a	c	b
②	b	a	c
③	b	c	a
④	c	a	b
⑤	c	b	a

16.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기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비한 환율 변동 보험을 수출 주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 ② 원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 ③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 ④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해 외화를 빌리는 수입 업체에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
- 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금리 변동, 해외 투자 자금 동향 등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7. 문맥상 ①~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① ① a : 동떨어져 | ② ⑤ b : 드러낼 |
| ③ ④ c : 불러온다 | ④ ③ d : 되돌아오면서 |
| ⑤ ② e : 피하는 | |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2.11.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①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②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③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짹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18.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뷴은 어떤 전망을 했는가?
- ③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했는가?
- ④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19.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 ②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 ③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뷴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④ 트리뷴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20.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
- ② ㉡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적어진다.
- ③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짓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 ④ ㉠에서 ㉡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진다.
- ⑤ ㉡에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보다 적다.

21.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 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 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 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 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LEET

최적통화지역은 단일 통화가 통용되거나 여러 통화들의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최적의 지리적인 영역을 지칭한다. 여기서 최적이란 대내외 균형이라는 거시 경제의 목적에 의해 규정되는데, 대내 균형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대외 균형은 국제수지 균형을 의미한다.

최적통화지역 개념은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의 상대적 장점에 대한 논쟁 속에서 발전하였다. 변동환율론자들은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있는 국가에서 대내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동환율 제도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어떤 조건에서 고정환율 제도가 대내외 균형을 효과적으로 이를 수 있는지 고려했다.

초기 이론들은 최적통화지역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준을 찾으려 하였다. 먼델은 노동의 이동성을 제시했다.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대내외 균형 유지를 위한 임금 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이고 결국 환율 변동의 필요성도 작을 것이다. 잉그램은 금융시장 통합을 제시하였다.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있으면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 경상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자본 이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조정의 압력이 줄어들게 되므로 지역 내 환율 변동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캐넨은 재정 통합에 주목하였다. 초국가적 재정 시스템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일부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에 재정 지출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환율 변동의 필요성이 감소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고정환율 제도 아래에서도 대내외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후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위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한다.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면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이 충족되며 단일 통화를 형성할 수 있다. 단일 통화 사용의 편익은 화폐의 유용성이 증대된다는 데 있다. 거래 비용이 줄고, 환율 변동의 위험이 없어지며, 가격 비교가 쉬워진다는 점에서 단일 화폐의 사용은 시장 통합에 따른 교환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반면에 통화정책 독립성의 상실이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주요 비용으로 간주된다. 단일 통화의 유지를 위해 대내 균형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가격과 임금이 경직될수록, 전체 통화지역 중 일부 지역들 사이에 서로 다른 효과를 일으키는 비대칭적 충격이 클수록 증가한다. 가령 한 국가에는 실업이 발생하고 다른 국가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한 국가는 확대 통화정책을, 다른 국가는 진축 통화정책을 원하게 되는데, 양 국가가 단일 화폐를 사용한다면 서로 다른 통화정책의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노동 이동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비대칭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독립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은 감소한다. 반대로 두 국가에 유사한 충격이 발생한다면 서로 다른 통화정책을 택할 필요가 줄어든다. 이 경우에는 독립적 통화정책을 포기하는 비용이 감소한다.

최근 ① 유로 지역의 경제 위기는 최적통화지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로 지역 내 국가 간 불균형을 분명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유로 지역 내 노동 이동이 일국 내의 이동만큼 자유롭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로 지역은 최적통화지역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더욱이 유로화 등장 이후 유로 지역 내에서 해외 투자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유럽의 핵심국에서 유럽의 주변국으로 엄청난 자본 이동이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주변국에는 경기 과열이 발생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본 이동이 중단되자 주변국은 더 이상 호황을 지탱하지 못하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과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하게 되었다. 환율 조정 수단을 상실한 유로 지역은 핵심국과 주변국 사이의 불균형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된 것이다.

더구나 최적통화지역 이론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은행 문제까지 부각되었다. 은행 채무를 국가가 떠맡으면서 GDP 대비 공공 부채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불안이 가속되었으며 이는 다시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은행의 신뢰까지 손상을 입혔다. 이를 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매각하려 힘에 따라 국채 가격이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2. 윗글에서 ‘최적통화지역 이론’과 관련하여 고려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장 통합으로 인한 편익의 계산 방식
- ② 환율 변동을 배제한 경상수지 조정 방식
- ③ 화폐의 유용성과 시장 통합 사이의 관계
- ④ 단일 화폐 사용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키는 조건
- ⑤ 독립적 통화정책 없이 대내 균형을 달성하는 조건

23. 윗글에 따를 때, ㉠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주변국의 임금을 인하한다.
- ② 장기적으로 주변국의 공공 부채 비율을 줄여 나간다.
- ③ 유로 지역 전체에 초국가적 재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 ④ 핵심국으로부터 주변국으로의 자본 이동을 활성화한다.
- ⑤ 유로 지역 외부로부터 핵심국으로 노동 이동을 활성화한다.

24. <보기>와 같은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 B, C, D 국가로만 이루어진 세계를 상정하고, 이들 국가에서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A국은 x통화, B국은 y통화, C, D국은 z통화를 사용한다. A와 B국 사이에만 노동 이동이 가능하다. 국가들 사이에 금융시장과 재정은 통합되어 있지 않다. A, C국은 목재를, B, D국은 자동차를 생산하여 수출한다. 이 세계에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목재 수요가 감소하였다.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존재할 때 A, C국에서 실업이 발생하고, B, D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 ① A와 B국에는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하였으나 노동의 이동이 가능하므로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한다.
- ② A와 C국에는 서로 유사한 충격이 발생하였으므로 노동의 이동여부와 무관하게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③ A와 D국에는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하였고 노동의 이동도 불가능하므로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④ B와 D국에는 서로 유사한 충격이 발생하여 독립적 통화정책의 포기에 따른 비용이 없으므로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한다.
- ⑤ C와 D국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비대칭적 충격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경제 위기의 원인과 대처 방안

① 대공황의 원인과 경제 정책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록 120p

1929년 미국 주식 시장의 붕괴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된 대공황이 경제학에서 가지는 의미는 빅뱅(Big Bang)이 물리학에서 가지는 의미에 비유되기도 한다. 산업 혁명 이후 서구 경제는 여러 차례의 경기 침체를 경험하였지만, 대공황은 불황 정도가 유례없이 깊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기 침체와는 구별된다. 주식 시장의 붕괴는 대공황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찰되던 현상이므로 그 자체가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점과 대공황의 전개 및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주식 시장 붕괴에 이은 은행 파산과 디플레이션, 보호 무역주의의 대두에 따른 국제 교역 감소 등의 연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대공황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 구조의 불안정성과 경제 정책의 실패가 대공황을 초래하였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불안정한 경제 구조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통화 가설과 지출 가설로 구분되는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② 통화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 정책 실패에서 찾고 있다. 연준이 1920년대 중반까지 공개 시장에서 국채 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확대함에 따라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었고 전반적인 물가와 더불어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세계는 국제 통화 제도로 금 보유고가 증가할 경우 통화량도 같이 증가시켜 자국 화폐와 금의 교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 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수출 증가에 따른 해외로부터의 지속적인 금의 유입으로 금 보유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준이 공개 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각하는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은 높아짐에 따라 대공황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준은 상업 활동에 사용된 어음만을 인수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진성 어음주의를 통화 정책 기조로 삼고 있어 상업 활동이 위축되는 대공황 시기에 통화가 오히려 줄어들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진성 어음주의 하에서의 통화 정책은 경기 순응적인 정책으로, 불황기에는 통화량을 감소시켜 시장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되었다는 것이다. 통화 긴축으로 인해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기업이 파산하면서 일부 은행이 도산되고 있음에도 당시 연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후 은행이 연쇄 도산되었고 이는 통화량을 추가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실물경제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이 가설에서는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 통화량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급하였다면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융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연준의 정책 실패를 대공황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③ 지출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주식 시장 붕괴에 따른 내구재에 대한 소비 감소가 미국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유럽에 군수 물자를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한편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1920년대 말 미국 경제가 심각한 과잉 설비 상태에 처해 투자 기회가 소진되면서 실물 투자보다는 오히려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서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생산된 제품이 재고로 남게 되자 기업 투자 역시 감소하게 되었다. 기업의 투자 감소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에 따른 실업 증가를 야기해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고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감소시켜 민간의 소비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소비 수요 감소는 디플레이션과 더불어 기업 파산을 유발하고 이는 가계 및 기업 대출의 부실로 은행들의 대출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이는 연쇄적인 은행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대공황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가설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된 원인으로 당시의 국제 통화 제도였던 금 본위제를 들고 있다. 대공황 발생 이후 미국은 보호 무역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외국에 빌려준 돈을 금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금 보유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금 본위제에서는 금과의 교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 국가들은 줄어든 금 보유고만큼 자국의 통화량을 줄이게 되었고 이는 결국 국내적으로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유발하면서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대공황의 원인이 결국 민간의 소비 수요의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가 적자 재정을 통해 민간 수요를 진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하였다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각국 통화 당국의 재량적이고 신축적인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는 국제 통화 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아직까지도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 상이한 가설이 대립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공황의 원인과는 별개로 대공황이 남긴 유산은 명확하다. 대공황의 회복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민간의 인식이 변화하였고, 이와 함께 경기 대응과 위기관리를 위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정당화되면서 공공 부문이 확대되었으며, 그동안 신봉되어 왔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기능을 지지하는 자유방임주의는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금융 위기를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게 되었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공황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 ② 대공황은 이전 시기의 통상적인 경기 침체에 비해 침체 정도가 크고 지속 기간도 길었다.
- ③ 연준의 공개 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은 통화량을 증가시켜 이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 ④ 통화 가설은 통화량 확대를, 지출 가설은 재정 지출 확대를 대공황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대공황 이전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경제학자 A는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였을 것인데 대공황 당시 자료에서는 이자율 상승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통화 가설을 부정하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경제 변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명확히 구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화폐 단위로 표시된 명목 통화량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나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제 물가 역시 하락하고 있어 명목 통화량을 실제 물가로 나눈 화폐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실질 이자율 역시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계산된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사후적 실질 이자율로서 실물 경제에서 투자와 소득을 실제로 결정하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다른 이자율보다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시하는 통화 가설에 따르면 통화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에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이다. 그러므로 통화량 감소로 물가 하락이 예상되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음수(-)인 상황, 즉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을 상회하게 된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상승은 투자를 줄여 생산 및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며 그 결과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따라서 통화 가설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질 통화량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측정을 통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한다.

- ① 통화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목 이자율 상승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② 통화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 당시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상회하였다고 주장한다.

③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영(0)이라면, 명목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 및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④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존재할 경우,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을 상회할 것이다.

⑤ 경제학자 A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대공황 당시 명목 이자율의 상승 폭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 폭과 같거나 그보다 더 커야 한다.

3. ⑦과 ⑧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⑦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대출 부실에 따른 은행의 연쇄적인 파산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⑧에서는 금 본위제는 통화 당국의 통화량 조절을 어렵게 함으로써 재량적인 통화 정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본다.
- (다) 주식 시장 붕괴의 원인에 대해 ⑦은 정책의 실패로 보는 반면, ⑧은 시장 내부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라) ⑦은 ⑧과 달리 금 본위제가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4.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공황은 이전의 경기 침체와 비교해서 어떤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는가?
- ② 통화 가설은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통화 정책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는가?
- ③ 통화 가설은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로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 ④ 지출 가설은 대공황 직전에 주식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원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 ⑤ 지출 가설에서는 미국의 대공황이 어떤 경로를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설명하는가?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의 발생으로 아담 스미스 중심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자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었다. 당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으로는 재고가 쌓이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이 경제 침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때 새롭게 등장한 것이 케인즈의 **[유효수효이론]**이다. ‘유효수요이론’이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수요, 즉 물건을 살 수 있는 확실한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수요가 공급 및 고용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케인즈는 세계 대공황의 원인이 이 유효수요의 부족에 있다고 보았다. 유효수요가 부족해지면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고, 이것은 노동자의 감원으로 이어지며, 구매력을 감소시켜 경제의 악순환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 케인즈는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와 기업이 소비 및 투자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가 없는 생산은 공급 과다 및 실업을 일으키며 궁극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공황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절약은 분명 권장되어야 할 미덕이지만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 침체와 공황을 불러올 경우, 절약은 오히려 악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케인즈는 민간의 소비나 투자가 여력이 없다면 정부가 대규모 지출을 늘리는 재정 정책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불황을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케인즈 이론이 수용되면서 점차 안정되어 가던 경제 상황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또 한 번의 고통을 겪게 된다. 케인즈의 이론으로는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고, 정부의 개입이 효율적인 시장의 기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등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고전학파 경제학의 명맥을 유지해 오던 ㉢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들은 정부의 역할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반대하고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5. 위 글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표제와 부제는?

- ①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된 경제학자
 - 수요공급이론의 효과 및 의의
- ② 시장과 정부의 끝나지 않은 경쟁
 -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 ③ 불황에 대처하는 실물 경제의 특징
 -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소비 방법
- ④ 경제 상황에 따른 경제학자들의 처방
 - 사회 변화에 따른 경제학의 변천 과정
- ⑤ 시대를 앞서간 경제학자들의 몰락과 부활
 - 경제학사로 살펴보는 세계 근현대사

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정부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했다.
- ② ㉡과 ㉢은 동일한 경제 현상 때문에 등장했다.
- ③ ㉡과 달리, ㉢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조절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과 달리, ㉡은 경기 침체의 원인을 공급에서 찾고 있다.
- ⑤ ㉠~㉢은 경제 이론들이 규칙적인 주기에 따라 순환됨을 보여준다.

6. **유효수효이론**에 따라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재물은 우물에 비유할 수가 있다. 퍼내면 늘 물이 가득하지만 길어내기를 그만두면 물이 말라버림과 같다. 따라서 화려한 비단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그로 인해 여인의 기술이 괴폐해졌다. 이지러진 그릇을 사용하기를 꺼리지 않고, 기교를 부린 물건을 숭상하지 않아 나라에는 공장(工匠)과 목축과 도공의 기술이 형편없고, 그러므로 기술이 사라졌다. 더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을 박대하므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사농공상 네 부류의 백성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곤궁하게 살기 때문에 서로를 구제할 방도가 없다.

- 박제가, 「시정(市井)」에서 -

- ① 절약을 권장하면 우물의 물은 항상 가득 차 있겠군.
- ② 경기 침체는 이지러진 그릇을 계속 사용하는 데서 비롯되었겠군.
- ③ 소비가 위축된 원인은 화려한 비단옷을 만드는 여인 때문이겠군.
- ④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사농공상 모두가 곤궁해지겠군.
- ⑤ 정부의 대규모 지출은 기교를 부린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이겠군.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30년대 세계는 대공황이라 부르는 극심한 경기 침체 상태에 빠져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경제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모든 경제적 흐름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④ 조절되므로 경기는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다.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케인스의 생각은 달랐다. 케인스는 만성적 경기 침체의 원인이 소득 감소로 인한 '수요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케인스는, 정부가 조세를 ⑤ 감면하고 지출을 늘려 국민소득과 투자를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수요팽창정책을 써야 한다는 '유효수요 이론'을 ⑥ 주장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가계와 기업, 금융시장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경제를 ⑦ 상정하기로 하자. 기업은 상품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가계는 이를 제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득이 가계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가계는 그 소득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소비하게 된다. 만일 가계가 벌어들인 돈을 전부 물건 구입에 사용한다면 소득은 항상 소비와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가계는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즉각 소비하지는 않는다. 가계의 소득 중 소비되지 않은 부분은 저축되기 마련이며, 이렇게 저축된 부분은 소득과 소비의 순환 흐름에서 빠져나간다. 물론, 저축으로 누출된 돈이 가정의 이불이나 베개 밑에서 잠자는 것은 아니다. 가계는 저축한 돈을 금융시장에 맡겨 두고, 기업은 이를 투자 받아 생산요소를 구입한다.

이때, 저축의 크기보다 투자의 크기가 작은 상황이 ⑧ 지속되면 경기가 만성적인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케인스의 생각이었다.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가계의 소득을 감소시킨다. 소득이 감소하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 나머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이는 다시 가계의 소득을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저축은 총수요를 감소시켜 불황을 심화시키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케인스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⑨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러나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이런 경우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자율'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므로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었다. 저축이 투자보다 커지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이자율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저축은 줄어들고 투자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축의 크기와 투자의 크기는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케인스는 저축과 투자의 크기가 이자율의 조정만으로 일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저축과 투자는 이자율뿐 아니라 미래의 경기, 정치 상황, 기술 개발 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수요팽창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8.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유효수요이론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 ② 케인스는 대공황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 ③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경기의 자연적인 회복에 비관적이다.
- ④ 케인스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 투자를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 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수요팽창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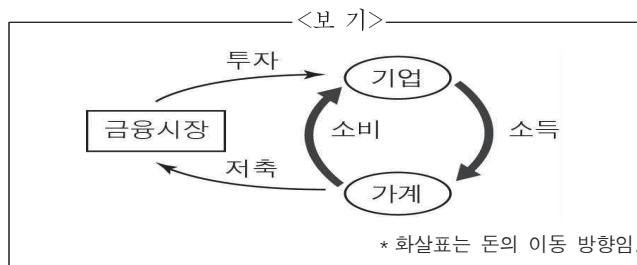
10. <보기>의 관점에서 ⑦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저축은 총수요를 감소시켜 경제 불황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저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투자 기회와 투자 수요가 많고 자본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축을 통한 자본 축적이 경제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 ① 다수의 의견임을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고 있군.
- ②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군.
- ③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고 대상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있군.
- ④ 단순히 시간상으로 선후 관계에 있는 것을 인과관계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군.
- ⑤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지와 관계없는 권위자의 견해에만 의존하고 있군.

9. <보기>를 활용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소득'과 '소비'의 경제적 흐름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조절된다고 여겼다.
- ②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이자율에 의하여 '저축'의 크기와 '투자'의 크기가 일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 ③ 케인스는 '투자'의 크기가 이자율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 ④ 케인스는 '저축'의 크기보다 '투자'의 크기가 작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케인스는 '투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경기 침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1. ①~⑤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균형이 맞게 바로잡음.
- ② ②: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함.
- ③ ③: 주의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함.
- ④ ④: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함.
- ⑤ ⑤: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됨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3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은 자본주의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혹독하고도 긴 경기 침체였다. 공황의 진원지는 미국이었는데, 1929년 말 뉴욕 주식 시장의 주가 대폭락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

당시 미국 사회는 엄청난 경제적 변영과 함께 대량 소비 풍조가 만연했지만, 소득과 부의 불균등이 심화되면서 소비 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었다. 한편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것은 내구 소비재 산업이었다. 그것을 대표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1928년에 이미 미국인 6명 중 1명이 차를 소유했는데, 이는 불균등한 소득 분배를 고려할 때 거의 모든 가구가 차를 구입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였다. 민간 부문의 주택 건설 역시 성장의 동인이었지만 당장은 추가 투자가 필요치 않은 지점에 도달했다. 큰 집을 짓고 한두 대의 차를 가진 미국의 부자들은 무엇을 더 구입할 수 있었을까? 새로운 생산적 투자처를 찾지 못한 그들은 돈을 주식 투기에 쏟아 부었으며, 평범한 농민들까지도 은행 대출을 받아 주식 투기의 열풍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파산이었다.

⑦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 정책에도 문제가 있었다. FRB 산하 12개 지역별 중앙은행 이사들은 대부분 회원 은행 출신으로, 여타의 지방 은행 은행가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어음 평가나 할 줄 알았지 불황기에 할인율을 인하하여 통화량을 늘리거나 호황기에 할인율 인상으로 통화량을 줄여야 하는 통화 정책에는 거의 문외한이었다. 이들이 점차 과열되는 주식 시장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FRB는 주식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은행에 대한 할인율을 조정함으로써 은행이 고객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여신하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FRB가 할인율 인상을 통해 은행 여신 이자율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에서 높은 차익을 기대하던 투기꾼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은행도 고객의 주식 일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 주었는데, 이러한 신용 구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는 괜찮지만 일단 하락하게 되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주식 시장이 붕괴했을 때 FRB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했으나, FRB는 즉시 통화 팽창 정책을 쓰는 대신 오히려 통화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택하여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야기했다. 그 결과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는 형편없이 냉각되었다. 이것이 주식 시장의 붕괴가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된 과정이다.

공황의 세계적인 확산을 최소화할 국제 신용 체계는 없었는가? 1차 대전으로 중단되었던 국제 금 본위제가 전후에 재건되었으나 그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하였다. 당시 국제 신용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최대 채권국인 미국이었다. 전전의 영국처럼 전후의 미국도 국제 수지 흑자를 보였는데, 그 대부분은 자본 수출에 대한 이자와 전쟁 채무 원리금이었으며 전통적인 보호 무역 정책으로 인한 무역 수지 흑자도 거기에 한몫을 했다. 채무국들이 무역 흑자를 통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금이 미국으로 유입되었다. 만일 금 유입이 통화 공급 증대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면 사태가 달라졌겠지만,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다. 국제 금 본위제는 결코 자동적으로 아니라 강력한 최종 대부자가 유동성과 안정성을 보증해야 작동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전전의 영란은행(Bank of England)과 달리 FRB는 국제 신용망의 유지가 아니라 국내 물가 안정에만 전념하였다. 때문에 FRB는 미국으로 유입된 금을 불태화^{*}함으로써 금 본위제의 국제 규칙을 사실상 지키지 않았다. 미국이 1920년대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좀 더 개방적인 정책을 취했더라면 대공황은 확실히 완화되고 단축될 수 있었을 것이다.

*불태화(sterilization): 할인율을 인상하거나 국공채를 매각함으로써 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기를 억제하는 것.

12. 위 글로부터 당시의 경제 상황을 파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은 국제 신용 체계의 최종 대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 물가 안정에 전념할 수 있었다.
- ② 미국 주식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실질 부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소비도 급감하였다.
- ③ 미국은 1차 대전 이후 금 유입으로 인해 통화 공급 증대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 ④ 다른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전쟁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⑤ 미국의 주택 실수요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13. ⑦과 같이 판단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 ① 어음 평가나 하였을 뿐 호황기에 할인율을 인상하여 통화량을 줄이지 않았다.
- ② 주가 폭락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폭락한 기업에 대해 신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 ③ 주식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할인율을 인상함으로써 은행의 여신 활동을 제약하였다.
- ④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담보 없이 주식 매입 자금을 여신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았다.
- ⑤ 주식 시장이 붕괴했을 때도 여전히 금융 진축 정책을 취하여 물가 하락을 가속시켰다.

14. 다음과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할 때, 대공황의 요인에 대한 위 글의 입장을 약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 ① 전체 소비 감소 규모에서 소득 불균등으로 인한 감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였다.
- ② 주가 폭락 이후의 금융 진축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은 공황 발생 시점 이후였다.
- ③ FRB의 금융 진축이 문제였다고 하지만, 진축 정책의 강도가 주가 폭락 이전과 이후에 서로 달랐다.
- ④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의 소비가 포화 상태였지만, 그것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 ⑤ 국제 신용 체계의 불안정은 어느 한 나라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간에 신뢰와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② 전통적인 신용 중개와 그림자 금융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특 233p

①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신용 중개는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한 뒤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하여 수익을 얻는 과정을 거친다. 대출은 예금에 비해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것이 일반적인데 단기에 비해 장기의 경우에는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은행은 대출로 인해 발생한 원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중서인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므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원이다. 은행의 자금 중개는 예금자, 은행 그리고 대출자로 연결되므로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거쳐 자금이 중개되는 것이다.

②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은행과 유사한 신용 중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은행 시스템 밖에 있어 건전성 규제나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예금자 보호 등과 같은 은행 수준의 규제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금융 회사 또는 금융 상품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의 비은행 금융 회사와 각종 펀드, 신탁, 자산 유동화 증권 등의 금융 상품이 포함된다. 은행은 고객 예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출을 실시하는 반면, 그림자 금융은 대출을 실행하고 받은 대출 채권을 시장에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자금 중개 과정이 은행과는 반대로 진행된다. 이때 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주체를 콘딧(conduit)이라고 한다. 콘딧은 도관, 즉 물이나 석유가 흐르는 파이프처럼 돈이 흘러 다니는 관이라는 의미이다. 콘딧은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어음 등의 단기 금융 상품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를 매입하는 자금은 펀드 등에 맡긴 투자자들의 돈이다. 투자자들의 자금이 콘딧에게 원활히 흘러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콘딧이 발행하는 어음 등을 보증함으로써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주로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금융 회사가 이 업무를 담당한다. 콘딧은 매입하고자 하는 대출 채권들을 묶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하여 신종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이처럼 그림자 금융에서는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만기가 짧은 단기 증권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파는 증권화를 통해 다수의 금융 회사들이 중개 사슬을 만들게 되므로 전통적인 신용 중개보다는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자금이 중개되는 것이다.

신종 증권이 신뢰할 만한가는 결국 그림자 금융이 최초에 실행한 대출의 전전성 여부에 달려 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대출 채권이 불량해지고 신종 증권 역시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종 증권이 어떤 대출과 연계되어 있는지 투자자로서는 알 수가 없어 신용 위험이 높게 평가되므로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었다. 콘딧은 트랜칭(tranching)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통해 신종 증권의 신용 구조를 변경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트랜칭은 신종 증권을 신용도 별로 조각내어 판매하는 증권화 기법으로, 다수의 대출이 동시에 부실화될 확률이 낮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콘딧은 증권화 과정을 거쳐 만든 신종 증권들을 신용도에 따라 신용 등급이 높은 상위 트랜치, 열악한 하위 트랜치로 분할한 뒤

대출 부실에 따른 신용 위험을 하위 트랜치에 집중시켜 상위 트랜치를 보호하고자 한다. 증권화를 통해 총 위험을 줄일 수는 없지만, 트랜칭은 대출 채권의 신용 위험을 하위 트랜치에 집중시켜 위험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상위 트랜치의 신용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만들어 비싸게 팔 수 있다.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하위 트랜치를 매입한 투자자가 가장 먼저 손실을 입게 된다. 이후 부도가 계속 이어져 하위 트랜치 투자자가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상위 트랜치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구조이다.

1년 후에 1억 원을 받는 두 개의 대출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각 대출 채권이 1년 후 부도날 확률은 10%로 동일하며 대출 채권들의 부도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하자. 대출 채권이 부도 처리될 경우 해당 채권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고 하자. 이제 두 개의 대출 채권을 묶어 이를 기초로 신종 증권을 발행한 후 상위 트랜치와 하위 트랜치로 구조화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 상위 트랜치 투자자가 1년 후에 1억 원을 벌을 확률, 즉 회수 확률은 신종 증권의 가치가 1억 원 이상이면 되므로 두 대출 채권이 동시에 부도나지 않으면 1억 원을 확실히 벌게 된다. 두 채권이 동시에 부도가 날 확률은 $0.1 \times 0.1 = 0.01$, 즉 1%^o므로 회수 확률은 99%가 된다. 반면 하위 트랜치 투자자가 1억 원을 벌기 위해서는 각각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나지 않아야 하므로 $0.9 \times 0.9 = 0.81$, 즉 81%가 된다. 상위 트랜치 투자자가 개별 대출을 실행할 경우 1억 원을 벌을 확률, 즉 회수 확률은 90%였으나 신종 증권의 트랜칭에 의해 회수 확률이 99%로 상승하게 된다. 반면 하위 트랜치 투자자는 신종 증권의 트랜칭에 의해 회수 확률이 81%로 개별 대출 채권에 비해 9%포인트 낮은 회수 확률을 감수하게 되며 사실상 하위 트랜치가 부담한 9%포인트의 회수 확률은 상위 트랜치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하면, 상위 트랜치의 가격은 $0.99 \times 1\text{억 원} + 0.01 \times 0\text{원} = 0.99\text{억 원}$ 이 되고, 하위 트랜치의 가격은 $0.81 \times 1\text{억 원} + 0.19 \times 0\text{원} = 0.81\text{억 원}$ 에 거래된다. 트랜칭 기법은 회수 확률이 90%에 불과한 대출 채권은 신용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투자들에게 낮은 신용 위험을 가진 신종 증권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유인을 제공하여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림자 금융은 도입 초기에는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보완하여 금융 효율성과 접근성을 충진함으로써 금융 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림자 금융의 금융 기법은 위험 총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험 구조를 변경하여 개별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위험 부담 수준을 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험 총량을 줄이는 금융 기법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신종 증권 발행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가 감당해야 할 총 위험은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을 가져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그림자 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금융 회사들의 파산으로 그림자 금융이 금융 위기 확산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면서 그림자 금융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요인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콘딜은 일반 투자자가 펀드에 맡긴 자금을 이용하여 단기 금융 상품을 매입한다.
- ② 그림자 금융에서 은행은 콘딜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도를 보강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 ③ 그림자 금융은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신종 증권으로 만들어 시장에 매각한다.
- ④ 신종 증권은 트랜칭 기법을 통해 상위 트랜치의 원리금 회수 확률이 하위 트랜치보다 높아지게 한다.
- ⑤ 신종 증권은 대출 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므로 신종 증권이 가지는 위험의 총량은 증권화로 인해 바뀌지 않는다.

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E)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상관관계란 하나의 확률 변수가 움직일 때 다른 확률 변수가 어떤 형태의 직선 관계를 가지고 선형적으로 움직이는지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를 지표화한 것을 상관계수라고 한다. 상관계수가 양(음)의 값을 가지면 두 변수가 서로 정(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계수는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상관계수가 0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두 확률 변수 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이들은 서로 독립이라고 한다. 두 개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사건의 상관계수가 +1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나머지 대출 채권에서도 반드시 부도가 발생하고, 하나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대출 채권에서도 역시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년 후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채권이 두 개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각각의 대출 채권은 1년 후 부도 확률이 10%로 동일하다. 개별 대출 채권은 부도 시 전액 손실 처리되어 회수 금액은 0원이다. 이를 대출 채권은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알려져 있는 확률 변수이다. 두 대출 채권의 부도 사건의 상관계수는 +1로서 하나의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다른 채권과 동시에 부도가 난다고 알려져 있다. 이제 두 개의 대출 채권을 묶어 이를 기초 자산으로 하여 신종 증권을 발행한 후 상위 트랜치와 하위 트랜치로 구조화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단, 화폐의 시간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신종 증권 회수 금액 (억 원)	회수 확률 (%)	상위 트랜치 투자자가 받는 금액 (억 원)	하위 트랜치 투자자가 받는 금액 (억 원)
2	(A)	1	1
1	(B)	(D)	(E)
0	(C)	0	0

	A	B	C	D	E
①	80	10	10	1	0
②	81	18	1	1	0
③	81	18	1	0.5	0.5
④	90	0	10	1	0
⑤	90	0	10	0	0

3. 윗글을 바탕으로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에 비해 자금 중개 과정이 짧고 단순하다.
- ② ㉠은 ㉡과 달리 예금자 보호 기능이 존재한다.
- ③ ㉠은 ㉡과 달리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와 대출 채권을 보유하는 주체가 동일하다.
- ④ ㉡은 도입 초기에는 ㉠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⑤ ㉡은 ㉠과 달리 대출 채권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금융 회사의 신용 보강이 필요하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그림자 금융의 위험 요인으로는 경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높고 다수의 금융 회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특정 상품이나 금융 회사의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제기된다. 그림자 금융은 채권 등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 자금 조달의 경우는 경기가 호황일 때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고, 불황일 때 채권 발행량이 감소하는 경기 순응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대출 채권의 부도 확률은 경기가 호황일 때는 낮아지는 반면, 불황일 때는 높아지는 경기 역행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대출 채권도 안전한 반면, 경기가 불황일 때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다 대출 채권마저 위험해진다. 대출 채권이 위험해지면 모든 트렌치별 신종 증권의 가격은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 그림자 금융은 자금 조달과 운영의 양면에서 압박을 받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위기가 다른 금융 회사로 연쇄적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은 경기 호황기에는 그림자 금융의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해 자기 자본 대비 부채에 대한 규제 비율을 낮춤으로써 증권화를 억제하는 한편, 경기 불황기에는 이 비율을 완화하여 증권화에 보다 관용적인 정책을 수행하려고 한다. 이와 더불어 규제 당국은 금융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비한 자기 자본의 최소 수준인 규제 비율을 높여 손실 흡수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출 채권과 같은 자산의 부도로 인해 금융 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한다. 특히 다른 금융 회사와의 상호 연계성이 높은 금융 회사에는 일반 금융 회사에 요구하는 자기 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적인 자기 자본을 쌓도록 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레버리지: 자기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로, 금융 회사가 자신의 자금에 비해 타인의 자금을 얼마나 많이 빌려서 사용하는지를 알려 주는 지표임.

- ① 규제 당국의 금융 회사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비율은 경기 역행성을 가질 것이다.
- ② 그림자 금융을 통해 발행한 신종 증권의 가격은 경기 순응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 ③ 규제 당국은 금융 회사 간 상호 연계성이 높은 금융 회사일수록 손실 흡수력을 높이도록 규제할 것이다.
- ④ 규제 이전에 그림자 금융에 의한 신종 증권의 발행 규모는 경기가 불황일 때보다는 호황일 때 더 클 것이다.
- ⑤ 규제 당국은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경기 호황기에는 그림자 금융의 자금 조달의 경기 순응성을 낮추고 불황기에는 경기 역행성을 낮추고자 할 것이다.

가독성을 위해 여백으로 남겨두었다.

[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 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나 '+'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세 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④떨어진다.

CDS는 채권 투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A] 가령 은행 ⑦같은 기업 ⑧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⑨명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⑩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한편 ⑪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 ②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
 - ③ 신용 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 ④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 ⑤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에 수반된다.

6. [A]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 ②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이다.
 - ④ ㉢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이다.
 - ⑤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야만 이득을 본다.

7. <보기>의 ①~④ 중 CDS 프리미엄 이 두 번째로 큰 것은?

- <보기>.

윗글의 ③과 ④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CDS 거래 ⑤~⑧를 비교하여 CDS 프리미엄의 크기에 순서를 매길 수 있다. (단, 기초 자산의 발행자와 보장 매도자는 한국 기업이며, ⑤~⑧에서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CDS 거래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
가)	BB+	AAA
나)	BB+	AA-
다)	BBB-	A-
라)	BBB-	AA-
마)	BBB-	A+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_X 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했다. 발행 즉시 B_X 전량을 매입한 Y는 B_X 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CDS 계약을 Z와 체결하고 보장 매입자가 되었다. 계약 체결 당시 B_X 의 신용 등급은 A-,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였다. 2011년 9월 17일,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B_X 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 2013년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AA+로 변경되었다. 2013년 10월 2일, B_X 의 CDS 프리미엄은 100bp*였다. (단, X, Y, Z는 모두 한국 기업이며 신용 등급은 매월 말일에 변경될 수 있다. 이 CDS 계약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일에 갱신되며 CDS 프리미엄은 매월 1일에 변경될 수 있다.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요인에는 변화가 없다.)

2011. 1. 1.	2011. 9. 17.	2012. 12. 30.	2013. 9. 30.
CDS 계약	X의 재무 상황 안화	X의 지급 능력 개서	Z가 발행한 채권의 시율 등급 변경

*bp: 1bp는 0.01%와 같음.

- ① 2011년 1월에는 B_X 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겠군.
 - ② 2011년 11월에는 B_X 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았겠군.
 - ③ 2013년 1월에는 B_X 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겠군.
 - ④ 2013년 3월에는 B_X 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았겠군.
 - ⑤ 2013년 4월에는 B_X 의 신용 등급이 BB-보다 낮았겠군.

9. 문맥상 ①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이겠으?

- ① 오늘 아침에는 기운이 영하로 떨어졌다.
 - ② 과자 한 봉지를 팔면 내게 100원이 떨어진다.
 - ③ 더위를 먹었는지 입맛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다.
 - ④ 신발이 떨어져서 걸을 때마다 벗물이 스며든다.
 - ⑤ 선생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두 자리에 앉았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 2008년의 미국발 금융 위기와 관련해 ‘증권화’의 역할이 재조명되었다. 증권화란 대출채권이나 부동산과 같이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자산을 시장성이 높은 유가증권으로 전환하는 행위이다. 당시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기관, 곧 모기지 대출기관들은 대출채권을 유동화해 이를 투자은행, 헤지펀드, 연기금, 보험사 등에 매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기지 유동화 증권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누어 들어올 현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고,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광범위한 투자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었다. 증권화는 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금융 혁신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금융 위기가 일어나면서 증권화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당시 모기지 대출기관들은 대출채권을 만기 때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대출 기준을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거나 집값 대비 대출금액이 높았던 비우량(subprime) 모기지 대출이 늘어났는데, 그동안 계속 상승해 왔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채무 불이행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비우량 모기지의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이로부터 파생된 신종 유가증권들이 대형 투자은행 등 다양한 투자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유·유통되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증권화로 인해 보다 안전해졌다는 과신 속에서 과도한 차입을 통해 투자를 크게 늘렸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점으로 유가증권들의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연쇄 도산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화를 확대한 금융기관과 이를 허용한 감독당국에 비판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 위기의 원인이 증권화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개입에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었다.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을 긍정하는 이 ‘정부 주범론’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심화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해결하려던 것이 금융 위기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불평등 심화의 근본 원인은 기술 변화와 세계화이므로 그 해법 또한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확대 등의 정책에서 찾아야 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저소득층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저소득층이 빚을 늘려 집을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미봉책을 펼쳤는데, 그로 인해 주택 가격 거품이 발생했고 마침내는 금융 위기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거론된 것이 바로 지역재투자법이다.

지역재투자법이란 저소득층의 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은행들로 하여금 낙후 지역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정부 주범론’은 이 법으로 인해 은행들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들에게까지 주택 자금 대출을 늘려야 했고, 이것이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정부 주범론’은 여기에 더해 지역재투자법의 추가적인 파급 효과에도 주목한다. 금융기관들은

지역재투자법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심사 관련 기강이 느슨해졌고 지역재투자법과 무관한 대출에 대해서까지도 대출 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주택 가격 거품을 키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정부 주범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주장이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⑦‘정부 주범론’을 반박하는 다양한 논거들이 ‘규제 실패론’의 이름으로 제시되었고, ‘정부 주범론’의 정치적 맥락도 새롭게 조명되었다. ‘규제 실패론’은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차입 및 증권화가 이들의 적극적인 로비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흐름이 실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했다고 주장한다. ‘규제 실패론’은 또한 지난 삼십 년 동안 소득 분배가 계속 불평등해지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소득을 얻게 된 부유층이 특히 금융에 대한 투자와 감세를 통해 부를 한층 키워 왔던 구조적 특징과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에도 주목한다. 저소득층의 부채란 정치권의 온정주의가 아니라 부유층과 금융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늘어났던 것이라는 이 지적은 불평등의 심화와 금융 위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10. 위 글에 나타난 입장들에 관한 진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부 주범론'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경제 주체들의 판단을 오도했다고 본다.
- ② '정부 주범론'은 정치권이 지역재투자법으로 저소득층의 표를 얻으려 했다고 본다.
- ③ '규제 실패론'은 금융과 정치권의 유착 관계를 비판한다.
- ④ '규제 실패론'은 가계 부채 증가가 고소득층의 투자 기회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 ⑤ '정부 주범론'과 '규제 실패론'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11. '증권화'와 관련한 다음의 추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증권화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연계된 증권의 투자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일부 투자자에 한정되었을 것이다.
- ② 증권화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을 낮추어 주는 혁신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체 금융권의 위험을 높였을 것이다.
- ③ 모기지 채권의 증권화는 보다 많은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거품을 키웠을 것이다.
- ④ 부동산 시장과 유동화 증권의 현금화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적 전망으로 인해 증권화가 확대되었을 것이다.
- ⑤ 증권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 위기를 발생시켰던 대출기준 완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지역재투자법에는 저소득층에 대해 다른 계층보다 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더 높게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있다.
- ②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은 지역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반 대출의 연체율보다 높았다.
- ③ 부동산 가격 거품을 가져온 주된 요인은 주택 가격의 상승보다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었다.
- ④ 지역재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대출들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비중은 낮았다.
- ⑤ 지역재투자법과 유사한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도 금융 위기가 발생하였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거에 일어난 금융위기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어도 그 원인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금융위기가 여러 차원의 현상이 복잡하게 얹혀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이나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은행위기를 중심으로 금융위기에 관한 주요 시각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이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로 어떤 시각에 기초해서 금융위기를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의견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은행의 지불능력이 취약하다고 많은 예금주들이 예상하게 되면 실제로 은행의 지불능력이 취약해지는 현상, 즉 ① '자기실현적 예상'이라 불리는 현상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예금주들이 예금을 인출하려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이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부분준비제도는 현대 은행 시스템의 본질적 측면이다. 이 제도에서는 은행의 지불능력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예금주들의 예상이 바뀌면 예금 인출이 쇄도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예금은 만기가 없고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독특한 성격의 채무이기 때문에, 지불능력이 취약해져서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 사람이라면 남보다 먼저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금 인출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예금 인출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은행들은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앞다투어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은행들의 지불능력이 실제로 낮아진다.

둘째, ② 은행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은 회사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자산의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존재이고 통상적으로 유한책임을 진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 가치가 부채액보다 더 커질수록 주주에게 돌아올 이익도 커지지만,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주주의 손실은 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③ 비대칭적인 이익 구조로 인해 수익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위험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된 주주들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선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주주들이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채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인데,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이러한 동기는 더욱 강해진다. 은행과 같은 금융 중개 기관들은 대부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주식회사 형태를 띤다.

셋째, ④ 은행가의 은행 약탈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은행의 부실을 과도한 위험 추구의 결과로 이해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은행가들에 의한 은행 약탈의 결과로 은행이 부실해진다는 인식도 강해지고 있다. 과도한 위험 추구는 은행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은행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큰 행위를 은행가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은행 약탈은 은행가가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추구하여 은행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가들이 자신이 지배하는 은행으로부터 남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장기적으로 은행에 손실을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과급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인 성과만을 추구하는 행위 등은, 지배 주주나 고위 경영자의 지위를 가진 은행가가 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약탈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⑤ 이상 과열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위의 세 가지 시각과 달리 이 시각은 경제 주체의 행동이 항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관찰에 기초하고 있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자산 가격이 일정 기간 상승하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고, 일정 기간 하락하면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자산 가격 상승은 부채의 증가를 낳고 이는 다시 자산 가격의 더 큰 상승을 낳는다. 이러한 상승작용으로 인해 거품이 커지는 과정은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 금융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게 되므로, 거품이 터져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금융위기가 일어날 현실적 조건을 강화시킨다.

13. ⑦~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은 은행 시스템의 제도적 취약성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예금주들의 행동에 주목하여 금융위기를 설명한다.
- ② ⑧은 경영자들이 예금주들의 이익보다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전제 하에 금융위기를 설명한다.
- ③ ⑨은 은행의 일부 구성원들의 이익 추구가 은행을 부실하게 만들 가능성에 기초하여 금융위기를 이해한다.
- ④ ⑩은 경제 주체의 행동에 대한 귀납적 접근에 기초하여 금융위기를 이해한다.
- ⑤ ⑦과 ⑩은 모두 경제 주체들의 예상이 그대로 실현된 결과가 금융위기라고 본다.

14. ①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산한 회사의 자산 가치가 부채액에 못 미칠 경우에 주주들이 져야 할 책임은 한정되어 있다.
- ② 회사의 자산 가치에서 부채액을 뺀 값이 0보다 클 경우에, 그 값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몫이 된다.
- ③ 회사가 자산을 다 팔아도 부채를 다 갚지 못할 경우에, 얼마나 많이 못 갚는지는 주주들의 이해와 무관하다.
- ④ 주주들이 선호하는 고위험 고수익 사업은 성공한다면 회사가 큰 수익을 얻지만, 실패한다면 회사가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 ⑤ 주주들이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선호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회사의 자산 가치와 부채액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15. 잊글에 제시된 네 가지 시각으로 <보기>의 사례를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980년대 후반에 A국에서 장기 주택담보 대출에 전문화한 은행인 저축대부조합들이 대량 과산하였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주목받았다.

- 1970년대 이후 석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저축대부조합들의 과산이 가장 많았다.
-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보고 앞으로도 자산 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것을 예상하고 빚을 얹어 자산을 구입하는 경제 주체들이 늘어났다.
- A국의 정부는 투자 상황을 낙관하여 저축대부조합이 고위험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 예금주들이 주인이 되는 상호회사 형태였던 저축대부조합들 중 다수가 1980년대에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였다.
- 과산 전에 저축대부조합의 대주주와 경영자들에 대한 보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 ① ⑦은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채권에 투자한 정도와 고위 경영자들에게 성과급 형태로 보상을 지급한 정도가 비례했다는 점을 들어, 은행의 고위 경영자들을 비판할 것이다.
- ② ⑧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예금주들이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빚을 늘려 은행이 위기에 빠진 점을 들어, 예금주의 과도한 위험 추구 행태를 비판할 것이다.
- ③ ⑨은 저축대부조합들이 주식회사로 전환한 점을 들어, 고위험채권 투자를 감행한 결정이 궁극적으로 예금주의 이익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은행을 옹호할 것이다.
- ④ ⑩은 저축대부조합이 정부의 규제 완화를 틈타 고위험채권에 투자하는 공격적인 경영을 한 점을 들어, 저축대부조합들의 행태를 용인한 예금주들을 비판할 것이다.
- ⑤ ⑪은 차입을 늘린 투자자들, 고위험채권에 투자한 저축대부조합들, 규제를 완화한 정부 모두 낙관적인 투자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점을 들어, 그 경제 주체 모두를 비판할 것이다.

16. ⑦~⑩에 따른 금융위기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행이 과산하는 경우에도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 보험 제도는 ⑦에 따른 대책이다.
- ②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예금은 예금 보험 제도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⑧에 따른 대책이다.
- ③ 은행들로 하여금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건전성 규제는 ⑨에 따른 대책이다.
- ④ 금융 감독 기관이 은행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들의 금융 거래에 대해 공시 의무를 강조하는 정책은 ⑩에 따른 대책이다.
- ⑤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서민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질 때 담보 가치 대비 대출 한도 비율을 줄이는 정책은 ⑪에 따른 대책이다.

4. 투자와 금융 상품

① 이익률과 레버리지 효과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완 25p

기업의 활동을 평가하거나 투자를 위한 판단을 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은 '이익률'이다. 이익률은 기업이 얻은 이익을 분자로 놓고 그것을 기준치로 나눈 값이다. 그런데 이익은 정의 방법에 따라 다양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익률도 달라진다.

기업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익은 '영업 이익'이다. 영업 이익은 일정 기간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등의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을 말한다. '영업 이익률'은 '영업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일반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영업 이익률이 높다.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영업 이익률을 많이 보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영업 이익이 크면 기업의 실적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금융 비용이나 투자 손익, 외환 거래에서의 환차 손익 등과 같은 요소는 ④빠져 있다. 영업 이익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가감한 이익을 '경상 이익'이라고 한다. 일례로 부채가 많은 기업의 경우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영업 이익은 혹자라 하더라도 경상 이익은 적자가 될 수 있다. 한편 기업에도 세금이 부과되며, 우발적 원인에 의해 생기는 특별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경상 이익에 특별 손익을 더한 후 세금을 빼면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인 '순이익'을 구할 수 있다.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 순이익률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기업의 활동을 자산을 투입하여 이익을 얻는 것으로 파악하면, 이익은 투입된 자산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익을 어떻게 정의했든 이익을 투입된 총자산으로 나누면 총자산 이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익을 순이익으로 본다면 총자산 순이익률 = $\frac{\text{순이익}}{\text{총자산}}$ 이 되는데, 이 식에서 분모 분자에 매출액을 곱하여

변형해 본다면 총자산 순이익률 = $\frac{\text{순이익}}{\text{매출액}} \times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다. 이때 $\frac{\text{순이익}}{\text{매출액}}$ 은 '순이익률'이고,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은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한다. 총자산 회전율은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을 이용하여 매출액을 얼마나 창출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이다. 총자산 회전율이 높다면 기업은 보유 자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공식에 따르면 총자산 순이익률은 순이익률과 총자산 회전율에 비례한다.

기업의 총자산은 자기 자본과 타인에게서 빌려 온 부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분모인 순이익은 총자산 순이익률 공식에서 '총자산×총자산 순이익률'로 나타낼 수 있다. 분모인 자기 자본은 '총자산×(1-타인 자본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분모와 분자에서 총자산을 소거하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frac{\text{총자산 순이익률}}{(1-\text{타인 자본 비율})}$ 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 공식에서 보면 총자산 순이익률이 일정할 때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자기 자본의

비율이 낮을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⑤타인의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레버리지 효과'의 원리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100의 자기 자본으로 공장을 세워 10의 순이익을 얻었다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10%이다. 그런데 만약 이 공장을 자기 자본 50과 타인의 자본 50으로 세웠다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20%가 된다. 타인의 자본을 끌어올 경우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순이익이 보장된다면 타인 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높아진다. 그렇지만 타인 자본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자 비용이 커지게 되며 손실이 생길 때의 위험 또한 크다. 특히 불황이나 금리 상승기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⑥기업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1.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총자산이 같다면 매출액이 큰 기업의 총자산 회전율이 높다.
- ② 매출액이 같다면 영업 이익이 더 큰 기업이 영업 이익률도 높다.
- ③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같은 기업 간에도 경상 이익은 다를 수 있다.
- ④ 자기 자본 비율이 낮고 부채가 많을수록 기업의 영업 이익은 작아진다.
- ⑤ 기업이 세금을 납부했고 특별 손익이 없다면 순이익은 경상 이익보다 작다.

2. Ⓐ가 나타날 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
- ②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을 때보다 경상 이익이 늘어난다.
- ③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높아진다.
- ④ 총자산 순이익률의 증가로 인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높아진다.
- ⑤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타인 자본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A 기업은 자기 자본 10억 원과 타인 자본 40억 원으로 설립되어 영업 활동을 하였다. A 기업의 2022년 매출액은 50억 원이고, 영업 이익은 10억 원이었다.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는 5%인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법인세로 2억 원을 납부한 후의 순이익은 6억 원이었다.(단, 이자로 지급한 금액과 법인세 외의 다른 금융 비용이나 손익도 없으며, 영업 이익이 같다면 법인세도 같다고 가정한다.)

- ① 2022년 A 기업의 총자산 회전율은 5이다.
- ② A 기업의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총자산 순이익률보다 크다.
- ③ 이자율이 10%였다면 A 기업의 총자산 순이익률은 높아졌을 것이다.
- ④ A 기업의 총자산 50억 원이 모두 자기 자본이었다면 순이익은 감소했을 것이다.
- ⑤ A 기업이 2023년에 타인 자본을 10억 원 늘리고도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2022년과 같았다면, 영업 이익률은 내려가고 순이익률은 높아질 것이다.

4.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황이나 금리 상승기에는 타인 자본을 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
- ② 금리가 인상되면 부채를 줄이고 자기 자본의 비율을 높이려는 경향이 강해져 자기 자본 이익률은 낮아지기 때문
- ③ 불황이나 금리 상승기에 손실이 생긴 기업은 경기 상황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발생한 손실을 메울 수가 없기 때문
- ④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에 투자하였던 자금들이 은행으로 몰리게 되므로 기업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
- ⑤ 불황이나 금리 상승기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금융 비용이 증가하여 자기 자본 순이익률의 하락이 커질 수 있기 때문

5.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
- ② 오늘 장사만으로도 본전은 빠질 것 같다.
- ③ 공에 바람이 빠져서 제대로 찰 수가 없다.
- ④ 준비물 중 빠진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보아라.
- ⑤ 그 소식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말았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07.

여유 자금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재무비율 분석이 필수적이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에 따른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표시한 재무 보고서를 말한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를 활용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의 기업의 수익 규모와 수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제시된 포괄손익계산서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 상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 지분인 자본^{*}을 통해 알 수 있다. 자산은 현금과 토지, 건물 등과 같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부채란 갚아야 할 돈으로 흔히 말하는 빚이다. 자본은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과 자본 거래 및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여 축적된 이익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이 자산을 활용해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및 기타 비용 전부를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을 알 수 있다.

재무제표에 표시된 숫자들은 숫자 그 자체보다는, 다른 숫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는 기간별로 그 숫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에 표시된 숫자들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재무비율 분석을 해야 한다. 재무비율 분석 중 널리 쓰이는 비율로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있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주주가 투자한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보여 주는 지표로 당기순이익을 평균자기자본으로 나눈 후 배분율로 환산하면 구할 수 있다. 미국의 화학 기업인 듀퐁은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활용하여 재무제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인 ‘듀퐁 ROE 분해’를 창안했다. 듀퐁 ROE 분해에 따르면 자기자본순이익률은 매출액순이익률과 자산회전율 그리고 재무레버리지를 곱한 값과도 같으므로 이 세 가지로 분해하여 각각의 재무비율을 파악하면 기업의 수익성, 효율성, 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듀퐁 ROE 분해 중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수익성 지표이다. 만약 1,00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아서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료 등을 다 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 120만 원이라면 매출액순이익률은 12%가 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한 회계 기간 동안의 매출액 중 당기순이익의 비중을 보여 주어서 산업별 평균값이나 다른 기업과 비교해 보면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수익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듀퐁 ROE 분해 중 ‘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자산의 효율성 지표이다. 자산회전율이 높으면

기업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 A와 B 모두 매출액이 1,000만 원이고 A와 B의 평균총자산이 각각 1,000만 원과 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자산이 B는 4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A는 B의 2.5배인 1,000만 원이다. 따라서 A와 B의 자산회전율은 각각 1과 2.5로 B가 A에 비해 자산의 이용이 2.5배 효율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듀퐁 ROE 분해 중 **재무레버리지**는 평균총자산을 평균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안정성 지표이다. 재무레버리지가 높아지면 기업의 안정성은 낮아진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 재무레버리지가 높을 경우 그 기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상승한 기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높은 재무레버리지에 의한 것은 아닌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무레버리지를 산업별 평균값 또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기업의 안정성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

A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이 10이고 자산회전율(회)이 2, 재무레버리지가 2라고 한다면 A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40%(10×2×2)가 된다. 따라서 듀퐁 ROE 분해는 다른 기업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을 비교하거나 각 기업을 수익성, 효율성, 안정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도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기 상황 등에 따라 재무비율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자본: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만의 자산, 즉 순자산을 회계 용어로 자본이라고 부르며, 타인자본인 부채와 구분하여 자기자본이라고도 함.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재무제표의 개념을 제시한 후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 ②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 원칙을 밝히고, 재무비율 분석이 갖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듀퐁사가 ROE 분해를 창안한 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재무비율 분석의 의의를 고찰하고 있다.
- ④ 듀퐁 ROE 분해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무비율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재무제표를 투자의 방식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9~10] <보기>는 재무제표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단위: 억 원)

구분	과목	A기업	B기업	
		2018년	2017년	2018년
재무상태표	평균총자산	200	100	200
	부채	100	50	150
	평균자기자본	100	50	50
포괄손익	매출액	500	100	400
	계산서	당기순이익	20	10
매출액순이익률 (%)		ⓐ	10	5
자산회전율 (회)		ⓑ	1	2
재무레버리지		ⓒ	2	4
자기자본순이익률 (%)		ⓓ	20	40

* 회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보고 기간은 매년 12월 31일임.

* 재무제표 수치 이외에 어떤 외적 요인도 고려하지 않음.

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재무제표를 보면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② 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를 활용하면 그 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듀퐁 ROE 분해를 활용하면 기업의 수익성과 효율성, 안정성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보면 그 기업의 안정성 지표를 알 수 있다.
- ⑤ 기업의 자산회전율이 높으면 기업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다음은 A기업의 경영 성과에 관한 회의 기록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김과장: ⓐ에 해당하는 값은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이므로 4%입니다. ①
- 최대리: ⓐ에 해당하는 값이 2018년의 B기업보다 낮은 상황인데, 그 이유는 매출액이 B기업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②
- 민부장: ⓑ에 해당하는 값을 보면, 2018년의 우리 기업은 2018년의 B기업보다 자산이 2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③
- 박사원: ⓒ에 해당하는 값은 2로, 2018년의 B기업에 비해 안정적입니다. 산업별 평균값이나 다른 기업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④
- 정사장: 2018년 재무제표를 보니, 우리 기업의 ⓓ에 해당하는 값은 2017년의 B기업과 같군요. ⑤

8. 재무레버리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채가 일정할 경우 평균총자산이 증가하면 재무레버리지가 높아진다.
- ② 부채가 일정할 경우 평균자기자본이 증가하면 재무레버리지가 높아진다.
- ③ 평균자기자본이 일정할 경우 부채가 증가하면 재무레버리지가 높아진다.
- ④ 평균자기자본이 일정할 경우 재무레버리지가 낮아지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진다.
- ⑤ 평균총자산이 일정할 경우 평균자기자본이 증가하면 재무레버리지가 높아진다.

10.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2018년의 B기업은 2017년에 비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및 기타 비용을 전부 차감한 금액이 감소하였다.
- ② 2018년의 B기업은 2017년에 비해 주주가 투자한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 ③ B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안정성 지표만을 중시한다면 2019년에는 B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고 할 것이다.
- ④ B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수익성 지표만을 중시한다면 2019년에는 B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 ⑤ B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자산의 효율적 이용만을 중시한다면 2019년에는 B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04.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영업비와 기업이 타인의 자본을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재무비로 구성된다. 영업비는 다시, 원재료 구입비, 소모품비 등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영업변동비와 설비나 사무실의 임차료 및 유지비용, 직원의 임금 등 생산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인 영업고정비로 구분된다. 영업고정비는 기계 설비의 구입, 공장 신설, 시설 확장 등과 같이, 기업이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⑦ 지렛대의 역할을 하여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

그런데 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는 때로 영업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영업위험은 기업의 영업 성격이나 영업비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영업이익의 변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에 기업은 투자 정책이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도구가 필요한데, 이때 이용되는 도구가 바로 영업레버리지도이다. 영업레버리지도는 기업의 매출액이 변동할 때 영업이익이 변동하는 정도로, 영업이익에 대한 공현이익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공현이익이란 매출이 실제로 기업의 이익에 얼마만큼 공현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매출액에서 영업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고, 영업이익이란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현이익에서 영업고정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수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영업레버리지도} = \frac{\text{공현이익}}{\text{영업이익}} = \frac{\text{매출액} - \text{영업변동비}}{\text{매출액} - \text{영업변동비} - \text{영업고정비}}$$

위 수식은 영업고정비가 클수록 영업레버리지도가 커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영업고정비가 클수록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매출액이 10억 원, 영업변동비가 6억 원, 영업고정비가 2억 원이라면, 이 기업의 공현이익은 매출액에서 영업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인 4억 원이 되며,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영업변동비와 영업고정비를 차감한 금액인 2억 원이 된다. 따라서 이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공현이익인 영업레버리지도는 2가 되며, 이는 10%의 매출액 증감이 있을 때, 영업이익은 그 2배인 20%의 증감이 됨을 뜻한다.

영업고정비가 증가할 경우 영업이익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은 생산 규모의 확대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게 되고 단위생산원가는 훨씬 저렴하게 되어, 매출액이 증가할 때, 종전의 소규모 생산 시설을 유지할 때보다 영업이익의 증가 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출액이 감소할 때에는 영업고정비의 부담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의 감소 폭이 더 커진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영업고정비가 증가하면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업고정비가 증가할수록 매출액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 폭이 확대된다는 사실은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사업 전망과 관련지어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 전망이 밝은 기업이 영업레버리지도가 높으면 이익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업 전망이 흐린 기업이 영업레버리지도가 높으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둘째, 시설 투자 혹은 생산 방식의 전환은 기업의 자산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비용 구조를 변화시킨다. 즉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문제는 영업레버리지 효과의 변화를 가져와 영업위험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영업고정비를 증가시키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1.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기업의 시설 투자는 영업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②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비용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 ③ 기업이 비유동자산을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은 사업 전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 ⑤ 기업의 생산 규모 확대가 매출액의 증감에 따라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2. 문맥을 고려할 때 ①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업의 영업비와 재무비의 비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군.
- ② 기업의 공헌이익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군.
- ③ 규모의 경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군.
- ④ 매출액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 폭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군.
- ⑤ 기업의 영업 성격과 관계없이 기업의 이익을 언제나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군.

13. 영업레버리지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업이 소모품비를 많이 사용할수록 영업레버리지도는 점점 감소한다.
- ② 기업이 영업위험의 감소를 위해 비유동자산을 처분하면 영업레버리지도는 감소한다.
- ③ 기업의 생산 시설을 확장하여 생산 규모가 커지면 영업레버리지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④ 기업의 투자 정책을 판단하기 위해 단위생산원가를 측정하는 도구인 영업레버리지도를 활용한다.
- ⑤ 기업의 영업이익과 공헌이익이 같을 때의 영업레버리지도에 따르면 영업레버리지 효과는 증가한다.

14.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기업은 작년에 A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 개당 10,000원에 100만 개를 판매하였고, 영업변동비는 개당 9,000원을 유지하였다. 올해는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 B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였다. B 생산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100만개의 제품을 판매할 때 영업변동비는 개당 2,000원이 감소하여 7,000원이 되지만, 20억 원의 영업고정비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예측 결과를 얻었다. 다음은 두 생산 방식의 판매량이 10% 증감했을 때를 가정한 표이다.

	A 생산 방식			B 생산 방식		
	판매량 증감률(%)	-10	0	+10	-10	0
판매량(만 개)	90	100	110	90	100	110
매출액(억 원)	90	100	110	90	100	110
영업변동비(억 원)	81	90	99	63	70	77
영업고정비(억 원)	0	0	0	20	20	20

- ① ○○ 기업이 A 생산 방식을 유지한다면 영업레버리지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겠군.
- ② ○○ 기업이 B 생산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영업이익은 감소하겠군.
- ③ ○○ 기업이 B 생산 방식으로 전환한 후 판매량이 1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30% 증가하겠군.
- ④ ○○ 기업이 올해의 사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측한다면 A 생산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겠군.
- ⑤ ○○ 기업이 A 생산 방식을 유지한다면 영업비는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만으로 구성되겠군.

[15~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①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②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③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④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⑤ 멀랑밀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⑥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15.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16.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법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17.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 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②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 ③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 ④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 ⑤ 바젤 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18.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 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채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 ①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 ②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 ④ 갑 은행이 바젤 I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 ⑤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19. ⑦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 ③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 ④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20. 문맥상 ①~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② ② : 8%가 넘도록
- ③ ③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 ④ ④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 ⑤ ⑤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② 채권의 발행 및 가격 결정 방식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특 147p

채권은 정부, 지방 자치 단체, 특수 법인 또는 주식회사와 같은 발행자가 투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무 증서를 말하고 채권 시장은 이러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품들은 하나의 상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데 반해, 투자 자산을 거래하는 채권 시장은 신규로 발행된 채권이 최초로 거래되는 발행 시장과 이미 발행된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자들 간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통 시장으로 구분된다. 채권이 최초로 발행되어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발행 시장에서의 채권 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은 유통 시장에서의 그것과는 상이하게 이루어진다. 채권의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은 가끔 도매 시장과 소매 시장에 빗대어 설명되기도 한다. 이처럼 채권 시장을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이 발행 시장에 참가하여 물량을 확보한 뒤 이를 유통 시장에서 일반 투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경험에 따른 것이다.

채권 발행 시장에서의 거래 방식은 매수인의 특성 및 자금의 규모에 따라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으로 구분된다. 사모 발행은 발행자가 특정 투자자와의 사적인 교섭을 통해 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주로 소규모의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반면 공모 발행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자가 당초 의도한 발행 규모에 비해 시장에서 소화되어 매출되는 규모가 적어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잠재하므로 사모 발행에 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한편 공모 발행은 발행 위험의 귀속 여부에 따라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직접 발행은 채권 공모와 관련한 발행 위험을 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고, 간접 발행은 중개 회사가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발행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간접 발행은 중개 회사가 발행 위험을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총액 인수와 잔액 인수 방식으로 다시 구분된다. 총액 인수는 중개 회사가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채권 발행 총액을 인수한 후 일반 투자를 대상으로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중개 회사의 인수 가격과 일반 투자의 판매 가격 간의 차이는 중개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잔액 인수는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일차적으로 발행자의 명의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다음 판매되지 못한 잔여분에 한해 중개 회사가 인수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총액 인수의 경우 중개 회사는 채권 발행 전액을 자기 명의로 구입해야 하므로 많은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까지 채권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발행자로부터 잔액 인수의 경우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간접 발행의 경우 중개 회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자가 직접 발행보다는 간접 발행을 더 선호하는데 이는 발행 위험을 분담하는 것과 더불어 중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판매망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채권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에는

채무 불이행과 같은 신용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채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투자는 발행자보다는 신용 있는 중개 회사를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자는 비록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간접 발행을 선택하게 된다.

한편 채권 유통 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으로 구분된다. 장내 시장은 거래소 내에서 다수의 투자가 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반면 장외 시장에서는 거래소 밖에서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가격 탐색 후 증권 회사의 중개를 통한 양자 간 매매가 체결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형성된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만기가 있는 금융 상품으로, 비록 발행자가 동일하더라도 표면 금리나 만기 상환일, 이자 지급 방식 등에 따라 종목이 다양하므로 표준화가 어려워 장내보다는 주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역시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은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 시장과는 달리 발행 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은 경매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채권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되도록 낮은 가격에 채권을 매입하여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응찰 또는 입찰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입찰 조건으로는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을 제시하게 된다. 입찰 금리를 투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리 호가 단위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입찰 결과 채권을 배정받는 경우를 낙찰되었다고 하고 이 경우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은 낙찰 금리 및 낙찰 금액이 된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 관계를 가지므로, 채권 발행자는 되도록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에게 채권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면서 발행 물량을 소화해 나간다. 입찰에서의 경쟁이 높아질수록 입찰 금리는 낮아지게 된다. 발행된 채권 물량은 입찰 금리가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올라가면서 입찰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단계적으로 배정된다. 채권 발행액이 모두 소화되는 경우는 그 수준에서의 입찰 금리를, 모두 소화되지 않을 경우 입찰 금리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최고 낙찰 금리라고 부른다.

발행 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되고 경매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응찰률을 충분히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경매 방식에는 단일 가격, 복수 가격 및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이 존재한다. 단일 가격 낙찰 방식에서는 최고 낙찰 금리를 경매 청산 금리로 정하여 낙찰된 모든 물량에 이 금리를 적용하는 반면, 복수 가격 낙찰 방식의 경우는 개별 투자가 제시한 금리에 인수 금액을 적용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채권 물량을 소화해 나간다. 한편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단일 가격과 복수 가격 낙찰 방식을 혼합한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단일 가격 낙찰의 방식대로 최고 낙찰 금리를 결정한 후 그 이하의 응찰 금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화하고 각 그룹 내에서의 최고 금리를 그룹 내의 모든 인수 금액에 동일하게 적용해 그룹별로는 상이한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입찰 시에 금리를 제시하는 단위, 즉 금리 호가 단위가 0.05% 포인트이고 최고 낙찰 금리가 5.00%이며 그룹 내 금리 간격이 0.1%포인트라고 하면 차등 금리 구간은 [5.00%~4.90%], [4.85%~4.75%], [4.70%~4.60%] 등과 같이 그룹화되고, 그룹별로 적용되는 낙찰 금리는 각 그룹의 최고 금리인 5.00%, 4.85%, 4.70% 등이 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채권 발행 시장은 투자자 특성 및 자금 규모에 따라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으로 구분된다.
- ② 채권 발행 시 과소 판매에 대한 발행 위험은 공모 발행보다는 사모 발행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 ③ 채권 발행에서 잔액 인수의 경우에는 총액 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아 수수료도 적다.
- ④ 채권은 발행자가 같더라도 상품 특성상 표준화가 어려우므로 장내보다는 장외 시장에서의 거래가 보편화되어 있다.
- ⑤ 경매를 통해 채권의 발행 가격이 결정될 때 채권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경매 방식은 단일 가격 낙찰 방식이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갑국 정부는 1,000억 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발행하고자 한다. 국채 경매에는 A~F까지 6개의 금융 회사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입찰 조건은 아래와 같다.

금융 회사	입찰 조건	
	입찰 금리(%)	입찰 금액(억 원)
A사	5.05	200
B사	5.04	200
C사	5.03	100
D사	5.02	200
E사	5.00	200
F사	4.99	200

갑국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국채 경매의 낙찰 방식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다. 만약 갑국 정부가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을 국채 경매 방식으로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룹 내 금리 간격을 0.02%포인트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 ① 단일 가격 낙찰 방식에서의 경매 청산 금리는 5.05%이다.
- ② 갑국의 국채 금리 호가 단위는 0.01%포인트 이하이다.
- ③ A사의 낙찰 금리는 경매 방식에 관계없이 5.05%이다.
- ④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D사에게 적용되는 낙찰 금리는 5.02%이다.
- ⑤ F사가 최종적으로 배정받는 국채 금액은 100억 원이다.

3. 윗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권 종목의 표준화가 쉬워질수록 장내 시장에서의 거래는 더 활성화될 것이다.
- ② 차등 가격 낙찰 방식에서 그룹 내 금리 간격이 커질수록 채권 발행자의 수익은 높아질 것이다.
- ③ 채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될수록 공모 발행에서 직접 발행의 비중은 증가할 것이다.

- ④ 중개 회사의 선정 시 잔액 인수에 비해 총액 인수의 경우 중개 회사의 자금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⑤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요구와 높은 가격으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자의 요구를 결합한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채권 경매에서 응찰률은 발행 예정 물량 대비 응찰 물량을 의미한다. 발행 예정 물량이 모두 낙찰되기 위해서는 응찰률이 100% 이상 되어야 하며, 채권 발행자에게 유리한 낙찰 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응찰률이 높아야 한다. 발행자에게 있어서 낮은 응찰률은 당초 예상한 정도의 자금이 조달되지 못하는 과소 판매와 더불어 불리한 입찰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저조한 응찰률은 발행 시장에서의 경쟁이 (Ⓐ)된 상태인 것을 의미하므로 낙찰 금리를 (Ⓑ) 시켜 채권 투자자에게는 투자 수익률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담합 등의 전략적 행동을 통해 응찰 물량을 조절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 발행자는 자체적으로 내정 수익률을 정한 뒤 이보다 (Ⓓ) 입찰 금리를 제시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되도록 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 | | | | |
|------|----|----|----|
| Ⓐ | Ⓑ | Ⓒ | Ⓓ |
| ① 심화 | 상승 | 하락 | 높은 |
| ② 심화 | 하락 | 상승 | 낮은 |
| ③ 심화 | 하락 | 상승 | 높은 |
| ④ 약화 | 상승 | 상승 | 낮은 |
| ⑤ 약화 | 하락 | 상승 | 높은 |

5.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채권의 발행 시장에서 입찰 금리와 이에 따른 채권 가격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 ② 채권의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방식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가?
- ③ 채권의 유통 시장에서 장외 거래가 장내 거래보다 더 일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④ 채권의 발행 시장에서 채권 가격 결정 시 상이한 낙찰 방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⑤ 채권의 공모 발행에서 중개 회사를 통한 간접 발행이 직접 발행보다 선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11.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 %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⑦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⑧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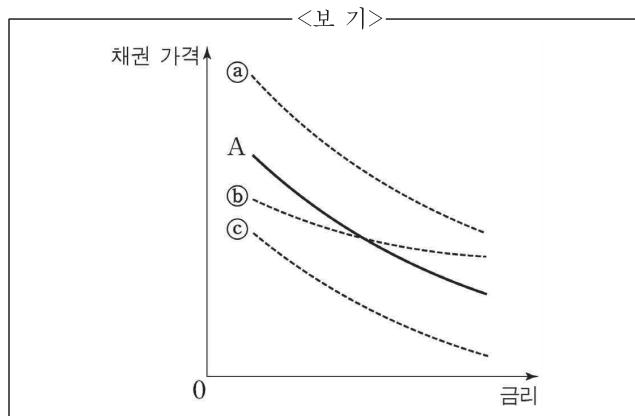
6.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채권의 지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고 있다.
- ③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채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금리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그 종류를 들고 있다.

7.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 금액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 ② 채권의 순수익은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합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 ③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 ④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 ⑤ 일반적으로 지급 불능 위험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액면 이자율이 높다.

8. <보기>의 A는 어떤 채권의 가격과 금리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 글의 ⑦과 ⑧에 따른 A의 변화 결과를 바르게 예측한 것은?



- | | <u>㉠</u> | <u>㉡</u> |
|---|----------|----------|
| ① | (a) | (c) |
| ② | (b) | (a) |
| ③ | (b) | (c) |
| ④ | (c) | (a) |
| ⑤ | (c) | (b) |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03.

국채는 정부가 부족한 조세 수입을 보전하고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 증서이다. 이 중 국고채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한 수단이며, 채권 시장을 대표하는 상품이다. 만기일에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지금하는 국고채는 관련 법률에 따라 발행된다. 발행 주체인 정부는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낮은 금리를 선호하며, 매입 주체인 투자자들은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하여 높은 금리를 선호한다. 국고채의 금리는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데, 경쟁 입찰은 금리 결정 방법에 따라 크게 '복수금리결정방식'과 '단일금리결정방식'으로 나뉜다.

※ 발행 예정액 : 800억 원

투자자	제시한 금리와 금액	결정 방식	
		복수금리	단일금리
A	4.99% 200억 원	4.99%	
B	5.00% 200억 원	5.00%	
C	5.01% 200억 원	5.01%	모두
D	5.03% 100억 원	5.03%	
E	5.05% 100억 원	5.05%	
F	5.07% 100억 원	미낙찰	미낙찰

복수금리결정방식은 각각의 투자자가 금리와 금액을 제시하면 최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낙찰된 금액의 합계가 발행 예정액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부터 낙찰자로 결정된다. 이때 국고채의 금리는 각각의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로 결정된다. 표와 같이 발행 예정액이 800억 원인 경쟁 입찰이 있다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A부터 E까지 제시한 금액 합계가 800억 원이므로 이들이 순차적으로 낙찰자로 결정된다. 이때 국고채의 금리는 A에게는 4.99%, B에게는 5.00%, ..., E에게는 5.05%로 각기 다르게 적용이 된다.

한편, 단일금리결정방식은 각 투자자들이 제시한 금리를 최저부터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이들이 제시한 금액이 발행 예정액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복수금리결정방식과 같다. 하지만 발행되는 국고채의 금리는 낙찰자들이 제시한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로 단일하게 결정된다는 점이 다르다. 표와 같이 낙찰자는 A~E로 결정되지만 국고채의 금리는 A~E 모두에게 5.05%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일금리결정방식은 복수금리결정 방식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일 수 있다.

하지만 단일금리결정방식은 정부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복수금리결정방식과 단일금리결정방식을 혼합한 '차등 금리결정방식'을 도입하기도 한다. ① 차등금리결정방식이란 단일금리결정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낙찰자들을 결정하지만, 낙찰자들이 제시한 금리들 중 가장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삼아 금리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화한다는 점이 다르다. 각 그룹의 간격은 0.02%p~0.03%p 정도로 정부가 결정하며, 이때 국고채의 금리는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와 관계없이 정부가 각각의 그룹에

설정한 최고 금리로 결정된다. 이는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를 그룹별로 차등화함으로써 적정 금리로 입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낸다.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경쟁 입찰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 ②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경쟁 입찰 방식을 고찰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경쟁 입찰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 ④ 통념에 반하는 사례를 들어 경쟁 입찰 방식의 원리를 도출하고 있다.
- ⑤ 경쟁 입찰 방식에 관한 대립되는 이론을 접촉하여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은 탐색하고 있다.

1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고채는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이다.
- ② 복수금리결정방식에서는 국고채의 금리가 투자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 ③ 단일금리결정방식에서는 투자가 자신이 제시한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국고채를 낙찰 받을 수 있다.
- ④ 복수금리결정방식과 단일금리결정방식 모두 투자자들이 각자 원하는 금리를 제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 ⑤ 단일금리결정방식에 비해 복수금리결정방식으로 국고채를 발행할 때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②를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우리나라는 국제 시장의 발전이 미흡했던 과거에 정부가 국고채를 금융 기관에 강제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발행했다. 국제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② 복수금리결정방식을 취해 오다 국고채의 발행을 촉진하고자 단일금리결정방식을 채택해 왔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는 차동금리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① 복수금리결정방식에서 발생한 정부의 손실을 보상하려는 계획이다.
- ② 복수금리결정방식보다 높은 금리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려는 시도이다.
- ③ 복수금리결정방식에서 발생한 투자자들의 이자 수익을 환수 하려는 방안이다.
- ④ 단일금리결정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이 제시한 금리를 차별화 하려는 조치이다.
- ⑤ 단일금리결정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이다.

12. ㉠을 <보기>에 적용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ㄱ. 발행 예정액 : 700억 원

ㄴ. 그룹화 간격 : 0.03%p

ㄷ. 입찰 결과:

투자자	제시한 금리와 금액
(a)	1.98% 100억 원
(b)	2.00% 100억 원
(c)	2.02% 200억 원
(d)	2.05% 100억 원
(e)	2.06% 200억 원
(f)	2.07% 200억 원

ㄹ. 그룹화 결과 : 2.06 ~ 2.04%, 2.03 ~ 2.01%, 2.00 ~ 1.98%

(단, 입찰 단위는 0.01%p 단위로 제시한다.)

① ①가 속한 그룹은 ②가 제시한 금리로 낙찰 받는다.

② ③와 ④는 같은 금리로 낙찰 받는다.

③ ⑤는 2.03%의 금리로 낙찰 받는다.

④ ⑥와 ⑦ 모두 2.05%의 금리로 낙찰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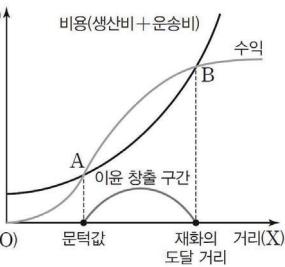
⑤ ⑧는 ⑨와 다른 그룹으로 낙찰 받는다.

5. 기타 ①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 거리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특 165p

독일의 크리스탈러는 남독일의 도시 분포를 바탕으로 도시의 규모, 입지 등에 일정한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분석해 취락이나 상업 입지의 분포가 규칙성을 지닌다는 중심지 이론을 ④ 도출하였다. 중심지란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으로서, 재화의 도달 거리와 문턱값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점포를 예로 들면 재화의 도달 거리는 운송비 제약에도 판매가 실현되는 최대한의 거리이며, 문턱값이란 최소 요구치라고도 하는데, 판매 수익이 총비용을 ⑤ 상회하기 시작하는 거리이다. 재화의 도달 거리와 문턱값은 공급자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지대를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 입장에서 이윤 공식은 '이윤=수익-(생산비+운송비)'이다. 즉 지대를 제외할 때, 이윤은 수익에서 생산비와 가격(P) 운송비의 합인 '비용'을 제외한 부분이다. 공간(거리) 외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운송비만 거리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경우, 수익은 원점에서 발생하지 않고, 중심지(O)에서 물품 판매 거리가 증가함에



〈그림 1〉

따라 수익이 증가한다면 <그림 1>과 같이 수익 비용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다만 판매 거리가 증가하면 수익은 원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비용도 0보다 큰 세로축 절편에서 시작하여 거리에 따라 증가한다. 그리하여 수익 곡선과 비용 곡선은 두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때 A점에 대응하는 거리가 문턱값, 즉 최소 요구치이고 B점에 대응하는 위치가 재화의 도달 거리로, 그래프를 통해 볼 때 이윤은 A와 B 사이에서 창출되며, 이때 중심지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인 배후지는 중심지에서 B점에 이르는 거리만큼 원형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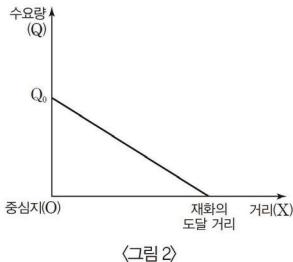
A] 수요자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수요자의 입장은 고려하여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 거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요자 입장은 고려해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 거리를 ④ 산출하려면 공간 수요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다. 공간 수요 그래프란 거리에 따른 수요량 감소 관계를 함수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수요는 상품 구매 가격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므로 수요량(Q)은 가격(P)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이를 수요 함수로 나타내면 ' $Q=Q_0-aP$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Q_0 은 공짜 수요량으로서, 가격이 0인 제품이 팔릴 수 있는 최대 수요량을, a 는 가격 증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비율인 '수요 감소율'을 의미한다. 이때 공짜 수요량은 실제 수요량과는 다르며, 점포의 위치, 유동 인구 수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수요자는 점포까지 일정한 거리를 이동해 상품을 구매한다. 이러한 구매 ④ 통행을 고려하면 실제 수요자의 상품 구매 가격은 주어진 시장 가격인 P_0 에 교통비를 더한 값이 된다. 이때 b 를 거리에 따라 수요자의 상품 구매 가격을 증가시키는 '단위 거리당

교통비', X 를 '거리'라 할 때 상품 구매 가격 P 는 ' P_0+bX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 함수에 상품 구매 가격 함수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공간 수요 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Q=Q_0-a(P_0+bX)=Q_0-aP_0-abX$$

이때 앞 항인 ' Q_0-aP_0 '은 구매 통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의 수요량인 시장 가격 수요량이다. 그리고 ab 는 거리의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율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공간 수요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은데, 그래프의 기울기는 거리의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율을 나타내는 'ab'이다. 이때 재화의 도달 거리는 공간 수요 그래프가 중심지(O)에서 재화의 도달 거리(도달 거리)에 만나는 지점이다.



〈그림 2〉

점포의 수익은 수요량과 판매 거리가 증가할수록 늘어난다.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점포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상품 구매 가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요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이윤 증가율은 감소하고 재화의 도달 거리에서 이윤의 누적값인 총이윤이 최댓값을 이루며 재화의 도달 거리를 지나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윤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때 거리만 고려한다면 점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인 '문턱값', 즉 '최소 요구치'의 범위와 재화의 도달 범위는 점포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나타난다. 만일 최소 요구치의 범위 이상의 거리에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점포는 총비용보다 수익이 많아져 이윤을 획득하는데, 점포가 유지되는 경우 재화의 도달 거리는 ④ 통상 최소 요구치보다 멀기 때문에 공간을 독점한 상황이라면 점포는 그만큼의 이윤을 획득한다.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주어진 지역의 인구 밀도나 소비 성향, 그리고 단위 교통비 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 성향이 좋아지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줄어들고, ⑦ 교통비가 낮아지면 재화의 도달 범위는 확대된다.

중심지 이론은 현실 세계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연역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이론으로, 대상 지역을 동질적 평면으로 가정하는 등 현실적 적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장 널리 알려진 공간 구조 이론으로, 공간 경제론이나 지역 분석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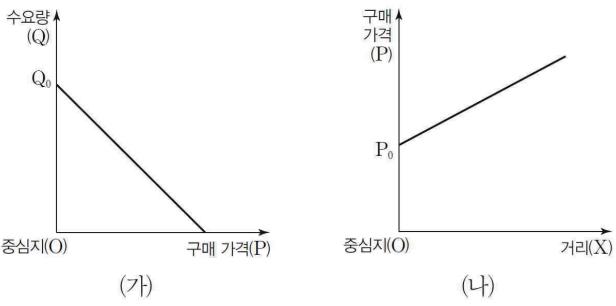
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급자 입장에서 수익이 증가하더라도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② 상품 가격이 일정할 경우 수요량은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반비례할 것이다.
- ③ 운송비와 교통비가 낮아지면 재화의 도달 거리가 확대되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윤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공급자 입장에서 재화의 도달 거리 내에서는 판매 거리가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수익과 이윤이 증가할 것이다.
- ⑤ 수요자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동해야 할 경우, 실제 수요자의 상품 구매 가격은 시장 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와 (나)를 통해 수요량, 구매 가격, 거리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가)는 구매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는 거리에 따른 구매 가격의 변화를 나타낸다.



- ① (가)에서 Q_0 은 점포의 위치, 유동 인구수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 ② (가)에서 Q_0 은 구매 가격이 0일 경우의 수요량이므로 실제 수요량과 다를 수 있다.
- ③ (나)에서 그라프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거리에 따른 수요자의 상품 구매 가격 변화 폭이 증가할 것이다.
- ④ (가)에서 구매 가격에 따른 수요량 감소 폭이 작아지면 (나)를 고려할 때, 거리에 따른 구매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 ⑤ (나)에서 다른 변수는 동일하고 P_0 이 증가하면 구매 가격이 상승하므로 (가)를 고려할 때, 수요량도 감소할 것이다.

3. 문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요량, 생산비, 운송비 중 어느 하나라도 변화하면 달라질 수 있다.
- ② 공급자 입장은 고려할 경우 점포의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 ③ 수요자들의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배후지의 수요량이 증가하면 변화할 수 있다.
- ④ 일반적으로 점포의 판매가 실현되는 최대한의 거리보다 점포에서 가까운 거리에 형성된다.
- ⑤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 거리가 증가할 때 수익 곡선과 비용 곡선이 처음 만나는 지점이다.

4.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지대(地代)는 비용의 일종으로, 지대의 수준은 주로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판매 점포가 입지하기 좋은 위치인 '목 좋은 곳'은 유동 인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이 좋아 기본적으로 수요량이 많은 곳으로, 대개 도시 중심부나 도로 교차점, 전철 환승역 같은 교통로의 결절인 경우가 많다. 접근성이 좋은 곳은 방문객이 많아 이윤을 획득하기 용이한 곳이다. 수요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점포로 이동해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점포의 이윤은 도심과 점포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고 도심과 점포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낮아져 이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지점까지 점포가 입지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이용 계약이 생긴되는 시점에서는 '목 좋은 곳'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지대가 상승하고, 결국 공급자의 수익 중 일부는 지대로 지출되고 해당 지주는 토지 소유의 대가로 지대를 통한 이윤을 축적한다.

- ① '도심과 점포의 거리'에 따라 실제 수요량이 달라져 공급자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겠군.
- ② 다른 곳보다 공짜 수요량이 많은 곳은 '목 좋은 곳'의 성격을 갖춘 곳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점포에서 거리 증가에 따라 '이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지점'은 공급자 입장에서 최소 요구치라 할 수 있겠군.
- ④ '교통로의 결절'은 점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보다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곳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공급자 입장에서 지대를 비용으로 고려할 경우,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 거리 사이에서 창출되는 이윤은 '지대'에 의해 줄어들 수 있겠군.

5.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거리에 따른 수요 감소율이 고정되고 거리당 교통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 ② 공급자의 상품 판매 거리가 증가하면 이윤과 비용이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 ③ 소비자들의 실제 상품 구매 가격이 줄어들고 구매 통행 범위도 확대되기 때문에
- ④ 수요자들의 구매 통행이 줄어들고 상품 구매 가격 증가에 따라 수요 감소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 ⑤ 상품 판매량이 증가하면 점포로부터 이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6. ①~⑤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냄.
- ② ②: 어떤 기준보다 웃돈다.
- ③ ③: 물건을 생산하여 내거나 인물·사상 따위를 냄.
- ④ ④: 일정한 장소를 지나다님.
- ⑤ ⑤: 일상적으로 또는 일상적인 경우에는.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03.(고2)

경제 활동 주체들은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입지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 ‘산업입지론’인데, 고전적인 산업입지 이론으로는 ‘최소비용입지론’과 ‘최대수요입지론’이 있다.

⑦ 최소비용입지론은 산업의 입지에 관계없이 수요는 고정되어 있고 수입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다른 비용들이 동일하다면 운송비가 최소화되는 지점이 최적 입지가 되며, 최소 운송비 지점을 바탕으로 다른 비용 요소들을 고려한다. 운송비는 원료 등 생산 투입 요소를 공장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운송비’와 생산한 제품을 시장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제품 운송비’로 구성된다. 최소비용입지론에서는 원료지수(MI)를 도입하여 사용된 원료의 무게와 생산된 제품의 무게를 따진다. 그 결과 원료 산지와 시장 중 어느 쪽으로 가까이 입지할 때 운송비가 유리해지는지를 기준으로 산업의 입지를 판단한다.

$$\text{원료지수(MI)} = \frac{\text{사용된 원료의 무게}}{\text{생산된 제품의 무게}}$$

$MI > 1$ 일 때에는 시장까지 운송해야 하는 제품의 무게에 비해 사용되는 원료의 무게가 더 큰 경우로, 공정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가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원료 산지에 가깝게 입지할수록 운송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원료 지향적 입지가 이루어진다. 반대로 $MI < 1$ 인 경우는 산지에서 운송해온 재료 외에 생산 공정 과정에서 재료가 더해져 제품의 무게가 늘어나는 경우인데, 이때는 제품 운송비의 부담이 더 크므로 시장에 가까이 입지할수록 운송비 부담이 줄게 되어 시장 지향적인 입지 선택을하게 된다. $MI = 1$ 인 경우는 원료 산지와 시장 사이 어느 지점에 입지하든 운송비에 차이는 없게 된다.

최대수요입지론은 산업입지와 상관없이 비용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이론에서는 경쟁 업체와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수요가 극대화되는 입지를 선정한다. 최초로 입지를 선정하는 업체는 시장의 어디든 입지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장의 중심에 입지한다. 그 다음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경쟁 업체는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가 변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시장을 빼기게 되므로 경쟁 업체가 있더라도 가능한 중심에 가깝게 입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하는 경우에는 두 경쟁자는 서로 적절히 떨어져 입지하여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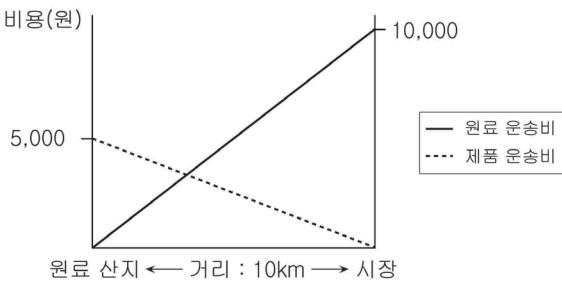
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최소비용입지론'에서는 수요는 고정되어 있고 수입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② '최소비용입지론'에서는 원료지수가 1인 경우에는 입지 지점에 따른 운송비 차이는 없다고 본다.
- ③ '최대수요입지론'은 산업 입지에 따라 비용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 ④ '최대수요입지론'에서는 경쟁 업체와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수요가 극대화되는 입지를 결정한다고 본다.
- ⑤ '최대수요입지론'에서는 최초로 입지하는 업체는 시장의 어디든 입지할 수 있지만 시장의 중심에 입지한다고 본다.

8. ⑦의 관점에서, <보기>의 'A 제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다음은 'A 제품'의 원료 산지와 시장 사이 각 지점에서의 운송비를 연결한 그래프이다. (단, 운송비는 무게에 비례하며, 운송비 이외의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① MI 지수를 계산해 보면 1보다 크다.
- ② 원료 운송비가 제품 운송비보다 크다.
- ③ 공정 과정에서 사용된 원료의 무게가 줄어든다.
- ④ 그래프의 두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윤이 최대가 된다.
- ⑤ 원료 산지에 가깝게 입지할수록 운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9. 윗글을 읽고 독자가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의 수요는 가격보다 업체의 서비스에 의해 결정되겠군.
- ② 업체끼리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상생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군.
- ③ 경제 활동 주체가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볼 수는 없겠군.
- ④ 시장의 경쟁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입지 선정이 힘들겠군.
- ⑤ 여러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최적의 입지 선택을 위해서는 거리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야 하겠군.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11.(고1)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공장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산업입지론이라 한다. 고전적 산업입지론에는 비용이나 수요 중 특정 요인 한 가지에 주목하여 가장 효율적인 입지를 설명하려는 최소비용이론과 최대수요이론이 있다. 하지만 비용과 수요 중 어느 한 요소만으로 공장의 입지를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 레이비드 스미스는 이 둘의 통합을 추구하며 준최적입지론을 제시하였다.

스미스는 자신의 이론을 총비용과 총수입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총비용이란 제품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인건비, 운송비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인 최적 입지로부터 공장의 위치가 멀어질수록 총비용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총수입이란 재화를 공급하여 생산자가 벌어들인 총액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최대화되는 지점인 최적 입지로부터 공장의 위치가 멀어질수록 총수입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총비용과 총수입을 모두 고려할 때, 총비용이 총수입보다 크면 손실이 발생하고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크면 이윤이 발생하게 되는데, 스미스는 총수입이 총비용과 ⑦ 같아서 더 이상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지점들을 이윤의 공간적 한계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공간적 한계의 범위 안쪽에서는 이윤이 최대가 되는 최적 지점이 아니더라도 이윤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공장은 어디든지 입지할 수 있다는 것이 준최적입지론의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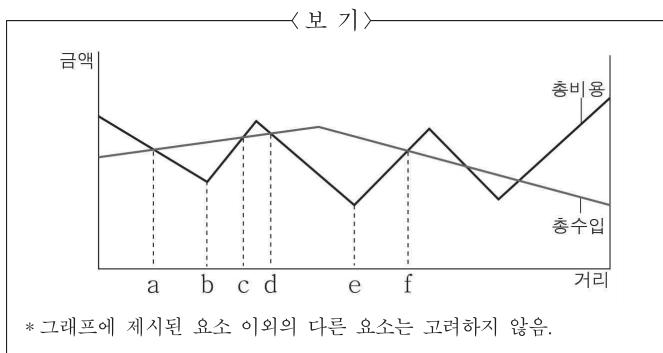
그는 이윤의 공간적 한계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요인은 경영자의 경영 수완으로, 경영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생산비를 낮춘다면 이윤의 공간적 한계는 그 전보다 넓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재정적 보조금이나 세금 등의 요인을 들었다. 공장이 보조금을 받으면 총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에 특정 지역에서 공장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면 총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공장이 입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 요인은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한곳에 모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생산 규모가 커지면 원료의 공동 구입, 제품의 공동 판매 등으로 총비용을 절감하여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결국 스미스의 이론은 비용과 수요를 통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과, 이윤의 공간적 한계 내에서 최적입지 외에도 실제로 공장이 입지해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산업입지론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10. 윗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총수입과 총비용의 개념
- ② 준최적입지론이 갖는 의의
- ③ 이윤의 공간적 한계가 변화되는 요인
- ④ 최소비용이론과 최대수요이론의 형성 과정
- ⑤ 최적 입지에서의 거리에 따른 총비용의 변화

11. <보기>는 거리에 따른 총수입과 총비용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스미스의 이론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와 c 사이 어느 곳에 공장을 세우더라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군.
- ② a에 공장을 세운다면, 이윤의 공간적 한계 지점에 공장을 세웠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d에 공장을 세운다면, c에 세웠을 때보다 총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윤이 더 적겠군.
- ④ e에 공장을 세운다면, b에 공장을 세웠을 때보다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가 더 크겠군.
- ⑤ e에 세우려던 공장을 e와 f 사이에 세우려고 할 때 f에 가까워질수록 총비용은 늘어나겠군.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구를 생산하는 A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 지역 내 공장에 추가 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전을 고민하던 A 공장은 현재와 수요가 동일한 ⑦ 지역 내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지역 자치 단체에서 공장 부지 매입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점과 가구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영자는 A 공장을 이전하면서 경영 수완을 발휘하여, 생산 비용의 5%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 ① A 공장이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추가 부담금 때문에 총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 ② A 공장이 ⑦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경영 수완을 발휘하여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 ③ A 공장이 ⑦ 지역으로 이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세금 감면을 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A 공장이 총수입이 동일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공장의 입지 범위는 달라질 것이다.
- ⑤ A 공장이 같은 업종이 밀집하는 곳으로의 이동을 결정한 것은 원료 등을 공동 구입하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13. ⑦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의 마음은 비단 같다.
- ② 그와 나는 나이가 같다.
- ③ 내 친구는 정말 학생 같은 학생이다.
- ④ 날이 더워 마음 같아서는 물에 뛰어들고 싶다.
- ⑤ 연락이 없는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11.(고2)

도시에서 업무, 상업, 주거, 공업 등 각종 기능 지역이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는 것을 ‘도시내부구조’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내부구조는 어떻게 형성될까? 20세기 전반에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동심원모델과 선형(扇形)모델이 제시되었다.

먼저 동심원모델은 1920년대 시카고를 대상으로 도시 내부 구조를 모형화한 것으로, 도시가 도심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이루며 커진다고 보았다. 즉 도심의 인접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면 점차 이곳이 과밀화되고 여기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도심 인접 지역 바깥으로 이동하게 된다. 한편 궤적한 환경을 찾아 도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부 거주자들이 더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동심원의 형태를 띤 도시가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동심원모델은 시카고만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이기 때문에 도시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인 지형, 철도, 공업 지대의 위치 등이 반영되지 않아 다른 도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대(地代)*와 교통로에 따라 도시가 도심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처럼 형성된다고 본 선형모델이 등장하게 된다. 이 모델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부채살 모양의 간선 교통로가 생기게 되면 이를 중심으로 지대가 상승하여 고급 주거 지구가, 여기에 인접하여 중급 주거 지구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철도나 수로(水路)와 같이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대규모 교통시설이 입지하는 곳에는 경공업 지구가, 그 주변은 지대가 싼 저급 주거 지구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도시 내부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이전의 두 모델로는 도시내부구조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등장한 것이 도시가 여러 개의 핵심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다핵심모델이다. 도시가 커지면서 핵심을 중심으로 여러 기능 지구가 분화하게 된다. 다핵심모델에서는 이러한 기능 지구가 다음의 4가지 양상으로 분화한다고 보았다.

첫째, 활동마다 유리한 입지 지점에 따라 분화한다. 예를 들어 교통이 편리한 지점에 도매업 지구가 입지하고, 수륙 교통 관계가 좋은 곳에 공업 지구가 입지한다. 둘째, 어떤 활동은 유리한 입지 지점의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른 지점에 입지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이나 창고업은 도심 주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넓은 토지를 필요로

[A] 하기 때문에 도심 주변은 지대가 비싸서 입지하기가 어렵다.

셋째, 동종의 활동은 집적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여 분화한다. 그래서 금융기관, 도매업, 소매업 등은 각기 일정한 장소에 집단화하여 상권을 유지하게 된다. 넷째, 상이한 활동은 집적하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 위치한다. 그래서 주택 지구는 공업 지구와, 소매업 지구는 공업 지구와 서로 분리된다.

최근에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요인을 바탕으로 도시 내부구조를 분석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들을 적용하여 도시내부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도시의 각종 기능 지역들이 배치된 질서와 논리를 규명하여 도시의 변화를 예측하고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지대(地代): 지료(地料). 지상권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그 외의 물건.

14.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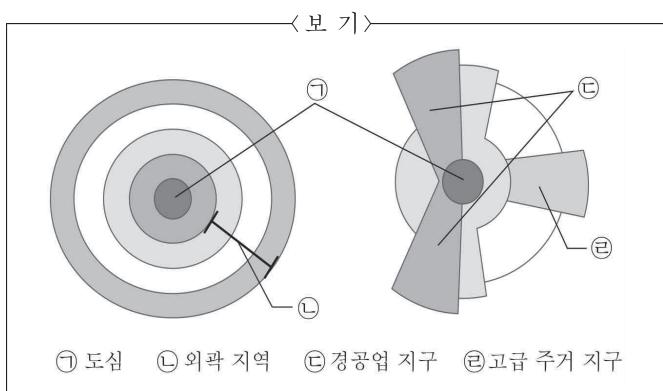
- ① 사회적 통념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유사한 개념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고 있다.
- ③ 대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④ 다양한 가설들에 대한 한계와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 ⑤ 한 이론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른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1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도시의 기능 지역은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배치된다.
- ② 다핵심모델은 도시 내부가 복잡해지면서 등장하였다.
- ③ 동심원모델은 여러 도시의 내부 구조를 분석한 모델이다.
- ④ 도시내부구조의 파악을 통해 도시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 ⑤ 선형모델은 주거 지구의 형성이 교통로의 발달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16. 윗글을 읽고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도시내부구조는 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겠군.
- ② 인구 유입과 환경 요인 등으로 ②이 형성되었겠군.
- ③ 대규모 교통 시설이 입지하는 곳에 ③이 형성되었겠군.
- ④ 간선 교통로를 중심으로 지대가 상승하여 ④이 형성되었겠군.
- ⑤ 지대가 싼 저급 주거 지구는 ⑤의 인접 지역에 형성되었겠군.

17. [A]를 통해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시의 공업 지구인 ①은 수륙 교통 관계가 좋고, 창고업이 발달한 곳에 위치해 있다.
- ○○시의 ②에는 여러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 ○○시의 ③은 도심 주변의 주택 지구이다.

- ① ①은 ③과 접적하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형성된 것이겠군.
- ② ②에 수륙 교통 관계가 좋기 때문에 공업 지구가 형성될 수 있었겠군.
- ③ ③은 창고업이 입지한 것으로 보아 도심 주변보다 낮은 지대를 지불하는 곳이겠군.
- ④ ④는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접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겠군.
- ⑤ ⑤는 도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도매업이 입지하는 것이 쉽겠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 수특.

산업 혁명 이후 19세기 유럽에서는 급속한 공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공업의 공간적 입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전통적 입지 이론을 바탕으로 공업의 입지 이론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가 베버였다. 그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공업의 입지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요인을 찾기 위해 일련의 가정을 통해 복잡한 현실 세계를 단순화시켰다. 중요한 가정으로서 그는 운송비는 거리와 중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며, 운송 수단은 동일하다고 ① 언겼다. 이런 가정하에서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최소 비용으로 생산을 하려 할 것인데, 이렇게 생산 비용이 최소가 되는 장소가 최적의 입지가 된다는 것이다.

베버는 생산비를 운송비, 노동비, 원료비, 동력비 등으로 구분하였다. 공장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석탄이나 석유 등을 통해 얻어지는데, 동력을 얻기 위한 비용이 동력비이다. 동력비와 물품의 원료비는 생산지 가격이 같을 경우 공장까지의 운송비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으므로, 베버는 장소에 따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비용을 운송비라고 보았다. 따라서 베버는 운송비를 입지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아, 원료를 수집하고 최종 상품을 소비자까지 이동하는 데 ② 드는 총운송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지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의 모델은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한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입지 이론의 개념적 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제외한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입지 선정의 요인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베버가 주창한 공업 입지의 최소 비용 이론을 비판하며 수요의 영향을 공업 입지 결정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입지를 설명한 학자가 퇴슈이다. 그는 최대 수요 이론을 통해 수요가 최대인 지점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입지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최적의 입지는 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여 최대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최소 비용 이론이나 최대 수요 이론은 모두 비용과 수요 중 어느 한 요소에 초점을 맞춰 공장의 입지를 설명하였기에 수요와 비용이 공간적으로 변하는 현실 상황에서 최적 입지를 찾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미스는 총수익과 총생산비가 일치되는 지점, 즉 이윤이 0이 되는 지점이 여러 곳에서 발생된다는 사실을 ③ 해아려 좀 더 현실적으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윤이 0인 지점을 이윤의 공간적 한계라 할 때 이윤의 극대 지점에서 이윤의 공간적 한계 지역이 입지가 가능한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윤의 공간적 한계 개념은 베버나 퇴슈의 입지 이론과 달리 공간적 한계 구역 내에 공장이 입지할 수 있다는 준최적 형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베버, 퇴슈, 스미스가 공업의 입지를 중심으로 입지 이론을 전개했다면 호텔링은 이를 확장하여 기업이나 상업 시설의 입지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호텔링은 비용이나 수요뿐만 아니라 여러 입지 인자를 고찰하여 입지를

설명하였는데, 이것이 입지 상호 의존 이론이다. 입지 상호 의존 이론에 따르면 한 기업의 입지 결정이 다른 경쟁 기업의 입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공간적 상호 의존 관계가 발생하며, 이러한 관계는 동일한 비용 구조를 갖는 경쟁 기업들이 시장에서 공간적 위치를 점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업의 공간 배치에 영향을 준다.

이 이론은 공업 입지의 분석에서 가변 비용보다는 가변 수익 분석에 초점을 둔 시각으로, 호텔링은 단순화를 위해 일직선상의 시장에 고르게 ④ 퍼져 있는 고객을 상대로 동일한 재화를 공급하며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기업의 입지 결정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직선으로 뻗은 해변 길을 따라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두 가게를 사례로 들었다. 아이스크림 가게까지의 거리만이 구매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며, 모든 고객은 같은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게에서 구입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고객이 직선으로 뻗은 해변 길 위에 고루 퍼져 있으며, 두 가게가 100m 길이의 해변에 위치해 있다. 이때 고객들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면서 두 가게가 동일한 판매량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⑤ 해변의 양쪽 끝에서 각각 25m씩 이동한 거리에 가게를 입지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한쪽 가게가 상대방 가게 쪽으로 이동을 하면 판매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다른 가게는 판매량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판매량이 줄어든 가게 역시 상대방 가게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결국 두 가게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⑥ 해변 정중앙에 나란히 입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해변의 양쪽 끝에 위치한 고객 중 일부는 너무 멀리 걸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때문에 두 가게 모두 매출이 ⑦ 줄어들 수 있다.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입지 결정 요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입지 결정 이론을 각 이론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 ③ 입지 결정의 일반적 원칙을 설명한 후 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입지 결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한 후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⑤ 입지 결정에 대한 한 학자의 견해가 후세의 학자들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그 의의를 부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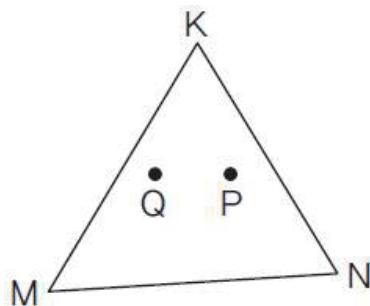
19. ‘호텔링’의 견해를 바탕으로 할 때,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 때 해변의 어떤 위치에 있는 고객이라도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25m를 초과하여 걷지 않아도 된다.
- ② ㉡은 두 가게의 경쟁으로 인해 지리적 시장 분할이 파괴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두 가게의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차이가 발생한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자신의 가게의 위치를 상대 가게 쪽으로 옮김으로써 고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⑤ 고객의 이동 거리에 따라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면 두 가게의 아이스크림의 총판매량은 ㉠ 이 ㉡보다 크다.

20.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 기업은 원료 m과 n을 사용하여 가구를 만들고 있다. 원료 m의 산지는 M, 원료 n의 산지는 N만 있으며, A 기업이 만든 가구를 소비하는 시장은 K에 형성되어 있다. K는 지대(땅값)가 높아서 공장임지로 부적합한 상황에서 A 기업은 원료와 완제품의 운송비의 합이 가장 적게 드는 P와 소비자들이 직접 공장을 방문하여 A 기업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을 보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교통 중심지 Q 중 어느 곳에 공장을 입지시킬지 고민하고 있다.



- ① 공장이 Q에 있을 때 소비 수요가 최대라면 퇴슈는 Q가 공장의 최적의 입지 지점이라고 보겠군.
- ② 스미스의 이론에 따르면 A 기업이 공장의 입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이윤의 공간적 한계 지점은 여러 곳일 수 있겠군.
- ③ 베버는 원료 m, n의 운송비와 완제품의 운송비의 합이 최소인 지점 P에 공장을 입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군.
- ④ 베버에 따르면 무거운 가구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면 P에, 가벼운 가구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면 Q에 위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겠군.
- ⑤ 스미스는 Q에 공장을 입지시키는 것이 P에 입지할 때보다 원료와 완제품의 운송비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더 많은 이윤이 생긴다면 Q에 공장을 입지시키려 하겠군.

21. 문맥상 ①~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간주(看做)했다.
- ② ⓑ: 소요(所要)되는
- ③ ⓒ: 고안(考案)하여
- ④ ⓓ: 분포(分布)한
- ⑤ ⓔ: 축소(縮小)될

1. 정부의 개입											
① 조세의 목표와 조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3)	2	(5)	3	(1)	4	(4)	5	(5)	6	(1)
7	(2)	8	(3)	9	(2)	10	(5)	11	(3)	12	(4)
13	(1)	14	(5)	15	(5)	16	(3)	17	(2)	18	(1)
19	(1)	20	(3)	21	(5)	22	(1)	23	(1)	24	(3)
25	(5)										
② 빈곤의 기준과 조세 제도를 활용한 부의 재분배 정책											
1	(2)	2	(3)	3	(3)	4	(1)	5	(5)	6	(1)
7	(1)	8	(2)	9	(2)	10	(1)	11	(5)	12	(4)
③ 시장 집중도 지표											
1	(3)	2	(5)	3	(a): 2600, 고집중, (b): 승인하지 않을						
4	(2)	5	(4)	6	(2)	7	(4)	8	(5)	9	(3)
10	(2)	11	(1)	12	(2)	13	(1)	14	(5)	15	(5)
16	(5)	17	(2)	18	(4)						
④ (가) 시장 실패의 원인인 외부 효과											
(나) 공공재의 특징과 시장 실패											
1	(3)	2	(5)	3	(5)	4	(4)	5	(5)	6	(1)
7	(2)	8	(1)	9	(5)	10	(4)	11	(1)	12	(4)
13	(5)	14	(3)	15	(1)	16	(2)	17	(4)	18	(4)
19	(3)	20	(4)	21	(2)	22	(5)	23	(2)	24	(5)
25	(2)	26	(2)	27	(4)	28	(4)	29	(4)	30	(1)

3. 대공황의 원인과 대처 방안											
① 대공황의 원인과 경제 정책											
1	(1)	2	(3)	3	(3)	4	(3)	5	(4)	6	(2)
7	(3)	8	(1)	9	(5)	10	(3)	11	(4)	12	(1)
13	(5)	14	(3)								
② 전통적인 신용 증가와 그림자 금융											
1	(1)	2	(5)	3	(5)	4	(5)	5	(2)	6	(4)
7	(2)	8	(3)	9	(1)	10	(5)	11	(1)	12	(1)
13	(5)	14	(5)	15	(5)	16	(2)				
4. 투자와 금융 상품											
① 이익률과 레버리지 효과											
1	(4)	2	(3)	3	(2)	4	(5)	5	(4)	6	(1)
7	(4)	8	(3)	9	(3)	10	(4)	11	(3)	12	(4)
13	(2)	14	(2)	15	(1)	16	(3)	17	(4)	18	(5)
19	(5)	20	(3)								
② 채권의 발행 및 가격 결정 방식											
1	(2)	2	(5)	3	(2)	4	(4)	5	(2)	6	(3)
7	(4)	8	(3)	9	(1)	10	(5)	11	(2)	12	(3)

2. 환율과 국제 수지											
① 국제 수지의 이해와 활용											
1	(3)	2	(5)	3	(3)	4	(4)	5	(4)		
② 환율 모형과 작동 원리											
1	(5)	2	(1)	3	(5)	4	(1)	5	(4)	6	(5)
7	(2)	8	(1)	9	(2)	10	(2)	11	(3)	12	(1)
13	(5)	14	(1)	15	(4)	16	(3)	17	(2)	18	(2)
19	(5)	20	(5)	21	(4)	22	(1)	23	(5)	24	(2)

5. 기타											
①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 거리											
1	(4)	2	(4)	3	(2)	4	(3)	5	(3)	6	(3)
7	(3)	8	(4)	9	(5)	10	(4)	11	(3)	12	(2)
13	(2)	14	(3)	15	(3)	16	(5)	17	(5)	18	(1)
19	(3)	20	(4)	21	(3)						